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www.krei.re.kr

우병준 | 임소영 | 이두영 | 이형용 | 한보현

연구 담당

우병준 | 연구위원 | 제1~4, 7장 집필, 연구 총괄

임소영 | 부연구위원 | 제5장 집필

이두영 | 부연구위원 | 제6장 집필

이형용 | 연구원 | 제2, 3장 집필

한보현 | 연구원 | 제3, 4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R838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디엔비크리에이티브

ISBN | 979-11-6149-165-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 리 말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의 내용과 지원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수립과 목적 달성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조사 주체와 조사 목적, 조사 대상과 수집 방식 등이 각기 달라서 이들을 모두 이용한 종합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을 지원하는 통합적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와 관련한 주요 지표 및 내용의 정기적·체계적·종합적인 분석 수행을 효과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농업경영체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류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와 통계들을 활용하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객관적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및 관련 농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한국 농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농업경영체 연구 동향과 분석틀 검토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관련 주요 주제별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좀 더 정교한 농업경영체 분석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분석틀을 점검하였다. 과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농업경영체의 소득 문제를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시장 개방 이후 자본투자 확대에 따른 농가의 규모 확대와 농업경영체 숫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부채나 자산규모에 기초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실태 및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양한 성격의 농업경영체와 그들의 경영행태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유형별 구분과 이에 기초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EU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의 성격(규모)과 수입을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 수립 및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계수집 및 분석 단계에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준이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 개발 및 활용한 분석틀이 존재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분석틀이 표준영농규모인데,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하여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도 표준영농규모 환산을 유형화 분석틀로 적용한다.

농업경영체 실태 및 현황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농업법인제도는 UR 협상 농업대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모두 의미한다. 농업경영체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농업·농촌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것만 해당되어 정확하게 전체 현황을 보이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속해서 증가하던 농가소득은 2016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농업소득이 1,126만 원에서 1,007만 원으로 10.6%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1년부터 30%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농외소득의 비중과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농가소득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농가 총부채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9세 이하 젊은 경영주들이 자산취득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연령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농가 유형별 주요 지표 변화

표준영농규모에 기초한 농가 유형화를 위해 이 연구는 2008~2016년 기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농가의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총 144개 구간으로 농가들을 세분화한 후, 최종적으로는 9개의 농가 유형을 설정하였다. 9개 농가 유형은 3개 연령층(40세 이하, 41세 이상~64세 이하, 65세 이상)과 3개 표준영농규모(0.5ha 미만, 0.5ha 이상~2ha 미만, 2ha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9개 유형 중 ‘65세 이상+0.5ha 이상~2ha 미만’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65세 이상+0.5ha 미만’ 유형의 연평균 증가율은 8.35%로 가장 높아 고령 소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 실태의 경우 동일한 표준영농규모의 경우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낮으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한다. 자산의 경우 고령 그룹의 경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자산규모도 함께 증가하나, 중장년 대농의 경우 농업용 자산의 경우 자산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부채의 경우 대부분 영농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 소농의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연구는 대동물을 고정자산, 소동물을 유동자산으로 확일적으로 구분하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집계방식을 그대로 표준영농규모 산출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농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 쌀 변동 직접지불금의 지원 체계가 수입보장보험 등과 같은 다른 형태로 변경될 경우, 농가소득 구성원천의 상대적 비중이 바뀔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가 소득변동성 분석

변이계수와 황의식(2004)의 지표를 이용하여 2007년 이후의 농가소득의 변동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령 영세농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높은 소득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영세농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없기에,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계속 확대되면 농촌 지역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 하락과 소득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고령 영세농 소득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농업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영농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소득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중요성은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클 수 있다.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에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나누고 각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바탕으로 농가를 분류하고 소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농가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나 농지원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농가 소득불평등도 분석

소득변동성은 소득불평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득변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의 소득불평등과 소득변동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농가 소득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울프슨(Wolfson) 지수, 피케티적 접근(Piketty's approach) 세 가지 불평등도 지수를 이용하였고, 불평등 요인분석을 위해 소득원천별, 경영주 연령별, 표준영농규모별로 지니계수에의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농가의 평균 소득이 도시가구소득보다 낮은 상태에서 불평등도까지 높다는 것은 저소득 농가의 소득 증대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케티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농가의 소득 및 자산 계층별 불평등도는 전체 경제보다 작고 불평등도의 큰 변화가 없어 농가 경제에 있어서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경제에서 농가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도가 지니계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완화를 위해 단순히 농업소득만 고려한 소득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영주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 결과, 고령농가의 소득 불평등도 기여 정도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높고 그 수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업의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소득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표준영농규모가 큰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소규모 농가보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의 분석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소규모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경우(즉, 농업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불평등도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An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in Korea 2017

Review of the Trend in Research on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and of Analytical Frameworks

This study reviewed past research by major topic related to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classified them for closer analysis, and examined analytical frameworks.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issue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income. However, given the growth of the farm size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due to the expansion of capital investment since market opening, it is needed to continue researching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based on the size of debts or assets, the stability issue and so on.

A concrete analysis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heir management behavior requires the classification of types that can represent Korea's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and a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the classification. In the US and the EU, the types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are classifi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size) and revenue, and standards by type are applied in collecting and analyzing relevant statistics that are utilized in establishing and analyzing policies.

In Korea, there is no standard for classifying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that is used in collecting and analyzing statistics, and some studies have developed and utilized analytical frameworks.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analytical framework is the standard farm size. By calculating the standard farm size, farm household types are classified, and each type'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is study also applies converting into the standard farm size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classification.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mean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began as one of the agricultur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gricultural corporations include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The data on agricultural holding registration, opera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ow the current state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Nevertheless, the data cannot show the entire present situation exactly in that they only include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that voluntarily registered relevant information to receive loans and subsidi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s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farm household income, which had grown continuously, decreased in 2016, because agricultural income fell by 10.6% from KRW 11.26 million to KRW 10.07 million.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income in farm household income has declined below 30% since 2011. The continued growth of the proportion and size of nonfarm income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ies related to farm household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the farm management status seems to have improved, as the total debt of farm households has decreased since 2014, while their total assets have increased continually. Nonetheless, the debt size of young farm operators under 40 years old is also growing in the process of acquiring assets. Therefore,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to stabilize farm management of this age group.

Changes in Major Indicators by Farm Household Type

To classify farm households based on the standard farm size, this study utilized microdata from Statistics Korea's 2008-2016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On the basis of households' standard farm sizes calculated from the data and farm operators' age, we divided farm households into 144 categories, and finally set nine types of farm households. The nine types consist of a combination of three age groups (40 years old and under, 41-64 years old, 65 years old and over) and three standard farm sizes

(under 0.5 ha, 0.5 ha to under 2 ha, 2 ha and over).

Among the nine types, the type of “65 years old and over + 0.5 ha to under 2 ha” accounts for 38.7%, the highest proportion. Particularly, the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the type of “65 years old and over + under 0.5 ha” was the highest (8.35%), which indicates that the proportion of old small farmers has grown relatively fast.

As for the income by farm household type, in case of the same standard farm size, the older farm operators are, the lower their income is. And the larger the standard farm size is, the higher farm household income is. In the group of old farmers, the larger their standard farm size is, the bigger their asset size is. Nevertheless, an increase in middle-aged large farmers’ assets for agriculture is stagnant. Although debts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farm size in most cases, middle-aged small farmers are different.

This study pointed out limits of using microdata and problems that can occur when the counting method of Statistics Korea's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which uniformly classifies large animals as fixed assets and small animals as current assets, is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farm size. Also,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at the relative proportion of farm household income sources can change if the support system of rice variable direct payments, which are currently classified as agricultural income, changes into another form such as revenue protection insurance etc.

Analysis of Farm Household Income Volatility

We examined the trends in farm household income volatility after 2007 by employ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indicators of Hwang Euisik (2004). The results show that old small farmers experience higher income volatility than other groups do. Because old small farmers do not have a relatively stable income base, a decrease in the overall income level in rural areas and the growth of income volatility are expected, if aging in rural areas expands continually. In particular, as for old small farmers’ income, because its dependence level on agriculture is very low, support through agricultural subsidies is judged not to be helpful practically to the far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ncome-based welfare support services including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suppor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households with a larger farm size show higher income volatility. The reason seems to be that a higher level of dependence on agriculture leads to higher farm household income volatility, as agriculture is much affect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Accordingly, policies for stabilizing farm household income, including the direct payment program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can be more important for large farms.

The cause and effect of farm household income volatility differ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Therefore, to effectively support stabilizing farm household income, it is necessary to divide groups that need support and utilize approaches suitable to each group.

In the long term, it is needed to classify farm households based on income and provide support customized to the income. At present, however, there are no data to objectively prove farm household income. Thus, it is required to consider a method that classifies groups to be supported by using data on agricultural holding registration, farmland registers and so forth.

Analysis of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come volati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ome inequality level.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n increase in income volatility can contribute to expanding income inequality. To concrete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volatility,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For this, we utilized three indices of the inequality level such as Gini's coefficient, the Wolfson index, and Piketty's approach by using Statistics Korea's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and calculated the contribution level to Gini's coefficient by income source, farm operator's age, and standard farm size to analyze inequa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income inequality level of farm households is high, even when it is compared with that of urban households.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is lower than that of urban households, and the income inequality level of farm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of urban households. This shows the need for policies to enhance low-income farm households' income. In terms of Piketty's approach, as

the inequality level of farm households by income and asset bracket is lower compared to the entire economy and the inequality level has not changed much, it is judged that a big structural change in the farm household economy is not occurring. Nonetheless, this result can stem from the relatively small scale of the farm household economy in the entire economy.

The analysis result of the contribution level to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by source shows that the inequality level of agricultural and nonfarm income most affects an increase in Gini's coefficient. Therefore, income stabilization policies that simply consider agricultural income have limits in alleviating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level to Gini's coefficient by the farm operator's age, the contribution level of old farmers to the income inequality level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and the level is increasing continuously. Given the continued aging of agriculture, the result indicates the need to systematically manage old farmers' income.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level to Gini's coefficient by standard farm size shows that the income inequality level of larger standard farm sizes is higher than that of small farms.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above-mentioned analysis, indicating that if small farms expand their farm size (that is, if their dependence level on agricultural income increases),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can also rise, with an increase in income instability.

Researchers: Woo Byungjoon, Lim Soyeong, Lee Douyoung,

Lee Hyungyong, Han Bohyun

Research period: 2017. 8. ~ 2017. 12.

E-mail address: bjwoo@krei.re.kr

차례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대상과 범위 2
-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2장 농업경영체 연구 동향 및 분석틀 검토

- 1. 농업경영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5
- 2. 농업경영체 분석틀 검토 20
- 3.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 연계방안 검토 24

제3장 농업경영체 실태 및 현황

- 1. 농업경영체 일반 현황 33
- 2. 농가소득 실태와 동향 39
- 3. 농가 자산 및 부채 동향 48
- 4. 시사점 및 제언 59

제4장 농가 유형별 주요 지표 변화

- 1. 농가 유형별 분포 형태 63
- 2.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자산·부채 실태 70
- 3. 농가 유형별 주요 특성 변화 84
- 4. 시사점 89

제5장 농가 소득변동성 분석

- 1. 분석 필요성과 목적 95
- 2. 소득변동 관련 연구 동향 96

3. 소득변동성 지표 검토	99
4. 분석 결과	104
5. 결론	118

제6장 농가 소득불평등도 분석

1. 분석 필요성과 목적	121
2. 선행연구	122
3.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23
4. 분석 결과	126
5. 결론	136

제7장 결론 및 추후 연구 제언

1. 요약 및 결론	139
2. 추후 연구 제언	144

부록

1. 선행연구	147
2. 농가경제조사 항목과 구조(통계청 정의)	173

참고문헌	177
------------	-----

표 차례

제2장

<표 2-1>	2000년 이후 농업경영체 실태 관련 선행연구	6
<표 2-2>	농가소득 관련 선행연구의 자료 및 주요 분석 방법	13
<표 2-3>	미국의 농가 유형 구분	21
<표 2-4>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 통계청 주요 통계 조사항목 비교 ..	29

제3장

<표 3-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34
<표 3-2>	농업법인별 법인 운영 현황(2016년 기준)	35
<표 3-3>	농업법인 재배면적 규모 추이	36
<표 3-4>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36
<표 3-5>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서의 농가 및 농업인 현황	37
<표 3-6>	농가소득 동향	40
<표 3-7>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추이	41
<표 3-8>	농가의 농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추이	42
<표 3-9>	경지규모별 농가소득(명목) 추이	44
<표 3-10>	연령별 농가소득(명목) 추이	45
<표 3-1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명목) 추이	46
<표 3-12>	영농형태별 농업소득(명목) 추이	46
<표 3-13>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 및 농업소득 비중 추이 ..	48
<표 3-14>	연도별 농가 총자산 및 총부채 추이	49
<표 3-15>	농가 자산 유형별 추이	49
<표 3-16>	농가 유동자산별 추이	50
<표 3-17>	농가 유형자산 변화 추이	51
<표 3-18>	농가 부채 유형별 추이	52

<표 3-19> 농가 용도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53
<표 3-20> 전·겸업 농가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54
<표 3-21> 주·부업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55
<표 3-22> 영농형태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56
<표 3-23> 경지규모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57
<표 3-24> 경영주 연령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59

제4장

<표 4-1> 표준영농규모-연령에 따른 농가 비중(2016년)	65
<표 4-2>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구분 내용	66
<표 4-3>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 추이	67
<표 4-4> 표준영농규모별 농가 비중 추이	67
<표 4-5> 유형별 농가 수 및 비중	68
<표 4-6> 농가 유형 및 영농형태별 농가 비중 변화	69
<표 4-7>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	70
<표 4-8> 농가 유형별 경상소득 구성 변화	71
<표 4-9> 농가 유형별 총자산 및 총부채 변화	73
<표 4-10> 농가 유형별 고정자산 현황	74
<표 4-11> 농가 유형별 유형자산 및 유동자산 변화	75
<표 4-12> 농가 유형별 유형자산 내역 변화	76
<표 4-13> 농가 유형별 유동자산 내역 변화	78
<표 4-14> 농가 유형별 용도별 자산 변화	80
<표 4-15> 농가 유형별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추이	81
<표 4-16> 농가 유형별 용도별 부채 변화	82
<표 4-17> 농가 유형별 영농형태 변화	85
<표 4-18> 농가 유형별 전·겸업 형태 변화	86
<표 4-19> 농가 유형별 주·부업 형태 변화	88
<표 4-20> 축종별 자산 구분 기준 재설정	90
<표 4-21> 축종별 자산 구분 적용한 유형별 농가 비중	91

<표 4-22> 농업소득피해보상금 반영에 따른 이전소득 변화(2016년 기준) ..	93
<표 4-23> 농업소득피해보상금 반영에 따른 논벼 및 축산농가 이전소득 변화	94

제5장

<표 5-1> 2008~2012년, 2013~2016년의 소득변동성 비교	104
<표 5-2> 2008~2012년, 2013~2016년의 농산물 관련 물가 변동 비교 ..	106
<표 5-3> 농가 소득원천별·기간별 변이계수	107
<표 5-4> 소득계층별 소득변동성 추이	108
<표 5-5> 영농규모별 소득변동성 추이	110
<표 5-6> 소득계층의 원천별 비중, 경지규모, 경영주 연령	111
<표 5-7> 연령별 소득변동성 지표	113
<표 5-8> 경영주 연령별·영농규모별 소득변동성 추이	115
<표 5-9> 소득변동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117

제6장

<표 6-1> 2008~2016년 농가소득 지니계수 추정치	127
<표 6-2> 2008~2016년 농가소득 율프슨지수 추정치	127
<표 6-3>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피케티적 접근 결과	128
<표 6-4> 자산 및 소득 상위 10% 농가의 주요 특성	129
<표 6-5> 농가소득 원천별 지니계수 기여도	131
<표 6-6> 농가소득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133
<표 6-7> 농가소득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135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농가소득 추이	40
<그림 3-2>	농가의 가계지출 및 농가경제잉여 추이	43
<그림 3-3>	농가 이전소득(명목) 추이	43
<그림 3-4>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가(2인 이상) 소득 추이	47
<그림 3-5>	자산 유형별 부채 비중 추이	50
<그림 3-6>	농가 용도별 자산 및 부채 비중 추이	53

제4장

<그림 4-1>	연령별 농가 수 추이	64
<그림 4-2>	영농규모별 농가 수 추이	64

제5장

<그림 5-1>	농가소득 변동 예	100
<그림 5-2>	SDPAC로 나타난 농가소득 변동성 추이	10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강조되면서 농업 분야도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내용과 지원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가공·분석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정부의 정책집행 이후 그 효과와 목적달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정책 수립과 목적달성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들은 여럿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주체와 조사 목적, 조사 대상과 수집방식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용도를 위한 제한적인 사용만이 가능하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자료와 통계들을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지원을 하는 통합적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농업경영체 관련한 주요 지표 및 내용의 정기적·체계적·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석틀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특히 농가경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상당수 연구가 정부의 단기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거나 개별 연구

2 서론

자의 비연속적 학술적 접근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농업경영체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방법론과 이용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미래 연구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농업경영체 관련 자료와 통계들을 이용하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객관적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농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대상과 범위

이 연구는 사전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주된 연구 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핵심 활동 주체인 농업경영체이다. 농업경영체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농가는 가구(household)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1개의 농가에 다수의 농업경영체가 존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농업 활동의 주체인 농업인은 주로 농가를 의미하고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작물재배업 중심의 농업소득에 의존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대부분이 농가가 경영하는 농지에서 발생했기에, 농업 주체(또는 농업인)의 경제적 성과(performance) 분석은 농가가 주된 대상이었다.

현재는 다양한 농업경영 유형이 발생하였고 이에 맞춘 개별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농업정책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경영체로 확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농업경영체가 기본적인 분석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단위의 통계와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통계와 자료를 이용한 심층분석은 농가 단위로 분석을 하고,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과 관련해서는 심층분석보다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연계방안

과 관련 선행연구 중심으로 미래 접근 방향을 정리한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 범위는 농업경영체의 일반적인 현황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변화 내용, 경영체 소득문제와 관련한 심층 분석 등이다. 이는 사전연구라는 성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추후 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에도 소비(지출) 또는 생산성 향상 등의 다양한 양적 지표와 함께 새로운 자료 발굴과 지표 개발을 통해 농업경영체 구조변화에 대한 심층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으로 첫 번째는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구조와 경영 활동 내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이용 자료 등을 정리하여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선행연구 정리 외에 농업경영체 연구를 위한 분석틀과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즉, 분석대상의 유형화 방식과 표준영농규모 개념의 적용을 검토하고, 농업경영체 관련 자료별로 주요 특징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체의 일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실태를 살펴본다. 또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최근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제3장에 소개한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하던 농가의 유형별 접근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1983년부터 학계에서 사용한 표준영농규모 방식을 적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소득·자산·부채 등의 농가 유형별 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 연구에

4 서론

서의 농가 유형화 방식은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활용하여 총 9개 그룹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존의 표준영농규모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안적 접근도 함께 모색한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현황 파악과 분석틀 검토로 그치지 않고 농업경영체 소득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다. 구체적으로 제5장은 농가소득 불평등도, 제6장은 농가소득 불안정성 문제를 다룬다. 제7장은 연구 내용 요약과 함께 추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관련한 다양한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청 등 각종 기관에서 작성·공표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특히 심도 있는 다각적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황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농업경영체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농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분석틀로서의 농가 유형화 및 표준영농 규모 설정 문제, 정보연계 차원에서의 필요 자료 및 통계의 특징 등을 함께 검토한다.

1. 농업경영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선행연구가 농가 경제와 농업경영체 문제를 다루어왔고, 관련 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시대적 상황과 농업 구조에 따라 변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동안 생산 및 경영 측면에서 한국 농업 구조의 고령화, 양극화, 규모화, 겸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도 이들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2-1>. 이 절에서는 농업경영체와 관련하여 기존에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주요 주제별로 살펴본다.

6 농업경영체 연구 동향 및 분석틀 검토

〈표 2-1〉 2000년 이후 농업경영체 실태 관련 선행연구

주요 주제	선행연구
농업 및 농가 구조	강혜정(2005), 강혜정(2008), 박민선(2008), 김경덕 외(2012), 김미복 외(2014), 황의식 외(2016)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이태호(2008), 강혜정(2013), 조가옥 외(2015), 권오상 외(2015), 황의식 외(2016)
농업 고용인력	신황호 외(2013), 신황호 외(2015), 이항미(2016)
농가소득 변동성	황의식 외(2003), 황의식(2004), 황의식 외(2005), 전지연 외(2016), 황의식 외(2006)
소득불평등	이병기(2000), 김성용(2004a), 김성용(2004b), 박준기 외(2004), 안동환(2004), 이은우(2006), 김태이 외(2012), 오내원 외(2013), 윤영석 외(2013), 김규섭 외(2014), 고갑석 외(2016)
소득 양극화	강혜정 외(2008), 전장수 외(2008), 정진화 외(2012), 정진화 외(2013)
농가 빈곤	최세현 외(2007), 이은우(2007), 강성호 외(2011), 강혜정(2015)
농가소득 구조 및 결정요인	오내원 외(2001a), 오내원 외(2001b), 이병기(2005), 최재혁 외(2005), 김제안 외(2009), 김재경 외(2011), 권오상 외(2013a), 권오상 외(2013b), 박종훈 외(2014), 황재희 외(2016), 김동신 외(2016), 김미복 외(2016), 황영모 외(2016), 임소영(2017)
농가소득 기타	권오상 외(2008), 김재경 외(2011), 김재경(2013)
소비·지출	이계임 외(2003), 김성용 외(2002), 김성용 외(2003), 김기환 외(2008), 정선화 외(2015)
농가 부채	황의식 외(2000), 정안성 외(2000a), 정안성 외(2000b), 박성재 외(2003), 황의식 외(2003, 2005)
농가 유형화	김수석 외(2006), 김정호 외(2006), 강혜정(2007)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활용	오내원 외(2006), 김한호 외(2012), 김수석(2013a), 김수석 외(2013), 김수석(2013b), 김수석(2013c), 윤성은 외(2013), 김한호 외(2015), 김정호 외(2015c), 한석호 외(2016)
농업법인	김수석(2007), 박규동(2013), 김정호 외(2015a), 김정호 외(2015b), 서종석 외(2017)
기타	김정호 외(2005), 김정섭 외(2016)

1.1. 농업 구조 및 생산

1.1.1. 농업 구조

한국 농업구조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박민선(2008), 김경덕 외(2012), 김미복 외(2014), 황의식 외(2016) 등이 있다. 박민선(2008)은 2005년도 농업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징인 ‘가족 자작적, 영세 소농적 농업구조’라는 관점에서 농가 변화, 농가의 농지 소유 및 이용, 농업경영, 농업 기계화, 생산의 조직화와 판매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김경덕

외(2012)는 2000, 2005, 2010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한국 농업의 생산 및 경영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농업의 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규명하였다. 김미복 외(2014)는 농업총조사 자료(2000년, 2010년)를 활용하여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변화상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황의식 외(2016)는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농산물과 농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황의식 외(2016)는 중간규모(0.5~2.5ha) 농가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규모화된 농가 증가가 정체되며, 75세 이상의 농가 수가 크게 증가하여 농업 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1.2. 농업 생산

이태호(2008)는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 변수인 규모와 작목에 따라 변화하는 농가의 요소 생산성과 생산효율성의 분포를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강혜정(2013)은 ‘농가경제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쌀과 쌀 이외 작목을 함께 생산하는 복합영농 농가의 범위의 경제성과 영농 다각화 정도에 따른 생산효율성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권오상 외(2015)는 농업부문 투입 및 산출 지수를 구축하고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특히, 권오상 외(2015)는 농업소득과 더불어 농업 생산성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인식을 계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조가옥 외(2015)는 농업회사법인들 가운데 농축산물을 유통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의식 외(2016)는 미곡, 두류, 서류, 채소, 과일, 축산물 등 품목별 생산, 자산, 노동투입 등을 추계하고, 성장회계방식으로 한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농업부문 고용 인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신황호 외(2013, 2015)는 농업 경영주의 일반적 특성, 경영상의 특징 등을 이용해 농업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영농형태별 농업 고용인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

항미(2016)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농가의 노동력 고용 결정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강혜정(2005)은 1998~2002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패널을 이용해 농가 및 경영주의 특징이 농업생산 복합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강혜정(2008)은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영농승계자 확보 및 육성 방안 과제를 제안하였다. 윤성은 외(2013)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농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 양상과 특징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았다.

1.2. 소득 및 소비·지출

1.2.1. 소득 변동성

황의식 외(2003, 2005), 황의식(2004)은 ‘평균-분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 변동 유형과 농가 경영 특성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 및 불안정 실태와 농가경제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농가의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가 고령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연 외(2016)는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논벼와 양념채소 생산 농가의 농업소득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논벼는 경영비 변동 영향이 다른 품목보다 현격하게 크고, 조미채소는 가격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논벼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조미채소의 경우에는 수급안정사업 고도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1.2.2. 소득불평등

농가소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지속해서 다루고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Gini 계수, Theil 지수, 일반적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지수, Atkinson 지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대수 편차 평균(mean log deviation), 로그 분산(variance of logarithms) 등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별 분해와 기여도 측정이 용이한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계열 지수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병기(2000)는 IMF 경제위기 전후 기간의 그룹 간, 그룹 내 농가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농가소득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김성용(2004a, 2004b)은 1991~2002년의 농가소득 불평등을 연령별·경영규모별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엔트로피 지수와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농가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박준기 외(2004)는 1998~2002년의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방법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원, 경영주 연령, 영농규모 등 요인별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동환(2004)은 1990, 1995, 2000년의 농가경제조사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은우(2006)는 농가의 소득결정함수(income determination function)를 추정하고 영농형태별 소득 격차와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오내원 외(2013)는 노동력과 표준영농규모를 바탕으로 농가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영지표를 비교하여 1990년대 이후 농가소득 변화 실태와 농가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기간적 농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가의 투자실태와 경영안정성 및 빈곤층의 가계실태와 정책지원 효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윤영석 외(2013)는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해 경영주 연령별로 그룹을 구분하고, 농가소득 불평등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정도를 패널 GLS(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s)로 분석하여 연령 효과를 도출하였다. 김규섭 외(2014)는 2000~2011년의 도별 농가소득

불평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고, 농가소득 불평등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김태이 외(2012)와 고갑석 외(2016)는 Dagum(1997)의 지니계수 분해법과 Lerman and Yitzhaki(1984, 1985)을 이용하여 지역 간 농가소득 불평등도 차이와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김태이 외(2012)는 공적 보조금이 총소득에 추가되었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소득을 지역별로 그룹 내, 그룹 간으로 분리하여 소득원천별 불평등 지수를 도출하였으며, 고갑석 외(2016)는 농가 경상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연도별, 지역별로 농가소득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농가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분석 기간의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 직후와 2001~2002년에 불평등도나 양극화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병기 2000; 김성용 2004b, 박준기 외 2004; 전장수 외 2008).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 분석에서는 농업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김성용, 2004b; 안동환, 2004; 박준기 외, 2004),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작거나 감소하여 이전소득이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준기 외 2004; 김태이 외 2012; 고갑석 외 2016).

1.2.3. 소득 양극화

강혜정 외(2008)는 1998~2006년 기간의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계측하고 Esteban and Ray(1994, 1999)의 지수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양극화를 계측하였다. 강혜정 외(2008)의 연구 결과, 분석 기간의 농가소득 불평등도 증가하였으나,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하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중간계층이 감소하고 상·하위 계층 간의 이질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저소득층 구성원 간의 소득격차가 감소하는 동질성 요인 역시 강화된 것도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수 외(2008)는 조정된 ER 지수와 IR(interval ratio) 지표를 통해 권

역별 농가소득 양극화 실태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별로 양극화 양태가 다름을 밝혔다. 정진화 외(2012)는 EGR(Esteban, Gradin and Ray) 지수와 DER(Duclos, Esteban and Ray) 지수를 활용하여 2003~2009년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소득원천별 상대적 기여도와 경영주 연령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기간의 농가소득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농업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 이후에는 농가소득 양극화 기여도 측면에서 농외소득 양극화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주 연령이 40대와 70대 이상인 가구가 50대와 60대보다 상대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가소득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고령농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정진화 외 2013).

1.2.4. 농가 빈곤

농가소득 불평등도 분석과 함께 빈곤농가와 관련한 연구들(최세현 외, 2007; 이은우, 2007; 강성호 외, 2011; 강혜정, 2015)도 수행되었다.

최세현 외(2007)는 1999~2005년 동안 농가의 가구원별 절대빈곤선을 추정하여 농가의 빈곤율(head count ratio)과 농가 빈곤갭, 농가 빈곤의 지속성을 계측·검정하였고, 로렌즈곡선 계측을 통해 빈곤 농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은우(2007)는 농촌 빈곤의 빈곤결정함수와 FGT(Foster, Greer and Thorbecke) 지수를 설정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빈곤층과 비빈곤층과의 소비 실태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 결정요인에서 성별이나 학력은 빈곤 여부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경지와 자산규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외(2011)는 도시근로자가구, 농가, 임가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계측하고, 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임가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공적 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완화 효과는 임가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가구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의 효과는 일반 가구, 임가, 농가 순으로 컸고, 농가와 임가는 60대 이상일수록 사적보다는 공적 이전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강혜정(2015)은 경제적 위기 농가를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와 빈곤농가로 구분하고, 음이항 모형(negative binomial model)을 이용하여 농가경제 위기상황의 지속성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업농가가, 경지규모가 영세할수록 농가 경제 위기 경험이 많으며, 특히 고령농일수록 빈곤 경험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 경제 위기는 농업 구조적인 원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2.5. 농가소득 구조 및 결정 요인

최재혁 외(2005), 김제안 외(2009), 강혜정 외(2009), 김재경 외(2011), 권오상 외(2013a, 2013b), 황영모 외(2016)는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혹은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박중훈 외(2014), 황재희 외(2016)는 농업 6차산업화への 참여 유형별로 농가와 농업법인의 소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김동신 외(2016)는 농업법인 조직 참여 여부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오내원 외(2001a, 2001b)와 이병기(2005)는 농업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외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존 농외소득 증대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도출하거나,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농외소득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미복 외(2016)는 농가를 연령(65세)과 규모(2ha)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구조, 주요 소득원 등을 분석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유형별로 도출하였다. 임소영(2017)은 1990~2015년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Pseudo Panel Data를 구성하고, 가구주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각 코호트의 소득 변화를 추적하여 농가의 연령별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2-2〉 농가소득 관련 선행연구의 자료 및 주요 분석 방법

저자(연도)	분석 자료	분석 방법
이병기(200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1~1999)	로그소득분산, Gini 분해 분산분석
오내원 외 (2001a, 2001b)	농업총조사 (1980~2000) 농가경제조사 (1982~2000)	소득, 농산물 및 투입제 가격 동향 분석
황익식 외(2003)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8~2002)	〈평균-분산〉 방법
황익식(2004)		
김성용(2004a)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1~2002)	엔트로피 지수
김성용(2004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1~2002)	지니계수, 변이계수자승, 대수편차평균, 앳킨슨 지수, 일반적 엔트로피
박준기 외(200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8~2002)	대수편차평균, 지니계수, 엔트로피 지수
안동환(2004)	농가경제조사, 도시가계조사 (1990, 1995, 2000)	일반적 엔트로피 지수
최재혁 외(2005)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2)	Escobal(2001)의 소득결정함수, OLS
황익식 외(2005)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8~2002)	〈평균-분산〉 방법
황익식 외(200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4)	Epanechnikov 커널함수, Silverman의 최적 구간 폭 h
이은우(200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 소득결정함수
최세현 외(2007)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9~2005)	HR, 일반화 로렌츠곡선,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 동태적 고정효과 로짓모형
이은우(2007)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	빈곤결정함수(probit), FGT 지수
강혜정 외(2008)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8~2006)	비모수적 커널분포함수(nonparametric kernel density function), Esteban and Ray의 동일화-이질화 접근법
권오상 외(2008)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8~2006)	β -수렴 분석법
전장수 외(2008)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3~2006)	조정된 ER(Esteban and Ray) 지수, 누적 변화를 이용한 IR(interval ratio) 지표
강혜정 외(2009)	농가경제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2003, 2007)	Oaxaca 분해법, 분위회귀분해
김제안 외(2009)	농가경제조사 (1992~2006)	OLS
강성호 외(2011)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2009)	HR, 지니계수
김재경 외(2011)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2007)	Gini 계수, Theil 지수, 로그분산지수, regression-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김태이 외(2012)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2007)	Gini 계수 분해, Lerman and Yitzhaki의 공변량 분해

14 농업경영체 연구 동향 및 분석틀 검토

(계속)

저자(연도)	분석 자료	분석 방법
정진화 외(2012)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2009)	EGR, DER 지수
오내원 외(2013)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8~2011)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8~2011)	지니계수, EGR 지수, 고정효과 패널자료 추정법, 다계층분석법
권오상 외(2013a)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8~2011)	농가소득 결정방정식
권오상 외(2013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8~2011)	multilevel/hierarchical model
정진화 외(2013a)	농업총조사 원자료 (2000, 2011)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2010)	DER 지수
윤영석 외(2013)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3~2011)	대수편차평균, 농가소득 불평등의 연령효과 모형
김재경(20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2012. 8. 3. 기준)	Kullback-Leibler 발산도
정진화 외(2013b)	농업총조사 원자료 (2000, 201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3~2010)	DER 지수
김규섭 외(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0~2011)	Gini 계수,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박종훈 외(2014)	농업총조사 (2010), 농업법인조사 (2011)	헤크만 선택 모형(Hechman selection model)
강혜정(2015)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8~2012)	음이항 모형
김동신 외(2016)	농림어업총조사 (2010)	독립표본 T-test, OLS
김미복 외(201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10, 2015)	유형별 통계 현황 분석
황재희 외(2016)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원자료 (2015)	헤크만 선택 모형(Hechman selection model)
전지연 외(2016)	농산물생산비조사,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8~2012)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고갑석 외(201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08~2012)	Gini 계수 분해, Lerman and Yitzhaki의 공변량 분해
황영모 외(2016)	농업총조사 원자료 (2000, 2005, 2010)	K-평균 비계층적 군집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임소영(2017)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990~2015)	코호트 분석

12.6. 농가 소비지출 관련 연구

이계임 외(2003)는 농가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고, 김성용 외(2002, 2003)는 농가의 소비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농가후생의 불균등도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계측하여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김기환 외(2008)는 농가의 소비지출 패턴을 도시가구와 비교하

고, 시간 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비지출 체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1990~2000년 기간 동안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가의 식료품비 지출 등은 감소했지만,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농가소득의 불균등도가 증가했지만, 필수재 성격의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득이 증가하면 농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나, 소득이 감소하면 농업 투자 위축과 농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잉여가 적자인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가 크며, 이러한 농가 중 특히 고령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은 농가 소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 소비는 당기소득뿐만 아니라 농가의 순자산 변동에도 유의하게 반응하므로 농가소득 정책 이외에 금융 및 재정 정책 역시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화 외(2015)는 농가의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을 실증 분석하여 농가소득 가운데 농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특히 저소비계층일수록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에 대해 더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이며, 하위 10% 소비계층에서는 이전소득이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가지는 것을 계측하여 저소비계층과 소비빈곤계층(영세고령층)의 경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증대 정책이 소비 안정화에 유효한 수단임을 보였다. 또한, 농업소득의 높은 변동성이 낮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이어져 전업농의 경우 소득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소비 침체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지적했다.

1.3. 기타 관련 연구

1.3.1. 농가 부채 관련 연구

농가 부채 관련 연구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이

루어졌다. 황의식 외(2000, 2005), 박성재 외(2003)는 농가 유형별 부채 문제의 특성 및 기존 농가 부채 대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농가 부채 대책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정안성 외(2000a, 2000b)는 농가 부채 현황과 농가 부채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농가 특징별로 부채 상환 능력을 분석하여 부채 상환을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농가 부채는 IMF 직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양극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경영주의 부채규모는 크지만 감소세였고, 반면 70대는 부채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채는 그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의 상태와 부채 비율에 따라 농가 소득의 격차를 보이며, 농가의 부채 비율(자산 대비)이 높을 경우 농가소득 증대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소득 감소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업자본수익률은 산간보다는 도시근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농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지급능력의 경우 대농이 중·소농보다 낮고, 수익성 지표는 대농일수록 좋지만 지불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부채 상환 능력에는 경지면적, 농외소득, 이자율, 산출물과 투입물의 가격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농가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경지면적 확대와 농외소득 증대 정책이, 중·대규모 농가는 경지면적 확대 정책이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

13.2. 관련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운영되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관련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오내원 외(2006)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관련 가능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시안을 제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김수석(2013a)은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 실태 조사를 통해

현 등록제를 진단하고, 농정 추진 체계 개선의 관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수석(2013b, 2013c)은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제도와 시스템, 세제 지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수석 외(2013)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존 통계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통계·정책 자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통계자료의 대체 및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 농정 지원 방안을 위해 지방농정 계획 수립을 지원, 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한석호 외(2016)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 및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역할, 맞춤형 농정을 위한 기반으로써 농업경영체 DB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체 DB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활용 방안으로 현 농업경영체 DB 자료의 품질 제고 및 안정성을 위한 체계 마련, 각 농립사업의 DB에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코드 표준화 작업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과 관련한 연구는 개별 농가 단위의 연구와 비교해 양적으로 많지 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수석(2007)은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농업법인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농업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박규동(2013)은 농업법인에 지원되었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정호 외(2015a)는 2014년의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과 농업법인 정비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호 외(2015b), 서종석 외(2017)는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체 변경에 따른 조사 체계, 방법,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재경(2013)은 두 확률분포의 거리를 상대적 엔트로피(relative entropy) 형태로 평가하는 Kullback-Leibler 발산도(divergence)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의 공간적 배분의 형평성 분석틀을 개발·제안하고,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의 공간적 배분의 편중도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발농업 직접지불금으로 인한 편중도 완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13.3.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화

김정호 등(2006)은 농업생산과 경영체가 다양화되면서 선별적 정책이 요구되고 농가의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맞춤형 농정 정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통계 조사 정비 및 맞춤형 농정에 맞는 사업 시행 지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김수석 외(2006)는 ‘농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분석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가 유형별 정책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강혜정(2007)은 농가의 특징 변수들을 이용하여 농가들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특성변수들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한호 외(2012, 2015)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의 모형구축에 사용되는 C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소득계층 등급분류를 활용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통계청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농가 DB 구축이 개선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1.4. 시사점 및 제언

2000년 이후 농업경영체 관련 연구들이 다루었던 주제들은 한국 농업 및 농가 구조의 특징, 농업 생산성, 생산요소, 농가소득과 소비·지출, 농가 부채,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의 유형 구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다수의 연구가 농가소득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으며, 특히 농가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는 농가의 생산·경영 구조가 전문화, 규모화되면서 규모의 불균등이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황의식 2003; 박준기 2012). 최근 농외소득의 농가소득 구성비가 농업소득보다 커지는 등 농업과 농가의 구조는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 구조 변화와 관련된 농가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가 부채와 관련한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소득 변동성 관련 연구도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투자가 확대되었다(황의식 외 2016).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농가 규모의 성장과 농업경영체 증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채나 자산 등의 경영 안정성 문제, 자본 투자 문제, 농업법인 경영분석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수의 선행연구는 ‘농가경제조사’나 ‘농업총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업경영체 DB’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농업 구조를 규명하고자 했던 상당의 연구들은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농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농가경제 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농가경제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등 분산된 각종 정보에 대해 재검토와 정비 등 보완적 이용방안이 필요하다.

2. 농업경영체 분석틀 검토

2.1. 분석 대상 유형화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경영 분석의 주된 분석단위는 농가였으며, 작물재배업(특히 논벼)이 주된 농업 활동이었기 때문에 경지면적(주로 논 면적)에 기초한 농가 유형화와 정책접근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농가 유형이 다양해지고 영농 활동이 다각화되면서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농가를 산정하여 이루어지는 분석과 정책접근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표준영농규모라는 개념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표준영농규모 접근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 방식 또한 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좀 더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2.1.1. 미국의 농가 유형화

미국 농무성이 정의하는 농가(farm)는 가족 중심이 아닌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연간 1,000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주체로 정의된다. <표 2-3>은 현재 미국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농가 유형 구분 내용이다.

미국은 농가분석이나 농업정책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평균 농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표 2-3>의 유형별 특성에 기초하여 접근한다. 따라서 전체 농가의 평균 연령이나 평균 규모, 평균 소득 등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으며, 유형별 중간값(median)이나 분포 등을 주로 이용한다.

〈표 2-3〉 미국의 농가 유형 구분

농가 유형	과거 기준 (총매출액)	변경 기준 (현금조수입)
Small family farms¹⁾	\$250,000 이하	\$350,000 이하
Retirement farms	\$250,000 이하	\$350,000 이하
Off-farm occupation farms ²⁾	\$250,000 이하	\$350,000 이하
Farm occupation farms:		
Low-sales	\$100,000 이하	\$150,000 이하
Moderate-sales	\$100,000~\$249,999	\$150,000~\$349,999
Midsize family farms	N/A	\$350,000~\$999,999
Largr-scale family farms	\$250,000 이상	\$1,000,000 이상
Large farms	\$250,000~\$500,000	\$1,000,000~\$4,999,999
Very large farms	\$500,000 이상	\$5,000,000 이상
Nonfamily farms	-	-

주 1) family farm이란 가족이 소유권과 농가경영지배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의미함.

2) 과거에는 residential/lifestyle farms로 분류되었음.

자료: USDA(2013). Updating the ERS Farm Typology.

미국 농무성은 최근에 농가 유형 구분 방법을 변경했는데 첫 번째 변화는 과거에는 없던 **Midsize family farms**을 유형에 포함한 것이다. 과거에는 규모로 농가를 구분할 경우 소규모 가족농과 대규모 가족농만 있었으나 최근의 변화를 바탕으로 중간규모 가족농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두 번째 변화는 농업이 주된 직업(또는 소득원)이 아닌 가족농을 지칭하던 **Residential/lifestyle farms** 유형을 없애고 대신 **Off-farm occupation farms** 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이는 농업소득만을 고려하던 과거 유형 구분을 조정하여 농외소득도 포함하기 위한 변화로 판단된다.

세 번째 변화는 농가 유형 구분의 기준을 과거의 농가 총매출액(**Gross farm sales**)에서 농가의 현금조수입(**Gross cash farm income**)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변화는 과거의 농가 총매출액 기준이 농가의 농외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 임차농이나 육계 위탁사육 농가 등의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 과거보다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료, 연료, 비료 등의 농업 투입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변화는 농가 현금조수입으로 적용 기준이 변화한 것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2.1.2. EU의 농가 유형화

EU는 하나의 농업경영체 단위를 **agricultural holding**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이 EU의 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단일한 경영관리 하에 운영되며, 농업 활동을 기본 또는 보조 활동으로 수행하는 단일 경영체임을 의미한다. EU의 **agricultural holding**에서는 비농업적 서비스나 제품도 제공될 수 있다.

EU는 농가의 경제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총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Eurostat의 Farm Structure Survey에도 적용된다. 농작물이나 축산물의 SGM은 1ha 또는 동물 한 마리에 의한 생산물의 가치에서 해당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변투입비용을 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공동농업정책(CAP)의 변화 등으로 2008년부터 EU의 농업경영체 영농 규모 측정 단위가 기존의 SGM에서 표준산출물(SO, Standard Output)로 변경되었다. SO는 총생산의 표준가치로 농장가격 기준 농산물의 평균 금전적 가치(1ha 또는 1마리)를 의미한다. 이때 개별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는 해당 경영체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SO를 합산한 총 표준산출물(Total SO)의 가치로 계산된다.

영농형태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총 표준산출물에서 각기 다른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총 표준산출물에서 특정 품목의 SO가 2/3 이상이면 전문농으로 분류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복합농으로 분류된다.

2.1.3.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농가별 특성이 다양화되면서 농가경제 분석에 있어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김미복 외 2016). 또한, 농가 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 효과 제고를 위해서도 국내 농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김수석 외 2006). 김수석 외(2006)는 기존의 국내 농가 유형 구분의 기준이 각종 통계나 관계법에서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농가 유형의 분류 기준 및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기본 주체인 농가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 성격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변화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겸업, 주·부업, 영농형태, 경지규모, 연령, 가구원규모,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분류만으로는 농가경제 흐름의 단편적인 정보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미복 외 2016).

2.2.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한 유형화

기존 연구들의 경우 표준영농규모(SSF, Standardized Size of Farming) 개념을 도입해 농가별로 표준화된 영농규모를 산출하였다. 황의식 외(2003), 김수석 외(2006), 김미복 외(2016)는 표준영농규모(또는 환산영농규모)를 산출한 후 특정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준영농규모는 기존에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영농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지표로서, 경지면적을 제외한 농가의 고정자산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경지면적과 합산해 농가의 종합적인 영농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최양부 외 1983).

$$SSF = L_A + \frac{F_V}{L_P}$$

L_A : 개별농가의 경지면적

L_P : 전국평균지가

F_V : 고정자산평가액

이처럼 농가의 경영규모를 화폐단위가 아닌 면적 단위로 활용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인한 농가의 영농규모 왜곡을 줄일 수 있다(최양부 외 1983). 또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영농규모를 측정할 경우 축산업을 비롯해 시설 영농을 하는 농가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정자산을 영농규모에 포함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3.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 연계방안 검토¹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 분석과 정책 활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인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법인조사”²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조사방법과 대상이 다르고 조사 주체와 조사목적도 상이하기에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자료별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자료별 주요 조사 항목과 내용 중심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¹ 자료별 주요 특징의 경우 해당 통계 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명 자료를 참고하였다.

² 농어업법인조사는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한다.

3.1. 자료별 주요 특징

3.1.1. 농림어업총조사³⁾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농업, 임업 및 어업 경영 가구의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형태를 다루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표본조사의 표본틀 역할을 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재설정 없이 사용하고 본조사 기간에 방문면접을 통해 현장조사를 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업 분야 자료수집단위는 조사기준 시점 현재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이다. 그 구체적 조건은 1) 조사기준 시점(2015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3) 조사기준 시점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3.1.2. 농가경제조사⁴⁾

농가경제조사는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조사 목적이다. 따라서 농림어업총조사를 표본 틀로 이용하여 추출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단위의 각종 경제지표를 생산한다. 농가경제조사의 자료수집단위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6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농가는 가구원 2인 이상 2,500개 농가와 1인 단독가구 100개 농가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1) 외국인 가구, 2) 비혈연가

³⁾ 농가경제조사 통계별 설명자료, 통계청(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⁴⁾ 농림어업총조사(농업) 통계별 설명자료, 통계청(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3)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4) 농업 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및 법인 등이다.

3.1.3. 농업법인조사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법인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농지소유자격이 부여되었다. 2009년에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정의하였다((사)환경농업연구원 2015).

통계청의 농업법인조사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보고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농업행위를 하는 법인사업체(8,060개소)로 등기된 법인 전체에 대해 운영 및 경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후 조사부터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만을 대상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조사하였고, 2011년부터는 조사대상을 사업체에서 기업체 단위로 변경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통계청은 2015년까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2016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법인조사 업무 이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의 배경으로는 농업법인 활성화에 따른 조사대상 증가로 업무 부담의 큰 폭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법인 실태조사(3년 주기)와의 조사 중복 문제 등이 있다. 특히 법원의 등기법인 수와 통계청의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지자체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격차가 발생하여 농업법인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작용하였다((사)환경농업연구원 2015).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법인에 대한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

⁵ 2013년 말 기준 법원 등기 농업법인은 44,301개소, 통계청 조사 결과는 14,552개소, 농식품부 실태조사 결과는 26,141개소였다.

업법인 실태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3년이며, 주된 조사내용은 1) (준)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시정조치와 해산명령 등이 있다.

3.1.4. 농업경영체 등록자료⁶

2004년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전제조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무가 법적으로 농가에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불금 신청 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등록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등록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관리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농정원 등의 협업으로 생성되는 공공자료(public data)로 그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와 특정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구조이다. 해당 DB는 2016년 기준 163만 농업경영체별로 5개 항목의 56개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자료에 기초한 농정 활용이 가능하다.

3.2. 자료별 연계 가능성 검토

3.2.1. 자료 수집 단위

⁶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을 참고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있는 모든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빠짐없이 방문 면접하여 조사표를 통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응답자는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응답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농가경제조사는 위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조사표본을 설정한다. 농가경제조사 조사표의 조사대상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자산변화를 다루는 조사원부는 매년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조사하며, 자산변동이 발생하면 수시로 기록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자료수집단위와 관련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농어업경영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농어업경영정보)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⁷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기준은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의 자료수집단위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농가와 법인까지

7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3조 제1호는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농업인 요건 중 4)와 5)는 농업법인조사의 주된 자료 수집 단위를 포함한다.

자료별 기본적인 수집 단위를 비교할 경우, 통계청 발표 통계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의 유사한 항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농업인 기준의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농림어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자료 수집 단위가 가구(household)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경영주라는 점이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만 포함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임업도 포함한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자료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통계청 통계자료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의 자료 수집 단위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므로 개별 자료의 보완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자료 수집 항목

한석호 외(2016)는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체 DB 활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주요 통계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조사항목의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2-4>.

〈표 2-4〉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 통계청 주요 통계 조사항목 비교

조사 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농가경제조사
가구원 및 고용인	- 경영주 : 성명, 성별, 연령, 국적, 주소(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농이력(취업 동기, 농업 종사 기간), 전·겸업 여부 - 경영주 외 농업인 : 성명, 성별, 국적,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 가구원 수(남, 여), 주소(읍면동) - 가구원(공통): 성명, 성별, 경영주와의 관계, 나이, 교육 정도, 혼인상태, 농업종사 기간, 농업 종사형태, 농업 외 종사 기간, 주 종사 분야	- 경영주: 성별, 연령, 국적, 교육, 국적, 주소(시, 도), 영농이력(취업동기, 농업 종사 기간), 산업, 직업, 전·겸업 여부, 노동능력 - 경영주 외 농업인 : 성별, 국적,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취

30 농업경영체 연구 동향 및 분석틀 검토

(계속)

조사 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농가경제조사
가구원 및 고용인	- 관계, 영농이력(취업 동기, 농업 종사 기간), 전·겸업 여부 - 공동경영주 신청(2016년 신설) - 농업 외 종사자, 기타 동거인 (2016년 삭제)	- 경영주 특성: 경영주 경력, 5년 전 농림업 경영 여부, 5년 전 거주지 - 농업고용인 수(국적, 성별)와 기간	- 업동기, 농업 종사 기간, 산업, 직업, 전·겸업 여부, 노동능력 - 농업 외 종사자 : 성별, 국적, 경영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작물 생산 현황	- 중분류(8,146품목): 1,092품목 등록(2015년) - 농지 일반 : 농지소재지, 지목(공부, 실제), 경영형태(자경, 공유, 임차) - 농지면적 : 공부, 실제 경작면적, 미이용(휴경, 폐경) - 시설현황: 시설종류(온실/유리/경질판/비닐), 육묘장(유리/경질판/비닐), 재배사, 시설면적 - 품목별 재배면적 : 재배품목, 재배면적(노지, 시설) - 농지소유자 성명	84품목(조사표 열거) - 논 면적: 보유형태별(자기 논/남의 논), 경지정리형태별(정리/미정리), 경작형태별(1모작/2모작/경작 안 함) - 농사방법(직접/전부 위탁/일부 위탁/작업 하지 않음), 유기비료(사용 안 함/퇴비/녹비/짚/기타) - 밭 면적: 보유형태별(자기 밭/남의 밭), 경작형태별(경작함/경작 안 함) - 재배품목별 재배면적(노지, 시설), 시설현황(자동화 비닐/일반 비닐/유리온실/버섯재배사/기타) - 주요 과수(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감귤, 딸은감) 재배시설(시설재배, 조류퇴치망, 지주, 관개, 조류퇴치망, 빗물방지)	대분류(10여 품목), 영농형태(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농가)
가축 생산 현황	- 중분류(454품목): 63품목 등록(2015년) - 경영형태(자영, 임차), 용도, 가축종류, 사육 규모(마릿수/군/㎡) - 사육시설 소재지, 사육시설면적(공부, 실제)	13 품목(조사표 열거) - 사육두수 - 가축분뇨처리방법: 자체/퇴비/액비/정화, 위탁 등 - 목초지 면적	품목 수(10개 미만)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 생산유통: 주요 품목(대분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2016년 샘플 조사) - 가공판매: 품목, 판매금액	- 판매금액 구간(120만 원 미만~2억 이상) - 경영형태(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 주 판매처(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 생산자 조직(작목반, 법인 등) 참여 여부 - 영농지역	
추정 소득 및 자산·부채	- 농업소득(2016년 세부항목 삭제) - 농업 외 소득 - 자산 - 부채	- 농업 관련 사업(직판장/직거래/식당/관광 등) - 전업 및 겸업(농업 수입뿐/농업수입이 많음/농업 이외 수입이 많음) - 농기계보유 대수(트랙터/건조기/저온저장고 면적 등)	- 전·겸업(전업농가, 1종 겸업, 2종 겸업), 주·부업(전문, 일반, 부업, 자급농가) - 농가자산과 부채(총액, 세부 항목) - 농가소득(총액, 세부 항목) - 농가지출

(계속)

조사 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농가경제조사
쌀 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보조금	• 농지 및 농작물 생산 항목에 연계하여 신청(2016년 방식) • 신청사업명 : 쌀(고정/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밭고정/논이모작), 조건불리보조금 • 재배품목, 신청면적, 농지이용현황, 진흥지역 여부 • 수령자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가구 사항		• 정보화기기 보유 및 활용(컴퓨터/스마트폰 등) • 교통수단 보유(승용차/승합차/화물차/오토바이/자전거/경운기 등) • 난방시설(중앙난방/지역난방/기름보일러 등) • 주거시설 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등) • 주택항목(행정자료 연계, 국토부)	
다른 DB와 연계	•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성명,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성명, 종류, 품목, 지정연도) •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정부 보조금, 정부 융자금,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 인구주택총조사(2015)의 경우 행정자료 기반의 총조사 체계를 구축하였음. • 농림어업총조사도 중장기적으로 등록센서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주 1) 밑줄 친 항목은 농업경영체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

2) 기울어진 글씨로 표현된 항목은 농업경영체등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DB와 연계하여 파악 가능한 것.

자료: 한석호 외. 201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분석 및 활용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계청 발행 통계자료(특히 농림어업총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의 조사 항목 중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소재지, 경영주 경력, 경지면적(논·밭), 노지작물 수확면적, 시설작물 수확면적 및 시설종류별 면적, 과수 재배면적 및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농축산물판매금액, 농업경영형태, 농축산물 판매처, 전업 및 겸업 여부 등이다.

농가경제 분석이나 경영효율 분석 등을 위한 자료 이용에 있어 자료 간 가장 큰 차이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농가의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등을 총액 내지는 대표 1개 형태로 조사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주요 품목별로 각각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특히 판매금액의 경우 농림어업총조사는 구간을 선택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금액 자체를 경영체가 직접 기재한다. 따라서 소득(판매금액)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1. 농업경영체 일반 현황

1.1. 농업경영체 정의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은 동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업법인 제도는 UR 협상 대책으로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추진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형 법인(인적 결합체)으로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업적 농업경영조직이며, 농업회사법인은 회사형 법인(자본 결합체)으로 기업적 농업경영조직이다<표 3-1>.

농업경영체와 관련한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자료에의 등록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것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등록자료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전반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표 3-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 성격	• 협업적 농업경영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기업적 경영체 •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하며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 가능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8조 • 동법 시행령 제9~1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17~20조
설립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조합원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 •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종묘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 사업 •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
농지 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하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 중 1/3 이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지법 제2조 제3호

자료: 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2017).

1.2. 농업경영체 일반 현황

이 절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2015~2016년 기간의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 일반 현황과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본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수는 2015년 159만 7,023개소에서 2016년 162만 7,185개소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의 노지

재배면적은 159만 4,233ha에서 157만 9,501ha로 감소했지만, 시설 재배면적은 76,381ha에서 79,287ha로 증가했다.⁸

12.1. 농업법인 일반 현황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16,482개소(영농조합법인 11,599개소, 농업회사법인 4,883개소)로 2000년 5,575개소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조사대상 53,155개소 중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5,130개소(47.3%), 미운영(운영 준비, 임시휴업, 휴업 및 폐업) 농업법인은 18,481개소(34.8%), 소재 불명이 9,408개소(17.7%), 일반 법인으로 전환이 136개소(0.3%)였다(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 2017).

〈표 3-2〉 농업법인별 법인 운영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농업법인 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운영		17,579(46.4)	7,551(49.5)	25,130(47.3)
미운영	운영 준비	1,552(4.1)	1,133(7.4)	2,685(5.1)
	임시휴업	526(1.4)	201(1.3)	727(1.4)
	휴업	5,911(15.6)	881(5.8)	6,792(12.8)
	폐업	6,374(16.8)	1,903(12.5)	8,277(15.6)
소재 불명		5,908(15.6)	3,500(22.9)	9,408(17.7)
일반 법인 전환		53(0.1)	83(0.5)	136(0.3)
전체		37,903(100.0)	15,252(100.0)	53,155(100.0)

자료: 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2017).

⁸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검색일 2017년 10월 30일.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와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기초한 농업법인 수의 경우는 2015년 7,228개소(영농조합법인 4,618개소, 농업회사법인 2,610개소)에서 2016년 8,831개소(영농조합법인 5,320개소, 농업회사법인 3,511개소)로 증가했다. 농업법인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는 <표 3-3>과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3> 농업법인 재배면적 규모 추이

구분	경영체 수(개소)		면적 합계(ha)		경영체당 재배면적(ha)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총계	3,261	3,708	18,207	22,148	5.58	5.97

주: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별로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계산되어 경영체 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재배면적은 작기를 반영하므로 실제 경작면적 또는 공부상 면적보다 클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검색일: 2017.10. 3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기초한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에 따르면 0.5ha 미만 규모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다. 다만 2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의 평균 재배면적은 15~17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의 작물 재배면적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3-4>.

<표 3-4>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구분		0.5ha 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2ha 이상
농업법인 수	2015년	1,237	941	1,083
	2016년	1,501	1,032	1,175
농업법인당 재배면적(ha)	2015년	0.24	1.02	15.65
	2016년	0.24	1.02	17.65

주: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별로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계산되어 경영체 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재배면적은 작기를 반영하므로 실제 경작면적 또는 공부상 면적보다 클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검색일: 2017.10. 30.

1.2.2. 농업인 일반 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산물 경작·가축 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이며,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을 의미한다.

<표 3-5>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농가 및 농업인의 2015~2016년 기간 현황이다. 등록정보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16년 기준 161만 8,354호, 농업인 수는 254만 5,525명이다. 성별은 남자가 더 많으며, 농업 시작 형태는 전 생애에 걸쳐 농업에만 종사한 경우가 더 많다. 농업 종사 기간의 경우 5년 미만의 신규 진입농가보다는 5년 이상의 농가 및 농업인이 훨씬 더 많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서로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나 농업총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농가 수가 증가하고 겸업보다 전업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의 집계방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3-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의 농가 및 농업인 현황

단위: 농가, 명

구분		농가 수	농업인
농가 수	2015	1,589,795	2,582,915
	2016	1,618,354	2,545,525
성별	남	2015	1,193,761
		2016	1,201,894
	여	2015	396,034
		2016	416,460
국적	내국인	2015	1,589,322
		2016	1,617,888
	외국인	2015	473
		2016	466
농업 시작형태	전 생애	2015	853,732
		2016	955,251

38 농업경영체 실태 및 현황

(계속)

구분			농가 수	농업인
	산업 전환	2015	397,366	553,502
		2016	591,166	821,053
잔겸업	전업	2015	1,178,371	1,981,901
		2016	1,218,471	2,025,339
	겸업	2015	411,424	601,014
		2016	399,883	520,186
농업종사 기간	5년 미만	2015	140,325	218,280
		2016	153,045	195,753
	5년 이상	2015	1,449,470	2,363,733
		2016	1,465,309	2,349,772
연령별	40세 미만	2015	37,406	95,158
		2016	37,480	84,290
	40세 이상	2015	792,978	1,351,329
		2016	805,426	1,311,751
	65세 미만	2015	759,411	1,135,525
		2016	775,448	1,149,484
경영주와의 관계	경영주	2015	해당 없음	1,589,795
		2016		1,618,354
	가족	2015		989,639
		2016		924,851
	피고용인	2015		2,995
		2016		2,16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검색일: 2017.10. 30.

2. 농가소득 실태와 동향

앞 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 농업법인 실태자료를 이용해서 농업경영체 현황을 정리했으나, 이들 자료는 수집방식의 한계로 인해 농업경영체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절부터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경제 실태와 동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2.1. 농가소득 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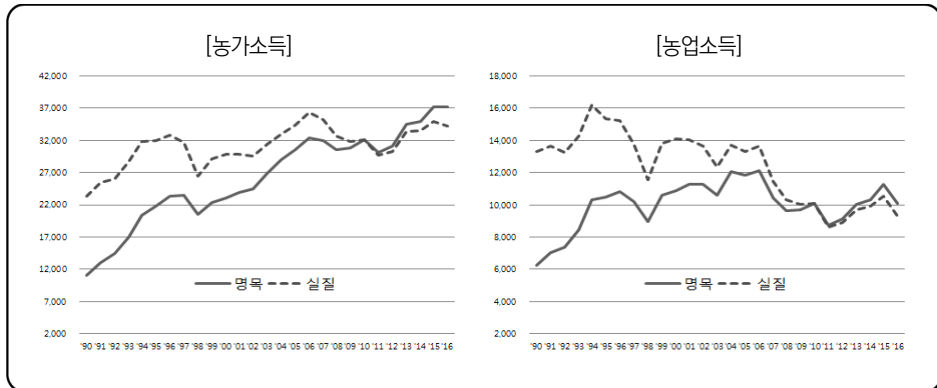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가소득(명목)은 2005년 3,0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2012년까지 3,100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소폭의 증감을 거듭한 뒤에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소득은 1994년 10,000천 원 이상으로 증가한 이후 농가판매가격 정체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

2016년 농가소득은 37,197천 원으로 2015년보다 명목소득은 0.05%, 실질소득은 1.8% 감소하였다. 2016년 농업소득은 10,068천 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하였으나, 농외소득(15,252천 원)과 이전소득(8,783천 원)이 각각 2.1%, 11.1% 증가하였다. 비경상소득은 3,095천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0.6%) 감소하였다.

2013년 농가소득(명목)이 전년보다 11.3% 증가한 후 2014년에 1.2%, 2015년에 6.5%의 연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농가소득은 2015년보다 감소했으나, 과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농가소득(명목)은 과거 5개년(2011~2015년) 평균(33,574천 원)보다 10.8% 높고, 과거 3개년 평균(35,563천 원)보다는 4.6% 높았다.

〈그림 3-1〉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 원



주: 실질소득은 GDP deflator(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표 3-6〉 농가소득 동향

단위: 천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명목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실질	32,603	31,788	32,121	29,678	30,231	33,350	33,560	34,899	34,263
농업소득	명목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068
	실질	10,312	10,005	10,098	8,616	8,892	9,694	9,893	10,556	9,274
농외소득	명목	11,353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14,799	14,939	15,252
	실질	12,127	12,511	12,946	12,747	13,235	15,171	14,210	14,009	14,049
이전소득	명목	5,289	5,481	5,610	5,453	5,614	5,844	6,819	7,906	8,783
	실질	5,649	5,654	5,610	5,368	5,469	5,645	6,548	7,414	8,090
비경상소득	명목	4,227	3,507	3,467	2,993	2,705	2,940	3,029	3,114	3,095
	실질	4,515	3,618	3,467	2,946	2,635	2,840	2,909	2,920	2,851

주: 실질소득은 GDP deflator(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업소득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했지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7년 이후 역전되었다. 2016년 농가소득(명목)에서 농업소득은 27.1%, 농외소득은 41.0%, 이전소

득은 23.6%를 차지한다. 농업총수입은 2003년 이후 연평균 2.2%씩 증가하였으나 농업경영비 상승 수준(연평균 3.8% 상승)이 높아 농업소득은 2003년 이후 연평균 0.4%씩 감소하였다.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농업소득률도 계속 하락하여 2003년 44.8% 수준이던 농업소득률은 2016년 32.2%까지 하락하였다.

2016년 농업소득(명목)은 경영비가 전년보다 5.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과 축산 수입 감소로 전년보다 10.6% 감소하였다. 2016년 농업총수입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31,279천 원이고, 농작물수입과 축산수입은 전년보다 각각 6.2%와 12.4% 감소하였다.

농작물수입 금액의 증가 폭이 적었지만, 축산수입은 2011년 4,335천 원에서 2016년 9,222천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총수입 중에서 농작물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0.4%였으나 2016년에는 68.3%로 점차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축산수입의 비중은 16.4%에서 29.5%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소득	8,753	-	9,127	-	10,035	-	10,303	-	11,257	-	10,068	-
농업총수입	26,457	100.0	27,589	100.0	30,648	100.0	32,179	100.0	33,654	100.0	31,279	100.0
농작물수입	21,275	80.4	21,942	79.5	23,155	75.6	22,942	71.3	22,760	67.6	21,357	68.3
축산수입	4,335	16.4	5,099	18.5	7,397	24.1	9,071	28.2	10,530	31.3	9,222	29.5
농업접수입	847	3.2	548	2.0	96	0.3	165	0.5	365	1.1	699	2.2
농업경영비	17,704	-	18,461	-	20,613	-	21,875	-	22,398	-	21,211	-
농업소득률	33.1		33.1		32.7		32.0		33.4		32.2	

주: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가 농외소득(명목)은 2008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겸업소득 3.6%, 사업외소득 3.8%)하였다. 2016년 평균 농외소득은 15,25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2016년 농가의 겸업소득(명목)은 3,855천 원으로 임업 및 어업, 농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늘어 2015년보다 3.3% 증가하였다. 급료수입(농외임금, 농업임금) 등에 의한 사업외소득은 11,39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표 3-8〉 농가의 농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외소득	명목	11,353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14,799	14,939	15,252
	실질	12,127	12,511	12,946	12,747	13,235	15,171	14,210	14,009	14,049
겸업소득	명목	2,900	3,296	3,467	3,653	3,966	4,182	3,751	3,733	3,855
	실질	3,098	3,400	3,467	3,596	3,864	4,040	3,602	3,501	3,551
	비중	25.5	27.2	26.8	28.2	29.2	26.6	25.3	25.0	25.3
사업외소득	명목	8,453	8,832	9,480	9,296	9,619	11,523	11,048	11,206	11,397
	실질	9,029	9,111	9,480	9,151	9,371	11,131	10,609	10,509	10,498
	비중	74.5	72.8	73.2	71.8	70.8	73.4	74.7	75.0	74.7

주: 실질소득은 GDP deflator(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비중은 농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가의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는 현상은 농가의 가계지출 증가 정도를 농업소득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농가의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혜정 2006). 농가의 농업소득이 2008~2016년간 연평균 0.5%의 성장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가계지출은 1.7%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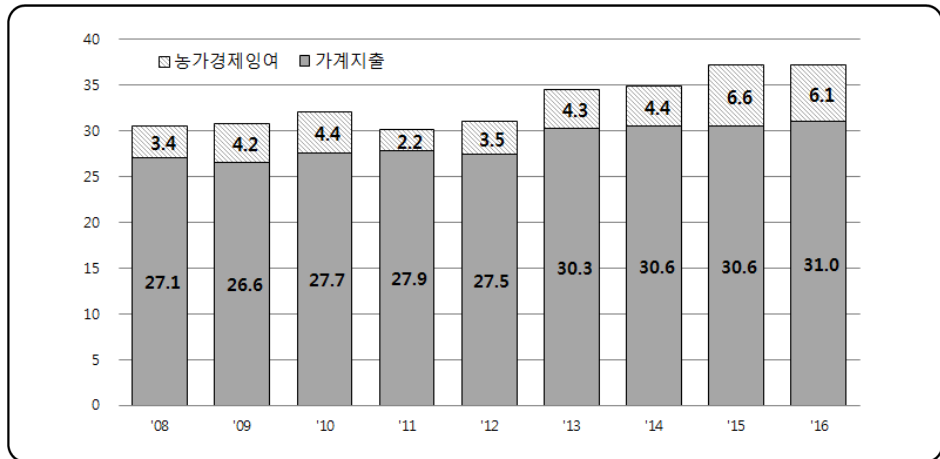
농가의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 증가로 2003년 2,031천 원에서 2016년 8,783천 원까지 연평균 11.9%씩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전소득의 40~45%까지 차지하기도 했던 사적보조금은 최근 10% 미만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이전소득 대부분은 농업보조금 등의 공적보조금이다.

2016년 이전소득은 8,783천 원으로 2015년보다 11.1%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등의 공적보조금은 12.5% 증가하였다. 한편 공적보조금은 2008 ~ 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며, 이중 연평균 7.2% 증가한

농업보조금보다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수혜에 해당하는 기타 공적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연평균 14.1%)하였다.

〈그림 3-2〉 농가의 가계지출 및 농가경제잉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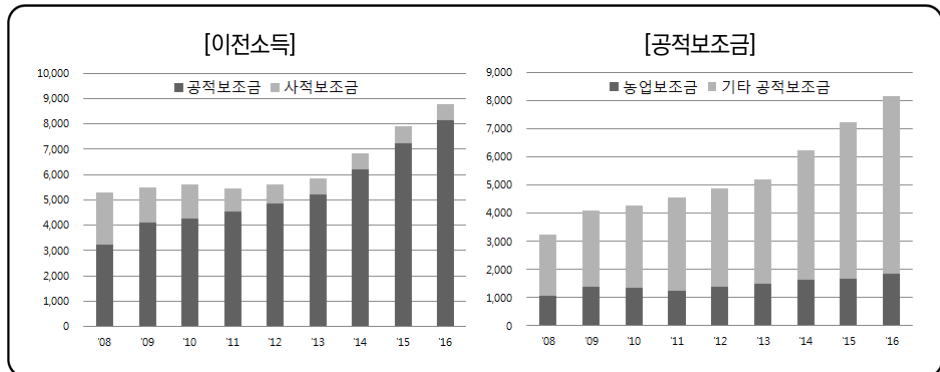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그림 3-3〉 농가 이전소득(명목)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2008~2016년 기간 동안 경지규모별 연평균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 이 중 '1.5~2.0ha 미만' 규모 농가의 연평균 소득증가 수준은 0.3%로 가장 낮

았으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하였다. 2016년 기준 1.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들의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1.5ha 이상 규모 농가들의 소득은 대부분 감소하였다.

〈표 3-9〉 경지규모별 농가소득(명목)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전체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0.0	2.5
0.5ha 미만	28,453	28,332	28,194	28,172	28,106	32,220	31,041	32,860	34,434	4.8	2.4
0.5~ 1.0ha 미만	25,283	26,493	30,691	24,383	26,143	27,992	32,359	32,420	33,531	3.4	3.6
1.0~ 1.5ha 미만	26,647	27,898	28,864	29,965	28,838	34,830	35,612	34,313	35,459	3.3	3.6
1.5~ 2.0ha 미만	30,524	30,321	28,362	29,124	30,327	37,568	33,166	34,859	31,152	-10.6	0.3
2.0~ 3.0ha 미만	35,054	33,545	31,632	31,917	32,011	36,987	34,687	42,614	41,227	-3.3	2.0
3.0~ 5.0ha 미만	35,924	36,664	41,946	36,999	41,080	41,627	43,103	45,516	46,467	2.1	3.3
5.0~ 7.0ha 미만	44,915	46,291	39,196	36,078	44,374	56,577	49,697	62,117	53,350	-14.1	2.2
7.0~ 10.0ha 미만	63,548	51,884	64,054	61,918	60,514	45,006	60,881	76,910	72,188	-6.1	1.6
10.0ha 이상	48,032	68,693	77,355	68,412	54,436	53,129	62,826	82,835	80,547	-2.8	6.7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2008년 이후 39세 미만 경영주의 농가소득이 다른 그룹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경영주가 해당한다. 2016년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소득은 30~40대가 평균 49,641천 원으로 2015년(52,586천 원) 대비 5.6% 감소했지만, 다른 연령대의 농가소득은 증가하였다. 농업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많은 70세 이상의 경우 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이 낮아 농가소득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표 3-10〉 연령별 농가소득(명목)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39세 이하	46,618	33,713	48,881	37,011	37,174	44,870	57,594	95,405	77,552	-18.7	6.6
40~49세	41,050	44,754	50,202	45,646	47,932	43,135	45,083	50,043	48,170	-3.7	2.0
50~59세	38,756	43,936	46,946	44,213	46,528	54,745	57,816	60,703	63,151	4.0	6.3
60~69세	31,368	31,507	32,619	31,803	33,603	34,223	35,533	40,133	42,637	6.2	3.9
70세 이상	21,224	19,953	20,888	20,608	21,986	22,088	22,616	24,368	24,476	0.4	1.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2.2. 영농형태별 소득 흐름

2008년 이후 논벼, 특작, 화훼 농가소득은 감소했지만, 다른 영농형태의 농가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축산이 연평균 6.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축산농가의 농가소득 규모 역시 여타 영농형태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용작물의 경우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소득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논벼농가 역시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소득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2016년 논벼농가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모두 감소하여 전년보다 13.6% 감소하였다.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은 감소 추세인데 특히 2011년에는 6,498천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쌀 가격 상승으로 2015년에는 8,375천 원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이후 지속된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6년 논벼농가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30.7% 감소(5,805천 원)하였다. 축산농가의 농업소득은 일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2015년보다 3.3% 감소하였다.

〈표 3-1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명목)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전체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0.0	2.5
논벼	23,318	21,824	20,628	19,707	19,609	23,325	22,500	25,588	22,117	-13.6	-0.7
과수	30,419	29,469	34,991	29,505	32,261	34,352	34,662	34,039	34,434	1.2	1.6
채소	24,164	25,813	28,625	26,386	26,922	29,125	25,718	27,001	29,280	8.4	2.4
특작	41,633	37,343	39,127	21,280	24,064	21,081	19,265	15,281	22,049	44.3	-7.6
화훼	35,874	38,021	27,408	24,759	32,231	21,878	27,983	26,981	32,025	18.7	-1.4
일반 발작물	20,022	14,999	27,252	18,429	16,374	20,122	23,528	23,576	26,882	14.0	3.8
축산	46,398	48,762	42,179	47,939	46,660	52,721	72,338	79,649	77,434	-2.8	6.6
기타	28,768	25,743	40,772	47,808	52,046	46,113	57,136	72,133	46,874	-35.0	6.3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표 3-12〉 영농형태별 농업소득(명목)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전체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068	-10.6	0.5
논벼	8,867	8,225	7,194	6,498	7,462	7,713	7,061	8,375	5,805	-30.7	-5.2
과수	17,602	14,749	19,984	14,940	16,215	20,024	19,270	16,020	16,100	0.5	-1.1
채소	11,561	12,761	14,231	14,418	14,896	13,955	11,070	11,726	12,736	8.6	1.2
특작	27,944	24,118	26,910	8,579	7,108	7,271	5,016	2,499	4,890	95.7	-19.6
화훼	15,895	19,346	12,857	6,384	10,095	1,466	8,074	9,875	16,203	64.1	0.2
일반 발작물	6,440	4,019	9,931	8,656	6,729	6,111	7,471	8,164	5,732	-29.8	-1.4
축산	31,447	31,924	25,802	32,992	33,152	31,574	49,731	58,353	56,432	-3.3	7.6
기타	15,318	16,038	23,696	32,566	37,629	32,477	36,798	50,972	27,507	-46.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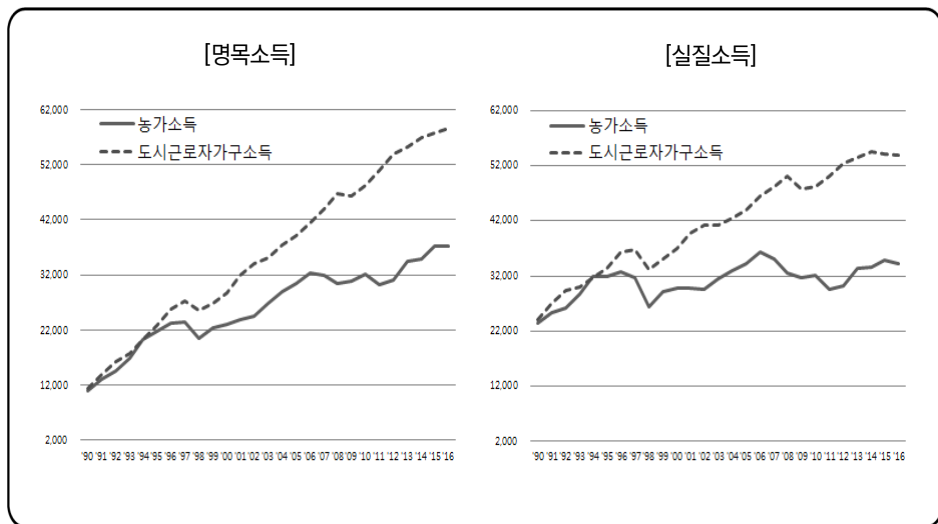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2.3. 도시근로자가구와 소득 비교

1990년대 초까지 비슷한 수준이었던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소득의 상승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농업소득이 10,000천 원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농업소득의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3-4〉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 추이

단위: 천 원



주: 실질소득은 GDP deflator(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최근 농가소득이 증가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다. 농가소득 수준은 2011~2012년 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의 60% 미만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 이후 63.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명목소득). 그러나 2016년에는 2015년의 64.4%에 비해 0.9%p 감소한 63.5%인데 이는 농업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명목소득).

〈표 3-13〉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 및 농업소득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76.4	77.6	78.2	78.2	72.9	65.2	66.6	66.8	59.1	57.6	62.5	61.5	64.4	63.5
농업소득	30.1	32.3	30.3	29.3	23.7	20.6	21.0	21.0	17.2	16.9	18.2	18.1	19.5	17.2

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2인 이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3. 농가 자산 및 부채 동향

3.1. 일반 현황

국내 농가의 자산 및 부채규모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약 3억 4천만 원 규모의 농가 자산은 2013년도에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6년 기준 약 4억 7천만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다만, 2013년에 농가경제조사 샘플이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같은 샘플로 구성된 2008~2012년 기간과 2013~2016년 기간을 구분해서 비교하면 총자산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 부채는 2008년부터 연평균 약 0.5% 증가하여 2016년에 약 2,600만 원 규모로, 농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더디게 증가하면서 자산보다 부채 비중이 감소하였다. 자산보다 부채 비중의 감소는 농가의 경영상태 개선으로 볼 수도 있으나, 농가의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며 농가 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표 3-14〉 연도별 농가 총자산 및 총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총자산	341,227	358,029	372,476	387,180	407,872	400,580	431,823	453,580	474,309	4.2
총부채	25,786	26,268	27,210	26,035	27,262	27,363	27,878	27,215	26,730	0.5
자산 대비 부채 비중	7.56	7.34	7.31	6.72	6.68	6.83	6.46	6.00	5.64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 자산은 크게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2016년 기준 약 3억 7천만 원 규모이며, 2010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연평균 약 3.3%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전년 대비 약 5%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약 2% 수준으로 성장속도가 감소하였다.

유동자산의 경우 규모 자체는 고정자산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약 8% 수준으로 고정자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0% 이상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샘플로 구성된 2008~2012년 기간과 2013~2016년 기간을 구분하면 유동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표 3-15〉 농가 자산 유형별 추이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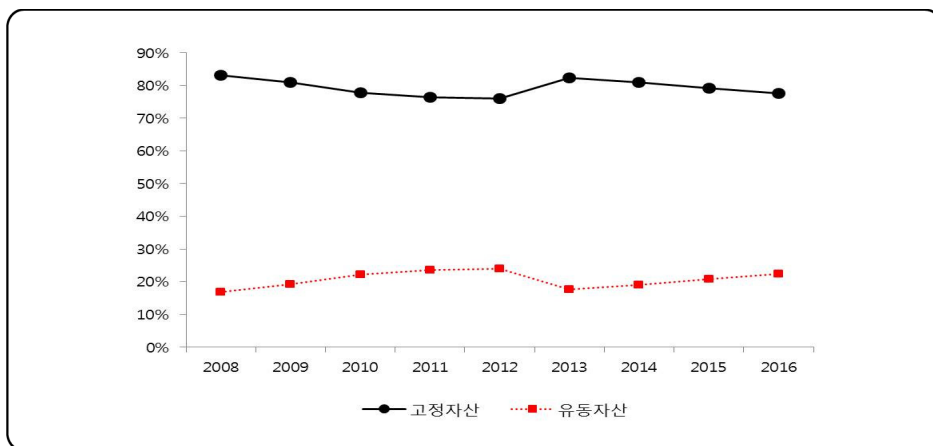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고정	283,826	289,539	289,435	295,637	310,016	330,123	349,894	358,793	368,226	3.3
유동	57,401	68,490	83,041	91,542	97,856	70,458	81,929	94,787	106,084	8.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총자산에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도에 유동자산이 급감하여 비중 흐름이 다소 바뀐 것을 제

외하면 고정자산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08~2012년 기간과 2013~2016년 기간을 구분하면 유동자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고정자산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5〉 자산 유형별 부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가의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95.5% 수준으로 유동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2012년 기간과 2013~2016년 기간을 구분하면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좌자산이 연평균 약 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재고자산은 연평균 약 1.2% 감소하는 추세로 점차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6〉 농가 유동자산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재고	5,283	4,997	5,373	5,695	5,641	5,405	5,470	5,679	4,778	-1.2%
당좌	52,118	63,493	77,668	85,848	92,215	65,053	76,459	89,109	101,306	8.7%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증가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유형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의 경우 연도별로 증감이 있으나, 약 70% 비중을 유지하며 약 3.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은 약 20% 비중을 유지하며 약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2014년 이후로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농가 전체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90%로 농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 속도에서는 구축물, 대동물, 대식물 등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다. 구축물의 경우 전체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약 18.7%로 가장 높다. 대동물과 대식물은 연평균 약 6% 이상 증가하였다. 대동물은 2010 ~ 2012년 기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기구 자산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0.8%에 머물렀다.

〈표 3-17〉 농가 유형자산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토지	198,087	201,537	201,952	207,960	223,462	224,204	241,231	252,940	262,082	3.6
건물	62,961	62,946	63,560	62,884	63,368	76,297	77,837	75,293	75,125	2.2
구축물	153	177	207	246	264	303	410	563	601	18.7
기계기구	11,166	11,136	10,175	10,986	9,386	14,215	13,822	11,867	11,875	0.8
대동물	6,151	7,625	7,141	6,747	6,702	7,401	8,679	9,765	10,391	6.8
대식물	4,105	4,459	4,821	4,997	5,096	6,861	7,154	6,628	6,641	6.2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가 부채는 크게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부채와 유동부채의 기준은 부채 상환 기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상환 기한이 1년 이상일 경우는 고정부채이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로 분류된다. 농가 부채는 대부분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고정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수준으로 연평균 약 1.7% 증가하였다. 반면 유동부채는 연평균 약 6.8%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가가 단기 차입금보다는 장기 차입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가의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으로 농가 유동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자산 및 부채의 증감 현상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용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 및 증감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표 3-18〉 농가 부채 유형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고정	20,798	21,167	21,988	21,909	22,332	23,446	23,873	24,045	23,887	1.7
유동	4,989	5,100	5,222	4,126	4,930	3,917	4,005	3,170	2,842	-6.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농가자산 및 부채는 사용 목적에 따라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자산과 부채 모두 농업용, 가계용, 기타용, 겸업용 순으로 규모가 크다. 농업용 자산의 경우 연평균 약 1.7%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이며, 농업용 부채의 경우 연평균 1.6% 감소해 2016년도 기준 약 1천 2백만 원 수준이다.

총자산 대비 용도별 자산의 경우, 농업용 자산 비중이 감소하면서 나머지 용도의 자산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업용 자산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용과 기타용 자산이 각각 약 2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겸업용 부채의 경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긴 하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도 기준 약 5.3%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용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도에는 총부채의 약 45% 수준이다. 겸업용 부채의 경우 큰 비중의 변화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농가 부채는 가계 및 기타용 부채를 중심으

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농가 부채 비중의 변화와 앞서 살펴본 고정부채와 유동부채의 추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농업 투자를 위한 부채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농가의 주거용 건물 취득 및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활동을 중심으로 부채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정부채는 증가하고 유동부채는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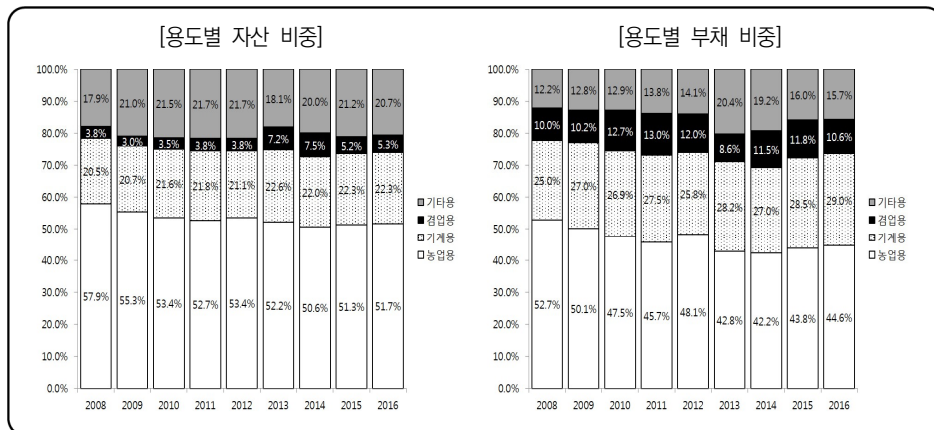
〈표 3-19〉 농가 용도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자 산	농업	158,353	153,504	148,253	149,519	159,288	164,722	168,957	175,662	181,495	1.7
	가계	56,077	57,498	59,944	61,944	62,965	71,389	73,389	76,306	78,217	4.2
	겸업	10,277	8,208	9,758	10,777	11,324	22,600	25,044	17,827	18,744	7.8
	기타	48,863	58,246	59,518	61,654	64,640	57,150	66,670	72,604	72,737	5.1
부 채	농업	13,600	13,150	12,930	11,892	13,122	11,715	11,778	11,917	11,924	-1.6
	가계	6,446	7,086	7,330	7,156	7,030	7,729	7,539	7,754	7,756	2.3
	겸업	2,590	2,669	3,453	3,393	3,268	2,347	3,208	3,200	2,845	1.2
	기타	3,151	3,362	3,497	3,594	3,842	5,571	5,354	4,344	4,205	3.7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그림 3-6〉 농가 용도별 자산 및 부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3.2. 농가 특성별 자산 및 부채 현황

3.2.1. 전업·겸업농가

전·겸업 여부에 따라 농가 유형은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으로 구분된다. 영리 목적으로 농사 이외에 투입한 일수를 기준으로 전·겸업이 구분되며, 겸업의 경우 다시 농업총수입과 농외수입 규모 비교를 통해 1종 겸업과 2종 겸업으로 구분된다.

자산의 경우 전업농가 자산이 연평균 4.9%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크며, 2종 겸업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인다. 2008년을 기준으로 1종 겸업농가의 자산규모가 가장 컸으나, 2016년에는 2종 겸업농가의 자산규모가 가장 크다. 전·겸업별 농가 부채는 2008~2016년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표 3-20〉 전·겸업 농가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자 산	전업	317,951	332,983	344,561	371,310	388,176	403,871	418,609	439,483	465,555	4.9
	1종	402,000	387,286	394,404	386,205	414,337	434,999	442,514	452,820	469,528	2.0
	2종	353,609	386,860	401,962	410,965	433,390	380,451	445,254	475,096	488,480	4.1
부 채	전업	20,961	23,722	23,305	22,352	23,129	24,723	22,211	21,828	23,457	1.4
	1종	38,480	35,209	34,281	31,120	32,244	35,379	34,906	34,198	34,099	-1.5
	2종	28,311	26,713	29,177	28,934	30,971	27,346	32,321	31,652	28,592	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3.2.2. 주업·부업·자급농가

주·부업에 따른 농가 구분은 경지규모와 수입수입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주업의 경우 다시 전문농가와 일반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부업별 농가 자산은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급농가 자산의 연평균 증가

율이 약 8%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전문 농가의 자산규모가 2016년도 기준 약 6억 원 규모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업 농가 중 일반 농가의 자산이 약 3억 3천만 원 규모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부업별 부채의 경우 자급 농가를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다. 자급농가의 부채는 연평균 약 3.5% 증가하면서, 자산 및 부채 모두에서 큰 증가세를 보인다.

〈표 3-21〉 주·부업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자 산	전문	452,814	449,665	477,019	494,221	537,945	480,140	526,331	569,109	600,387	3.6
	일반	248,225	249,203	254,142	260,103	267,841	279,113	281,443	304,981	337,661	3.9
	부업	380,883	408,620	430,547	451,687	463,876	464,240	509,996	526,884	520,412	4.0
	자급	221,494	256,429	268,153	284,693	296,601	325,034	370,205	389,336	413,701	8.1
부 채	전문	44,384	43,883	45,301	43,323	45,046	45,207	44,368	46,398	44,125	-0.1
	일반	10,938	10,203	10,442	8,218	8,579	9,419	8,410	7,642	11,057	0.1
	부업	29,431	29,519	32,183	32,020	33,981	31,881	33,499	30,904	30,215	0.3
	자급	13,428	13,268	14,063	14,776	13,701	15,224	21,483	24,776	17,676	3.5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3.2.3. 영농형태

모든 영농형태에서 농가자산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논벼 및 축산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5%와 3.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반 밭작물 농가가 연평균 약 9.8%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논벼농가의 경우 2008~2012년 기간과 달리 2013~2016년 기간 자산이 감소세를 보인다. 자산과 부채규모 면에서는 축산 농가가 가장 큰데, 2016년도 기준으로 각각 7억 8,257만 원과 7,154만 원 수준이다.

영농형태별 부채의 경우 논벼와 채소농가는 2008~2012년 기간과 2013~2016년 기간 모두 감소세지만, 특용은 같은 기간 모두 증가세이다. 밭작

물과 축산, 과수의 경우 2013~2016년 기간 동안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해보면, 논벼 농가와 채소농가는 부채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발작물과 축산, 과수는 자산 취득을 위해 부채를 포함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 영농형태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자 산	논벼	331,095	340,304	343,219	366,531	383,842	423,843	397,861	396,444	403,908	2.5
	과수	364,860	372,287	397,907	454,973	428,245	427,909	463,883	495,915	547,044	5.2
	채소	282,616	311,083	322,073	315,246	343,705	359,315	364,218	395,861	406,367	4.6
	특용	267,064	279,571	315,101	269,508	375,859	305,037	259,289	332,170	388,076	4.8
	화훼	432,142	549,492	597,064	869,975	748,682	533,627	485,211	500,527	593,179	4.0
	발작물	202,044	207,846	250,546	299,639	216,088	294,506	467,557	345,063	426,701	9.8
	축산	592,687	451,400	468,973	592,192	690,911	587,466	641,049	710,747	782,568	3.5
	기타	382,246	403,969	404,837	380,041	468,461	468,795	579,306	615,417	588,337	5.5
부 채	논벼	14,998	14,463	14,167	13,371	13,495	19,190	15,175	14,938	16,554	1.2
	과수	24,898	33,334	32,757	35,391	23,952	30,137	27,038	29,073	30,268	2.5
	채소	22,353	25,554	23,737	18,826	19,582	24,654	23,314	21,103	20,900	-0.8
	특용	20,137	36,795	65,105	68,969	81,199	8,300	12,549	13,188	11,963	-6.3
	화훼	45,004	34,913	36,139	64,298	52,985	72,692	53,545	61,178	69,340	5.6
	발작물	17,574	17,963	17,656	26,932	10,089	11,747	22,658	9,497	24,544	4.3
	축산	107,563	60,394	61,036	89,570	102,770	68,795	68,428	71,482	71,536	-5.0
	기타	28,311	12,008	14,702	28,198	52,682	32,196	48,048	32,364	23,020	-2.6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3.2.4. 경지규모

농가의 고정자산 중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영농규모가 증가할수록 자산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4

년도와 2016년도의 0.5~1.0ha 미만 농가의 자산규모는 1.0~1.5ha 미만 농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0.5~1.0ha 미만 농가의 전년 대비 자산 증가율은 각각 21.5%와 8.9%이며, 1.0~1.5ha 미만 농가의 경우는 2.4%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5~1.0ha 미만 농가는 연평균 약 8.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표 3-23〉 경지규모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자 산	1	240,375	267,284	281,626	298,889	303,201	311,256	329,141	348,488	369,130	5.5
	2	254,861	292,551	324,790	321,197	340,989	354,364	430,558	435,923	474,924	8.1
	3	299,346	302,497	328,648	359,909	391,009	429,118	418,831	440,997	432,127	4.7
	4	339,707	392,581	365,390	372,975	404,230	421,409	444,706	481,350	503,011	5.0
	5	438,530	435,808	428,796	445,434	463,320	403,540	439,963	484,747	544,470	2.7
	6	466,709	479,894	517,876	560,251	589,477	572,830	609,645	600,838	600,467	3.2
	7	885,203	698,344	679,977	538,489	564,583	600,008	610,083	707,818	768,361	-1.8
	8	673,637	667,201	714,704	853,270	969,128	548,695	646,838	723,214	759,112	1.5
	9	645,635	720,213	856,082	867,329	875,200	922,910	875,977	1,013,757	1,012,101	5.8
부 채	1	17,079	16,504	18,462	20,126	18,670	16,734	21,315	20,467	18,717	1.2
	2	16,322	20,616	23,661	18,495	20,007	22,299	21,681	21,325	27,945	7.0
	3	18,030	19,127	20,345	16,239	20,710	27,649	27,425	25,127	21,825	2.4
	4	19,292	32,382	22,051	29,187	26,854	28,234	28,380	22,971	20,274	0.6
	5	35,191	31,227	25,651	27,098	26,101	28,463	24,742	27,141	25,297	-4.0
	6	40,167	34,852	42,212	37,547	38,616	43,757	46,644	44,975	47,575	2.1
	7	86,967	61,857	83,858	52,395	54,571	58,117	59,751	68,968	54,820	-5.6
	8	90,823	82,235	83,478	106,648	158,865	86,546	63,603	90,770	87,803	-0.4
	9	74,277	73,307	79,950	88,435	68,762	95,156	83,220	78,961	73,981	-0.05

주: 1= 0.5ha 미만, 2= 0.5~1.0ha 미만, 3= 1.0~1.5ha 미만, 4= 1.5~2.0ha 미만,
5= 2.0~3.0ha 미만, 6= 3.0~5.0ha 미만, 7= 5.0~7.0ha 미만, 8= 7.0~10.0ha 미만,
9= 10.0ha 이상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특이하게도 5.0~7.0ha 미만 경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의 경우 2008~2011년 기간 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자산이 다시 증가한다.

경지규모에 따른 농가 부채는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하기는 하나 반드시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ha~3ha 미만, 5~7ha 미만, 10ha 이상 규모에 속하는 농가들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자산이 증가하지만 부채가 감소한다.

2016년 기준 부채규모가 가장 큰 농가는 7.0~10.0ha 미만 경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이다. 또한, 경지규모 3ha를 기준으로 부채의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ha 미만까지의 농가 부채 범위는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수준이지만, 3ha 이상 농가의 경우 최소 4,700만 원에서 최대 8,7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가자산과 마찬가지로 0.5~1.0ha 미만의 경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의 부채가 연평균 약 7% 상승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대비 16년에 부채가 감소한 농가는 2.0~3.0ha 미만, 5ha 이상의 경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였다.

3.2.5. 경영주 연령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자산의 경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50~59세에 해당하는 농가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2년 기간에는 40~49세 이하 농가의 자산이 감소세를 보이거나, 2013~2016년 기간에는 경영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농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2008~2012년 기간에는 49세 이하 농가의 부채가 감소세를 보이거나, 2013~2016년 기간에는 경영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농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세 이하 농가의 부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 경영주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3-24〉 경영주 연령별 농가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자 산	1	351,302	355,519	403,125	355,251	364,751	213,216	271,907	479,692	596,104	6.8
	2	457,436	468,328	434,525	392,373	442,983	345,384	369,885	374,116	355,637	-3.1
	3	394,894	441,897	475,055	518,318	535,759	500,210	564,065	614,012	664,190	6.7
	4	370,890	392,840	400,217	414,535	444,307	415,309	444,874	461,586	506,765	4.0
	5	246,130	256,313	285,556	305,885	333,328	343,811	369,766	394,956	404,939	6.4
부 채	1	71,421	49,128	78,131	39,248	37,254	43,735	87,780	75,579	54,512	-3.3
	2	71,205	80,026	65,222	50,477	39,725	45,455	57,311	61,893	51,062	-4.1
	3	36,920	42,772	52,454	57,972	60,099	51,351	55,842	54,514	53,947	4.9
	4	23,388	24,188	25,096	26,156	30,830	29,506	27,691	27,770	29,563	3.0
	5	8,341	8,004	9,117	8,241	11,364	9,119	11,208	12,521	14,430	7.1

주: 1= 39세 이하, 2= 40세~49세, 3= 50세~59세, 4= 60세~69세, 5= 70세 이상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4. 시사점 및 제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농가소득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16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농가소득 감소는 농업소득이 전년 1,126만 원에서 1,007만 원으로 10.6%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외소득보다 더 높았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역전되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1년부터 30% 이하로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27.1%까지 감소했지만, 농외소득의 비중은 41%로 증가했다.

농외소득의 비중과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농가소득 관련 정

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가 특성에 따라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구성비율과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농가소득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정 연령대에서 농업소득의 역할이 크지 않다면,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품목 중심의 농업소득 정책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소득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소득원천별 심층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는 2016년 농업소득의 감소 이유를 경영비가 전년보다 5.3% 감소했음에 농작물과 축산 수입이 전년보다 각각 6.2%와 12.4% 감소하여 농업총수입이 7.1%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청 발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쌀 가격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접지불금의 농업소득(농업잡수입) 계상을 해당 발생연도에 하느냐 아니면 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그다음 해로 계상하느냐의 문제이다. 2016년 쌀 가격 하락으로 지급된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2016년 농업소득이 아닌 2017년도의 농업소득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2016년 농업소득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2017년 농업소득은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 농가경제조사에서 축산 수입의 대부분은 한우 사육에서 발생할 것이기에 축산수입 감소는 2016년 한우농가의 축산소득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한우 도축은 전년보다 16% 감소하고 도매가격(1등급 기준)은 11.2% 상승하여 농가의 한우 100두당 소득은 24.5% 증가했다. 즉, 한우 사육농가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의 수입도 증가하여 2016년 돼지 생산액이 쌀 생산액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최초로 발생하였다.

축산농가의 평균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의 축산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축산농가의 양극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세 축산농가는 경영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업으로 몰렸고, 중대형 축산농가는 지속해서경영규모를 확장하면서 소득이 급증하는 산

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런데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샘플이 경영을 축소했거나 폐업한 축산농가 중심으로 설정되어 경영을 확대한 농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농가 구조 양극화의 한쪽 단면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농가의 총부채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총자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39세 이하 젊은 경영주들이 자산취득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들 연령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가소득, 부채, 자산의 일반 현황 중심으로 정리되어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가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농가소득과 지출구조 연계 분석, 농업소득과 경영비 연계 분석, 자산과 부채 관련 농가경영 안정성에 대한 각종 지표 검증 등은 후속 연구에서 지속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 국내 및 해외 관련 연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 유형별 구분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형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분석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검토한 표준영농규모 접근을 활용⁹하여 농가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연령과 경영규모를 개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농업의존도를 고려해 농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황의식 외 2003).

1. 농가 유형별 분포 형태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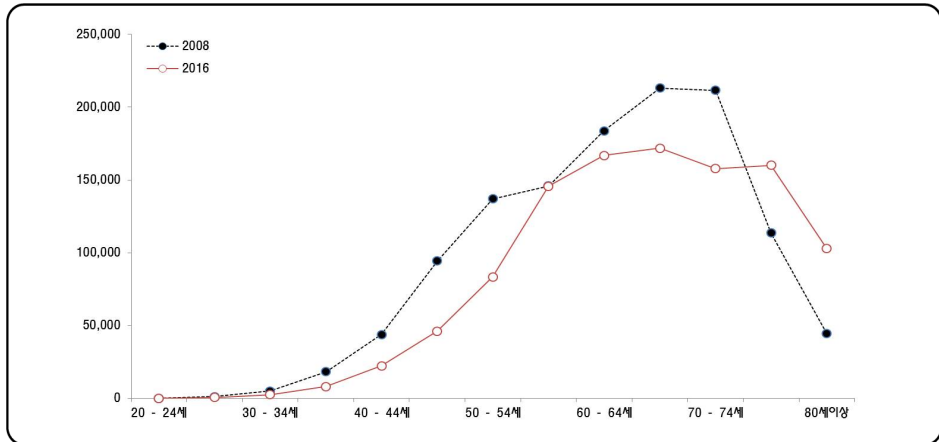
1.1. 농가 유형 개요

2016년도 기준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이상~74세 미만 구간에 속하는 농가 수는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75세 이상 고령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 및 중년 경영주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고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⁹ 최양부 외(1983)와 김미복 외(2016), 우병준 외(2017)의 표준영농규모 산출방식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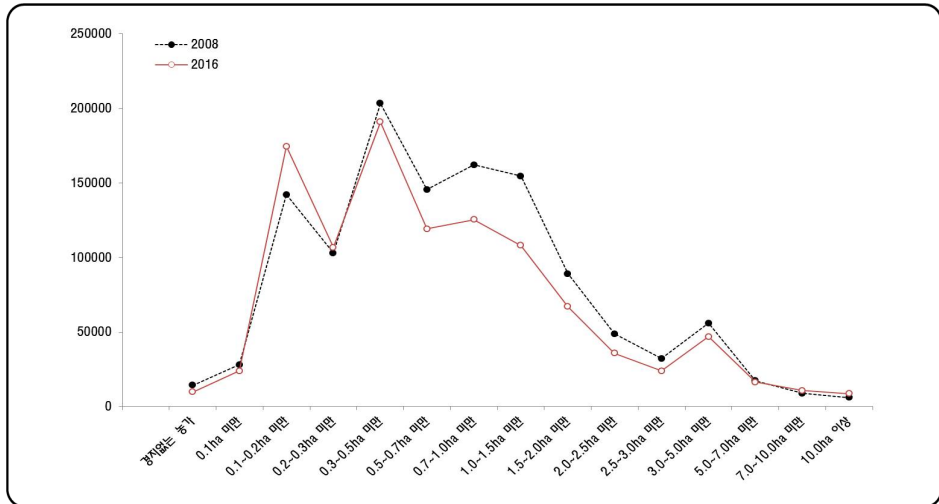
¹⁰ 농가경제조사 자료가 전체 농가 중 표본을 추출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시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그림 4-1〉 연령별 농가 수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그림 4-2〉 영농규모별 농가 수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같은 기간 영농규모별 농가 수 변화 추이의 경우, 0.2ha 미만 및 7ha 이상 구간에 속하는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0.3ha 이상~7ha 미만에 속하는 농가 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영세농과 대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영농규모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가를 유형화하기에 앞서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에 따른 농가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우병준 외(2017)과 같이 2016년도 농가 분포를 12구간으로 세분하였다<표 4-1>. 우병준 외(2017)는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8년도부터 가장 최근 년도인 2016년도까지로 설정하였다.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 대식물, 대동물 등)의 경우 농가의 고정자산별 소유구분에 따라 임대를 제외한 소유, 임차 규모의 합계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농가 유형을 구분하면서 농가의 자산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실제 경영규모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표 4-1〉 표준영농규모-연령에 따른 농가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40세 미만	40~ 45	45~ 50	50~ 55	55~ 60	60~ 65	65~ 70	70~ 75	75~ 80	80~ 85	85~ 90	90~ 95	합계	합계 (누적)
0.5ha 미만	0.04	0.15	0.73	0.45	1.05	2.07	2.87	2.49	3.77	1.83	0.73	0.11	16.30	-
0.5~1.0	0.06	0.16	0.73	1.12	2.19	4.45	5.27	4.08	4.74	4.06	0.72	0	27.58	43.88
1.0~1.5	0	0.09	0.42	0.88	1.26	2.55	2.47	3.03	3.53	1.96	0.12	0.05	16.36	60.24
1.5~2.0	0	0.2	0.11	0.92	1.31	1.59	2.67	2.76	2.63	0.45	0.13	0	12.77	73.01
2.0~2.5	0	0.19	0.02	0.43	0.67	0.81	1.65	1.26	1.26	0.47	0.17	0	6.94	79.95
2.5~3.0	0.03	0	0.13	0.28	0.3	0.98	1.36	1.38	1.03	0.3	0	0	5.8	85.75
3.0~3.5	0	0.04	0.2	0.17	0.41	0.61	0.35	0.56	0.26	0	0.03	0.07	2.69	88.44
3.5~4.0	0	0	0.04	0.03	0.5	0.28	0.37	0.56	0.13	0.29	0.05	0	2.25	90.69
4.0~5.0	0	0.19	0.16	0.03	0.41	0.7	0.76	0.3	0.48	0	0.03	0	3.04	93.73
5.0~15	0.05	0.09	0.24	0.31	0.88	1.5	1.38	0.8	0.37	0.25	0.02	0	5.88	99.61
15~25	0	0	0	0.01	0.16	0.05	0.04	0.05	0	0.04	0	0	0.35	99.96
25~35	0	0	0.01	0.01	0	0.01	0	0	0	0	0	0	0.03	100
합계	0.19	1.11	2.77	4.64	9.15	15.61	19.2	17.26	18.2	9.65	1.98	0.23	100	-
합계(누적)	-	1.3	4.07	8.71	17.86	33.47	52.67	69.93	88.13	97.78	99.76	100	-	-

자료: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65세 이상~70세 미만인 구간과 표준영농규모 0.5ha 이상~1.0ha 미만인 구간이 약 5.27%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표준영농규모 및 연령이 해당하는 구간의 비중은 연령 기준으로 19.2%, 표준영농규모 기준으로는 27.58% 수준이다. 누적합계 기준으로 표준영농규모 및 연령은 각각 43.88%와 52.67%로 해당 구간까지 약 50% 수준의 농가가 집중되어 있다. 연령 기준으로는 해당 구간이 전체 연령 범위에서 중간 수준이나, 표준영농규모로는 전체 표준영농규모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최하위 수준에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표 4-1>과 같이 총 144개 구간으로 세분된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분석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해당 구간에 농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다시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황의식 외(2003), 김미복 외(2016)의 연구는 표준영농규모 2ha와 함께 각각 60세, 65세를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는 우병준 외(2017)과 같이 영농규모와 연령을 3단계씩으로 구분하였다.

〈표 4-2〉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구분 내용

연령	표준영농규모
40세 이하	0.5ha 미만
41세 이상 ~ 64세 이하	0.5ha이상 ~ 2.0ha 미만
65세 이상	2.0ha 이상

자료: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연령별 농가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6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농가가 약 66.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연평균 2.8%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하 농가 비중은 전체의 1% 이하 수준이다. 연도별 평균 연령은 연평균 0.8%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 추이

단위: %, 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1.5	0.9	0.8	0.7	0.6	0.8	0.7	0.7	0.2	-22.9
41세 이상	45.1	43.2	41.6	38.3	35.1	43.2	39.1	36.1	33.3	-3.3
64세 이하										
65세 이상	53.3	55.9	57.6	61	64.4	56.1	60.2	63.2	66.5	2.8
평균 연령	63.9	64.7	65.4	66.2	67.1	65.7	66.7	67.4	68.3	0.8

주: 중간값의 경우 가중치를 미적용한 통계치임.

자료: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도 기준 표준영농규모별 농가 비중은 0.5ha 이상 2.0ha 미만 구간이 약 56.7% 비중을 차지하며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ha 이상의 농가는 연평균 2.7% 감소하고 있으나, 0.5ha 미만의 소농 비중의 경우 연평균 5.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농가 경영의 규모화 관련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 농가가 아닌 전문농 중심의 영농규모 변화, 샘플 변화에 따른 경종농가와 시설·축산 농가 등의 비중 변화 등 다양한 추가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표 4-4〉 표준영농규모별 농가 비중 추이

단위: %, ha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0.5ha 미만	10.6	10.7	11.5	10.8	13.1	14.3	14.2	14.9	16.3	5.5
0.5~2.0	55.9	55.8	55.7	54.3	55.2	55.6	55.3	56.2	56.7	0.2
2.0ha 이상	33.5	33.5	32.8	34.8	31.6	30.1	30.6	28.9	27.0	-2.7
평균(ha)	2	2.1	2	2	2.1	2	2.1	2	1.9	-0.6

주: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일부 수정하여 인용함.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1.2. 유형에 따른 농가 분포

이 연구는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동시에 고려해 총 9개의 그룹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농가 유형에 따른 농가 수 및 비중을 확인한 결과, 40세 이하의 농가 유형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교해 현저하게 낮으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 유형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표준영농규모가 0.5ha 이상~2.0ha 미만이 약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 유형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0.5ha 미만’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8.35%로 가장 높아 고령소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유형별 농가 수 및 비중

단위: 개, %

구분	농가 수		농가 비중		
	2008	2016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7	1	0.17	0.04	-15.79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7	3	0.70	0.06	-26.07
40세 이하 2.0ha 이상	22	4	0.66	0.09	-22.49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07	84	4.17	4.45	0.82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588	418	21.30	18.00	-2.08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586	380	19.70	10.80	-7.24
65세 이상 0.5ha 미만	150	305	6.21	11.80	8.35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829	953	33.90	38.70	1.67
65세 이상 2.0ha 이상	327	452	13.20	16.00	2.43
합계	2,643	2,600	100	100	-

주: 농가 수의 경우 가중치를 미적용한 통계치임.

자료: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농형태에 따른 농가 비중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40세 이하 농가 유형에서는 겸업농가가 유일하며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40세 미만 농가의 비중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영농형태의 변화를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경종농가의 경우 65세 이상 그룹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중 0.5ha 이상~2.0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45.7%를 차지하고 있다. 겸업농가는 41세 이상~65세 미만 그룹과 65세 이상 그룹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축산농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표준영농규모가 2ha 이상인 비중이 가장 크다.

〈표 4-6〉 농가 유형 및 영농형태별 농가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경종농가			축산농가			겸업농가		
	2008	2016	연평균 증감율	2008	2016	연평균 증감율	2008	2016	연평균 증감율
40세 이하 0.5ha 미만	0.09	-	-	-	-	-	0.35	0.121	-12.4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0.42	-	-	2.58	-	-	0.998	0.174	-19.6
40세 이하 2.0ha 이상	0.92	0.04	-32.4	1.73	1.06	-5.9	-	-	-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03	0.90	-1.7	2.11	0.12	-30.1	10.80	10.80	0.0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2.70	9.35	-3.8	18.7	14.1	-3.5	38.90	33.00	-2.0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21.60	10.80	-8.3	37.7	31.1	-2.4	13.40	7.27	-7.4
65세 이상 0.5ha 미만	5.65	11.40	9.2	6.04	2.98	-8.5	7.39	14.30	8.6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39.30	45.70	1.9	26.6	23.2	-1.7	23.80	30.00	2.9
65세 이상 2.0ha 이상	18.30	21.80	2.2	4.57	27.5	25.1	4.31	4.38	0.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2.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자산·부채 실태

2.1.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 실태

2016년 농가소득은 2008년 대비 모든 그룹에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표준영농규모 구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으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다. 즉, 연령이 높고 표준영농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표 4-7>.

〈표 4-7〉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농가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25,606	45,787	7.5	23,670	44,686	8.3	1,936	1,101	-6.8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5,885	74,398	14.1	19,196	74,367	18.4	6,689	31.18	-48.9
40세 이하 2.0ha 이상	62,018	116,577	8.2	56,626	115,001	9.3	5,391	1,576	-14.2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30,455	38,433	3.0	27,067	36,496	3.8	3,388	1,937	-6.8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3,491	52,789	5.9	28,898	49,556	7.0	4,593	3,233	-4.3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44,581	65,433	4.9	39,753	62,294	5.8	4,829	3,139	-5.2
65세 이상 0.5ha 미만	18,622	23,977	3.2	16,020	19,744	2.6	2,602	4,233	6.3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2,178	25,655	1.8	18,274	22,920	2.9	3,904	2,735	-4.4
65세 이상 2.0ha 이상	30,565	37,244	2.5	26,130	33,954	3.3	4,435	3,290	-3.7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임.

2) 40세 이하 그룹의 경우 표본 수가 거의 없어 연도별로 편입되는 농가의 특성에 따라 통계치의 변동이 큼.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경상소득은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지만, 비경상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65세 이상의 소농 그룹만 유일하게 비경상소득이 증가했다.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별 변화를 보기 위해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농업소득의 경우 영농규모에 따라 소득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농가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규모는 작았다. 그러나 농외소득의 경우 2ha 이상의 농가 그룹보다 2ha 미만 그룹의 소득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가 높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4-8〉 농가 유형별 경상소득 구성 변화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4,579	985	-17.5	16,367	43,401	13.0	2,724	300	-24.1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743	1,441	8.6	15,975	72,872	20.9	2,478	53.65	-38.1
40세 이하 2.0ha 이상	40,804	100,559	11.9	10,545	6,611	-5.7	5,277	7,831	5.1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061	1,103	0.5	21,635	29,884	4.1	4,371	5,509	2.9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5,620	7,755	4.1	19,491	34,689	7.5	3,787	7,112	8.2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21,199	33,454	5.9	13,318	19,971	5.2	5,236	8,869	6.8
65세 이상 0.5ha 미만	1,397	1,486	0.8	7,345	8,071	1.2	7,278	10,187	4.3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5,735	5,510	-0.5	6,719	8,561	3.1	5,820	8,850	5.4
65세 이상 2.0ha 이상	14,610	16,209	1.3	5,553	7,372	3.6	5,968	10,373	7.2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임.

2) 40세 이하 그룹의 경우 표본 수가 거의 없어 연도별로 편입되는 농가의 특성에 따라 통계치의 변동이 큼.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2.2. 농가 유형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실태

제3장에서 농가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증감 추이와 변화의 방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가의 자산 및 부채도 표준영농규모를 적용한 유형별 실태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40세 이하 농가의 경우 표본이 10개 미만이며 표준영농규모를 적용한 세부 구분으로 표본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해당 그룹을 대표한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40세 이하 농가에 대한 통계 수치에 대한 해석은 제외한다.

먼저 총자산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의 자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64세 이하 농가(이하 중장년 농가)의 경우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0.5ha 이상~2.0ha 미만 규모(이하 중소농) 농가의 자산 증가속도가 연평균 약 7.3%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고령 그룹의 경우 소농 그룹의 자산 증가 속도가 연평균 약 7.8% 증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대농 그룹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추가적인 자산 증가 속도가 더디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영농규모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자산규모를 비교할 경우, 중소농의 경우 중장년 그룹이 고령 그룹보다 확연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2ha 이상 중대농 그룹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소농의 경우 중장년 소농 그룹의 자산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 그룹에 비해 고령 그룹 소규모 농가의 자산규모 취득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농가 부채는 중장년 중대농 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자산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고 규모가 클수록 부채규모가 크며, 연평균 증가율도 중장년 중소농과 고령 소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농가 유형별 총자산 및 총부채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총자산			총부채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81,101	222,279	13.4	22,814	20,000	-1.6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17,040	250,253	1.8	41,649	16,387	-11.0
40세 이하 2.0ha 이상	415,759	1,151,000	13.6	72,483	127,118	7.3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78,029	240,102	3.8	17,072	24,514	4.6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18,557	558,073	7.3	22,842	40,308	7.4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555,446	696,384	2.9	67,169	64,224	-0.6
65세 이상 0.5ha 미만	146,576	266,454	7.8	3,800	7,576	9.0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37,702	386,725	6.3	8,441	13,036	5.6
65세 이상 2.0ha 이상	438,087	641,509	4.9	16,345	31,821	8.7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표 4-9>의 총량 수준 변화만으로는 농가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 및 부채 종류에 따른 변화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0>에서 농가 고정자산¹¹의 경우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영향을 받아 연령에 관계없이 대농 그룹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총자산과 마찬가지로 중장년 중소농 그룹과 고령 소농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 대농 그룹의 경우 연평균 약 1.3% 증가하여 다른 그룹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¹¹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표 4-10〉 농가 유형별 고정자산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고정자산			고정자산(토지 제외)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61,711	114,088	8.0	33,236	62,786	8.3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79,149	71,558	-10.8	69,510	57,031	-2.4
40세 이하 2.0ha 이상	336,716	1,038,000	15.1	171,959	831,720	21.8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35,138	172,107	3.1	51,070	55,357	1.0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65,523	427,700	6.1	82,127	137,059	6.6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476,160	527,503	1.3	167,400	216,006	3.2
65세 이상 0.5ha 미만	114,148	205,630	7.6	32,214	36,553	1.6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198,202	311,292	5.8	52,859	77,460	4.9
65세 이상 2.0ha 이상	378,358	517,359	4.0	91,446	136,779	5.2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유동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고령 대농 그룹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정 자산과 다소 다른 양상이 다르며, 중장년 중소농은 연평균 약 12.3%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국내 농가의 유형자산¹²의 구조적 특성상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지가 포함된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살펴볼 경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증감 변화가 희석되어 그 특징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¹² 유형자산은 토지, 기계·기구·비품, 대동물·대식물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 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화(轉化)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산을 말한다.

토지를 제외하였을 경우, 연평균 증감률이 감소하는 그룹은 소농 그룹과 고령 중소농이며 특히 소농 그룹의 연평균 증감률 감소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그룹의 유형자산 증가는 대부분 토지 자산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나머지 그룹은 토지 자산의 증가보다는 나머지 유형자산의 증가율이 전체 유형자산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농가 유형별 유형자산 및 유동자산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유형자산			유동자산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61,711	114,089	8.0	19,390	108,190	24.0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79,149	71,558	-10.8	37,892	178,695	21.4
40세 이하 2.0ha 이상	336,716	1,038,000	15.1	79,043	113,136	4.6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35,600	172,275	3.0	42,429	67,827	6.0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67,775	429,805	6.1	50,781	128,268	12.3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478,728	534,935	1.4	76,718	161,449	9.7
65세 이상 0.5ha 미만	114,162	205,835	7.6	32,414	60,618	8.1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198,606	311,600	5.8	39,096	75,125	8.5
65세 이상 2.0ha 이상	378,540	519,037	4.0	59,548	122,473	9.4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표 4-12>에 의하면 토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 규모가 크고 중소농과 대농 그룹의 자산규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기구의 경우 중장년 중대농 그룹의 자산규모가 제일 크고, 고령 대농의 경우 중장년 중대농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약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동물 자산의 경우 소농 그룹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대농 그룹의 경우 중장년 농가는 연평균 약 9.9% 성장하였고, 고령 농가의 경우 연평균 증감률이 약 15.3%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대식물 자산에서는 소농 그룹의 증가율이 해당 연령 내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표 4-12〉 농가 유형별 유형자산 내역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토지			기계·기구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28,475	51,302	7.6	19,329	24,951	3.2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09,638	14,527	-22.3	12,603	16,733	3.6
40세 이하 2.0ha 이상	164,757	206,205	2.8	38,701	41,456	0.9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84,069	116,750	4.2	6,423	7,776	2.4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83,397	290,641	5.9	13,138	17,130	3.4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308,760	311,496	0.1	30,382	40,335	3.6
65세 이상 0.5ha 미만	81,935	169,077	9.5	3,238	3,925	2.4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145,343	233,833	6.1	5,270	7,248	4.1
65세 이상 2.0ha 이상	286,912	380,580	3.6	12,211	19,017	5.7
40세 이하 0.5ha 미만	1,019	0	-100	2	6,090	179.3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9,341	0	-100	1,215	246	-18.1
40세 이하 2.0ha 이상	41,773	575,572	38.8	10,541	0	-100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654	944	-6.8	545	1,918	17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509	5,695	6.2	2,600	4,985	8.5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19,410	41,201	9.9	8,903	21,636	11.7

(계속)

구분	대동물			대식물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65세 이상 0.5ha 미만	673	509	-3.4	376	975	12.7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105	2,455	1.9	2,442	4,101	6.7
65세 이상 2.0ha 이상	5,936	18,551	15.3	5,943	10,237	7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농가 유동자산¹³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 중의 하나인 재고자산의 경우 대농 그룹에서 연령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소농 및 중소농 그룹은 연령에 관계없이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농 그룹 고령 농가의 경우 약 850만 원 수준이고 중장년 농가의 경우 약 1,600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

현재 농가경제조사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산은 미처분농축산물, 소동물, 미사용구입자재 등이 있는데 중장년 대농 그룹이 이와 같은 자산의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당좌자산의 경우 중장년 그룹의 규모가 고령 그룹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농 그룹을 제외하고 큰 차이는 없으며, 모든 그룹에서 연평균 약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¹³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당좌자산은 금융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은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이다.

〈표 4-13〉 농가 유형별 유동자산 내역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재고자산			당좌자산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515	38	-27.9	18,875	108,153	24.4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548	732	-14.4	35,344	177,963	22.4
40세 이하 2.0ha 이상	9,820	5,900	-6.2	69,222	107,236	5.6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189	1,129	-0.6	41,240	66,698	6.2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2,741	3,182	1.9	48,040	125,086	12.7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10,423	16,524	5.9	66,296	144,924	10.3
65세 이상 0.5ha 미만	1,114	1,163	0.5	31,300	59,456	8.4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987	2,930	-0.2	36,109	72,195	9.0
65세 이상 2.0ha 이상	6,783	8,558	2.9	52,764	113,915	10.1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자산의 사용 목적에 따른 농가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용도별 자산 중 농업용 자산의 규모가 모든 그룹에서 가장 크고 소농 그룹의 연평균 증감률이 약 7%로 가장 높다.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농과 중대농 그룹이 2016년도 기준으로 각각 1억 7천만 원, 3억 원 규모인데,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고령 그룹이 중장년 그룹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중장년 대농의 경우 연평균 약 0.6%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용 자산 다음으로 가계용 자산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령 그룹의 소농 및 대농 농가의 경우 기타용 자산규모가 가계용 자산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용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중소농으로 연평균 약 6% 증가하여 전체 그룹 중 가계용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그룹이 3% 이상의 연평

균 증가율을 보이거나 중장년 소농의 경우 연평균 약 1.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겸업용 자산의 경우 중소농 그룹의 연평균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중장년 중소농 그룹의 경우 연평균 약 21% 증가하여 2016년도 기준 약 5천 5백만 원 규모로, 다른 그룹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타용 자산의 경우 고령 소농과 중장년 중소농 그룹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자산에 대한 농가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 그룹의 경우 기타용 자산을 제외하고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자산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년 그룹의 경우 농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경우, 대농 그룹보다 중소농 그룹의 자산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 대농의 경우는 가계용 자산을 제외하고는 자산 수준이 감소하거나 전반적으로 증가가 정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4-14〉 농가 유형별 용도별 자산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농업용			가계용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24,503	18,269	-3.6	24,473	71,870	14.4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98,144	16,459	-20.0	45,962	37,906	-2.4
40세 이하 2.0ha 이상	222,130	388,507	7.2	41,358	44,048	0.8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42,244	72,614	7.0	54,905	60,759	1.3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43,910	169,848	2.1	65,513	105,392	6.1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296,126	311,758	0.6	67,043	88,270	3.5
65세 이상 0.5ha 미만	38,224	67,177	7.3	39,767	51,852	3.4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105,211	154,786	4.9	49,801	75,618	5.4
65세 이상 2.0ha 이상	228,056	306,390	3.8	56,875	77,380	3.9

구분	겸업용			기타용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10,322	0	-100.0	1,392	17,860	37.6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8,148	16,947	-0.9	6,339	0	-100.0
40세 이하 2.0ha 이상	7,031	510	-28.0	13,884	29,287	9.8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2,470	3,506	4.5	33,783	32,534	-0.5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1,645	55,454	21.5	40,602	88,432	10.2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18,442	19,532	0.7	68,802	52,539	-3.3
65세 이상 0.5ha 미만	1,252	2,653	9.8	33,870	82,671	11.8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668	8,420	15.4	36,380	66,220	7.8
65세 이상 2.0ha 이상	14,106	18,873	3.7	67,624	87,605	3.3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농가 부채 중 고정부채의 경우 중장년 대농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대농의 고정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약 11.5%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으나, 중장년 대농의 경우 연평균 약 0.4% 증가에 그쳤다. 고정부채의 규모는 표준영농규모에 비례하고 있으며 중장년 그룹이 고령 그룹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농가 유형별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구분	고정부채			유동부채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17,407	20,000	1.8	5,407	0	-100.0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6,257	15,777	-9.9	5,392	610	-23.9
40세 이하 2.0ha 이상	30,037	124,180	19.4	42,446	2,939	-28.4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4,565	23,164	6.0	2,507	1,350	-7.4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9,592	33,997	7.1	3,250	6,369	8.8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55,590	57,342	0.4	11,578	6,882	-6.3
65세 이상 0.5ha 미만	3,213	6,273	8.7	588	1,303	10.5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7,060	11,646	6.5	1,381	1,390	0.1
65세 이상 2.0ha 이상	12,261	29,230	11.5	4,085	2,591	-5.5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용도별 부채도 대부분 영농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 중소농의 경우 농업용 부채를 제외하고 중장년 대농 그룹의 부채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부채의 경우 중장년 중소농을 제외한 대부분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그룹은 중장년 소농으로 연평균 약 16.1% 증가했다. 고령 소농도 연평균 약 12.5%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4-16>.

〈표 4-16〉 농가 유형별 용도별 부채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농업용			가계용		
	2009	2016	연평균 증감률	2009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0	0	-	4,364	20,000	24.3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0,112	3,083	-27.8	21,066	4,864	-18.9
40세 이하 2.0ha 이상	88,721	121,564	4.6	4,303	5,554	3.7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854	5,257	16.1	7,045	12,953	9.1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2,895	9,823	-3.8	9,024	13,867	6.3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38,742	44,112	1.9	13,193	11,874	-1.5
65세 이상 0.5ha 미만	594	1,352	12.5	3,392	4,000	2.4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820	4,153	5.7	3,183	3,711	2.2
65세 이상 2.0ha 이상	10,448	16,623	6.9	6,594	7,581	2.0

구분	겸업용			기타용		
	2009	2016	연평균 증감률	2009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0	0	-	0	0	-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52	8,439	106.6	0	0	-
40세 이하 2.0ha 이상	87	0	-100.0	0	0	-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878	18	-48.6	5,138	6,286	2.9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5,087	10,531	11.0	3,984	6,086	6.2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6,780	3,282	-9.8	6,160	4,957	-3.1
65세 이상 0.5ha 미만	169	43	-17.7	1,339	2,181	7.2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319	1,858	28.6	2,074	3,315	6.9
65세 이상 2.0ha 이상	406	686	7.8	1,972	6,931	19.7

주: 용도별 부채의 경우 2009년도부터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관계로 최초 시점을 2009년도로 조정함.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표 4-16>의 가계용 부채는 중장년 대농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고령 그룹보다 중장년 그룹의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용 부채는 그룹별로 증감하는 양상이 달랐다. 소농 그룹의 경우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장년 소농 그룹의 경우 연평균 약 48.6%로 크게 감소하였고 고령 소농 그룹의 경우 연평균 약 17.7%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소농 그룹의 경우 대농 그룹의 겸업용 부채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장년 그룹은 연평균 약 11% 증가하였고 고령 중소농의 경우 연평균 약 2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용 부채는 겸업용 부채와 마찬가지로 청장년 대농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농가 부채 증가 형태를 정리하면, 중장년 소농은 모든 용도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중소농 그룹은 농업용 부채를 제외하고, 대농 그룹은 기타용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그룹의 경우 고령 소농의 겸업용 부채 감소를 제외하면 모두 증가하고 있다.

3. 농가 유형별 주요 특성 변화

3.1. 영농형태 변화

농가 유형별 영농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일반 밭작물 등을 경종농가로 통합하여 농가 유형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종농가의 경우 모든 그룹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장년 소농 그룹의 연평균 감소율이 3.8%로 가장 크다<표 4-17>.

전체 유형 중에서 경종농가의 비중이 50% 이상인 그룹은 중장년 대농과 소농 그룹 전체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의 경우 농가 유형 중 중장년 대농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로 가장 높다.

소농 그룹의 경우 축산농가에 속하는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중장년 소농의 경우 축산농가에 속하는 비중의 감소율이 연평균 31.7%에 달해 소규모 축산농가가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 소농의 경우도 연평균 12.6% 이상 감소하였다.

기타 농가의 경우 대농 그룹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영농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2종 겸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대체로 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 소농 및 중소농의 경우 전체 영농형태 중 2종 겸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6.8%와 65.8%로 매우 높으며, 고령 소농 그룹도 전체 영농형태 중 43.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7〉 농가 유형별 영농형태 변화

단위: %

구분	경종			축산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34.3	0.0	-	0.0	0.0	-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8.5	0.0	-	15.7	0.0	-100.0
40세 이하 2.0ha 이상	87.7	29.3	-12.8	11.1	70.7	26.0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5.6	11.4	-3.8	2.1	0.1	-31.7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7.8	29.7	-3.0	3.7	4.5	2.5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이상	69.5	56.8	-2.5	8.1	16.3	9.1
65세 이상 0.5ha 미만	57.5	55.0	-0.6	4.1	1.4	-12.6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73.4	67.4	-1.1	3.3	3.4	0.4
65세 이상 2.0ha 이상	87.3	77.3	-1.5	1.5	9.8	26.4

구분	기타			2종겸업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0.0	0.0	-	65.7	100.0	5.4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0.0	0.0	-	45.8	100.0	10.3
40세 이하 2.0ha 이상	1.3	0.0	-100.0	0.0	0.0	-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0.0	1.6	-	82.3	86.8	0.7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0.3	0.1	-12.8	58.2	65.8	1.5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이상	0.6	2.9	21.8	21.8	24.0	1.2
65세 이상 0.5ha 미만	0.5	0.3	-6.2	37.9	43.3	1.7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0.9	1.4	5.7	22.4	27.8	2.7
65세 이상 2.0ha 이상	0.8	3.1	18.4	10.4	9.8	-0.7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3.2. 전·겸업 형태 변화

전·겸업 형태에 따른 농가 비중은 고령 그룹의 경우 농가 모두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업농가 비중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중장년 그룹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룹과 고령 소농 그룹은 2종 겸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규모가 큰 농가는 상대적으로 전업농가 비중이 크고, 영농규모가 영세할수록 2종 겸업의 비중이 크다<표 4-18>.

〈표 4-18〉 농가 유형별 전·겸업 형태 변화

단위: %

구분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30	0.0	-100	4	0.0	-100	66	100	5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45	0.0	-100	9	0.0	-100	46	100	10
40세 이하 2.0ha 이상	45	63	4	55	37	-5	0.0	0.0	-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4	11	-3	3	2	-7	82	87	1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32	26	-2	10	8	-3	58	66	2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48	43	-1	30	33	1	22	24	1
65세 이상 0.5ha 미만	60	50	-2	2	7	14	38	43	2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67	61	-1	11	12	1	22	28	3
65세 이상 2.0ha 이상	77	71	-1	13	19	5	10	10	-1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3.3. 주·부업 형태 변화

농가 영농형태가 대농 그룹인 경우 주업(전문) 농가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농 그룹 중 중장년과 고령 농가의 비중이 각각 71%와 63%를 차지하고 있다<표 4-19>.

주업 농가 중 전문 농가의 비중은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중소농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일반 농가의 비중이 약 53.6%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 농가의 경우 고령 소농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주업 농가의 구조가 전문 농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농 그룹의 부업 농가 비중이 연평균 약 18%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가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자급 농가는 소농 그룹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영농규모가 클수록 주업 농가의 비중이 크고, 영세한 농가일수록 자급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표 4-19〉 농가 유형별 주·부업 형태 변화

단위: %

구분	주업					
	전문			일반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29.9	0.0	-100.0	4.4	0.0	-100.0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1.9	0.0	-100.0	40.0	0.0	-100.0
40세 이하 2.0ha 이상	92.1	92.6	0.1	3.9	7.4	8.3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2.2	3.0	4.0	5.4	5.2	-0.5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16.5	19.2	1.9	23.4	12.6	-7.4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66.4	71.4	0.9	11.4	4.0	-12.3
65세 이상 0.5ha 미만	0.4	1.7	19.8	27.2	29.2	0.9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7.4	13.4	7.7	65.6	53.6	-2.5
65세 이상 2.0ha 이상	61.4	63.5	0.4	28.1	23.5	-2.2

구분	부업			자급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0.0	0.0	-	65.7	100.0	5.4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0.0	0.0	-	45.8	100.0	10.3
40세 이하 2.0ha 이상	1.3	0.0	-100.0	0.0	0.0	-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0.0	1.6	-	82.3	86.8	0.7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0.3	0.1	-12.8	58.2	65.8	1.5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0.6	2.9	21.8	21.8	24.0	1.2
65세 이상 0.5ha 미만	0.5	0.3	-6.2	37.9	43.3	1.7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0.9	1.4	5.7	22.4	27.8	2.7
65세 이상 2.0ha 이상	0.8	3.1	18.4	10.4	9.8	-0.7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4. 시사점

4.1. 다양한 농가 유형화 접근 방법 검토 필요

미국과 EU 모두 농업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균적 관점에서 농가나 농업경영체를 보지 않고 일정한 기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표준영농규모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농형태를 보이는 농가들을 토지면적 중심의 영농규모라는 물리적 기준으로 환산 및 표준화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경영 규모화와 단위면적당 생산성 제고를 통한 소득 증가 및 경쟁력 제고라는 과거 농업정책의 전개에서는 표준영농규모를 활용한 접근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도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하고 있지만, 소득 확대와 소득 안정성 제고 문제 등 농업경영체의 소득 관련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EU처럼 소득의 관점에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농가 경제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는 농가소득 또는 농업경영체의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 신뢰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소득에 기초한 농가 유형화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의 소득 내용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검증작업이 병행되거나 현재 비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 농가에 사업자등록 및 농업소득세가 부과되어 농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2. 표준영농규모 접근 재검토

국내 농가 유형화 목적으로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준영농규모 개념은 통계청이 발행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여기서는 대·소동물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집계하고 있다.

대·소동물은 사육 목적에 따라 농가의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중간 생산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는 대동물을 고정자산으로, 소동물은 유동자산으로 획일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이를 표준영농규모 산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보다 자산규모가 다소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 4-20>과 같이 자산 구분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농가의 대동물과 소동물에 대한 자산 성격을 구체적으로 재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대동물 중 비육 목적으로 사육되는 수컷과 새끼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소동물인 산란계는 유동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표 4-20〉 축종별 자산 구분 기준 재설정

구분	고정자산		유동자산(중간 생산물)	
	축종	구분	축종	구분
대동물	한우	암컷	한우	수컷, 새끼
	젖소	암컷	젖소	수컷, 새끼
	돼지	암컷	돼지	수컷, 새끼
	양(염소)	암컷	양(염소)	수컷, 새끼
	사슴	-	개	-
	타조	-	기타 대동물	-
	꿀벌	-		
소동물	닭	산란계	닭	육계
			토끼	-
			오리	-
			기타 소동물	-

주: 통계청의 2008년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재분류함.

자료: 통계청 MDIS(2008).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현재 농가경제조사에서 대동물은 한우, 젓소, 돼지, 양, 염소, 사슴, 타조, 개, 꿀벌, 기타 대동물(명시된 대동물을 제외한 나머지와 성축 가격이 마리(군)당 10만 원 이상인 동물) 등이 해당한다. 소동물은 토끼, 닭(산란계·육계) 오리, 기타 소동물(거위, 칠면조, 메추리, 관상조, 꿩, 고양이 등) 등이 해당한다.

<표 4-20>의 구분을 적용하여 표준영농규모를 새롭게 계산하고 그 결과가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했다. <표 4-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자산 구분기준을 2008년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적용한 결과(B)는 기존 방식으로 표준영농규모를 계산한 경우(A)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표 4-21> 축종별 자산 구분 적용한 유형별 농가 비중

단위: 개, %

구분	농가 비중		
	2008년(A)	2008년 수정(B)	차이(A-B)
40세 이하 0.5ha 미만	0.17%	0.17%	0.00%
40세 이하 0.5ha 이상~2.0ha 미만	0.70%	0.70%	0.00%
40세 이하 2.0ha 이상	0.66%	0.66%	0.00%
41세 이상~64세 이하 0.5ha미만	4.17%	4.19%	-0.02%
41세 이상~64세 이하 0.5ha이상~2.0ha미만	21.32%	21.42%	-0.10%
41세 이상~64세 이하 2.0ha이상	19.65%	19.54%	0.11%
65세 이상 0.5ha 미만	6.21%	6.21%	0.00%
65세 이상 0.5ha 이상~2.0ha 미만	33.89%	33.91%	-0.02%
65세 이상 2.0ha 이상	13.22%	13.20%	0.02%
합계(농가수)	2,643	2,643	

자료: 통계청 MDIS(2008).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예상과 달리 두 방식 사이의 차이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전체 표본 농가에서 소동물을 사육하는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들 농가의 사육마릿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란계를 고정자산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최신의 2016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2008년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농가경제조사 자료 이용 제약 때문이다. 2013년에 통계청의 표본설계 방식이 변화하고 조사표본이 변한 이후부터 농가경제조사의 대동물과 소동물 구분은 제공되지만, 축종별 구분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축종별 구분이 가능한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통계청 조사방식 및 자료 공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4.3. 농가소득 분류 재검토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이전소득은 과거보다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2003년 농가경제조사 개편 과정에서 공적보조금 항목에 농업보조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고정 직접지불금은 농업보조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농가경제조사의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반면 변동 직접지불금은 이전소득이 아닌 농업소득(농업잡수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분은 쌀 생산과 직접 연결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만약 지금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체계가 다른 형태로 개편될 경우 농가소득 구성 원천의 상대적 비중이 바뀔 수 있다. <표 4-22>는 변동 직접지불금(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으로 분류됨)이 수입보장보험 형태로 변환되어 해당 금액만큼 농업소득(농업잡수입)이 감소하고 그 대신 이전소득이 증가할 경우의 이전소득 변화율을 보여준다. <표 4-22>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소득피해보상금이 이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표준영농규모가 2ha 이상인 농가의 이전소득은 과거보다 약 15% 이상 증가한다.

〈표 4-22〉 농업소득피해보상금 반영에 따른 이전소득 변화(2016년 기준)

단위: 천 원, %

구분	농가 비중		
	기존 이전소득(A)	수정 이전소득(B)	변화율(A/B)
40세 이하 0.5ha 미만	300	300	0.0%
40세 이하 0.5ha 이상~2.0ha 미만	54	54	0.0%
40세 이하 2.0ha 이상	7,831	11,042	41.0%
41세 이상~64세 이하 0.5ha 미만	5,509	5,573	1.2%
41세 이상~64세 이하 0.5ha 이상~2.0ha 미만	7,112	7,498	5.4%
41세 이상~64세 이하 2.0ha 이상	8,869	10,554	19.0%
65세 이상 0.5ha 미만	10,187	10,274	0.9%
65세 이상 0.5ha 이상~2.0ha 미만	8,850	9,284	4.9%
65세 이상 2.0ha 이상	10,373	11,884	14.6%

자료: 통계청 MDIS(201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농업피해보상금의 이전소득 반영 여부는 농가경영형태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논벼농가와 축산농가의 농업피해보상금을 농업잡수입이 아닌 이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이전소득 변화 효과를 계측했다. 분석 결과, 변동 직접지불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논벼농가의 이전소득이 축산농가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축산농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농가보다는 중장년층의 이전소득이 더 크게 증가한다. 이는 중장년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업 전업보다는 벼농사를 겸업하는 농가가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4-23>.

94 농가 유형별 주요 지표 변화

〈표 4-23〉 농업소득피해보상금 반영에 따른 논벼 및 축산농가 이전소득 변화

단위: 천 원, %

구분	논벼농가(2016년도 기준)			축산농가(2016년도 기준)		
	기존 이전소득(A)	수정 이전소득(B)	변화율(A/B)	기존 이전소득(A)	수정 이전소득(B)	변화율(A/B)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3,452	3,766	9.1	216.4	216.4	0.0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이상 2.0ha미만	10,443	11,258	7.8	14,409	14,771	2.5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10,559	14,559	37.9	9,654	10,988	13.8
65세 이상 0.5ha 미만	12,678	12,852	1.4	7,844	7,844	0.0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9,221	9,925	7.6	7,090	7,455	5.1
65세 이상 2.0ha 이상	10,807	13,072	21.0	10,549	11,445	8.5

자료: 통계청 MDIS(201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1. 분석 필요성과 목적

농업은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 소득이 매우 크게 변동하며 이에 따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성도 높다. 불안정성이 높으면 농가가 생애에 걸쳐 소비수준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인 농업소득 확보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는 우리나라 농정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정책목표로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는 직불제, 농업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이들 농가소득 안정정책이 전체 농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 안정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1%에 이른다(2017년 기준). 따라서 농가의 소득변동성을 측정하여 농가의 소득변동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소득변동성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동성,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변동이 잦은 가구는 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가구의 계층이동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변동성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분야이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9년간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또한 어떤 요소들이 농가소득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득변동 관련 연구 동향

소득변동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근로자의 임금변동성과 가구 소득의 변동성을 다루는 연구로 나뉘어진다. 임금변동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임금변동성의 원인과 결과를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소득변동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경제 전체의 변동성과 소득변동성을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득(또는 임금)변동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소득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이계수, 호 변동률의 분산(Variance of arc percent change) 등 개인의 소득이 일정 기간 얼마나 변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와 개인 소득의 일시적 변동 폭이 가구(또는 개인) 간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Akpan and Udoh(2016), Hannagan and Morduch(2015), Maag et al.(2017), Key et al.(2017) 등은 변이계수를 이용하였으며, Hardy and Ziliak(2014), Dynan et al.(2007) 호 변동률의 분산(또는 표준편차)을 이용하여 소득변동성 추이를 살펴보았다. Van Kerm(2003)은 두 시점 간 소득 차의 로그를 이용하여 유럽국가의 소득변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 소득의 일시적 변동 폭이 가구(또는 개인) 간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두 시점 사이의 임금 잔차 차이의 횡단면적 분산을 통해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소득변동성은 $Var(\log E_{it}^R - \log E_{it-1}^R)$ 이 된다. 여기에서 E_{it}^R 는 개인 i 가 t 년도에 얻은 수입(earnings)을 연령, 교육수준, 인종, 지역 등의 개인 고유 특성에 대해 회귀분석 후 얻은 잔차이다.

소득변동성의 원인이나 소득변동성이 가구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기반으로 접근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용성 외(2015)와 박영선·유종순(2013)의 연구가 있다. 외국에서 가구의 소득(또는 임금)의 변동성을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Bania and Leete(2009), Carey and Shore(2013), Celik et al.(2012)

Dynarsky and Gruber(1997), Dynan et al.(2012), Gottschalk and Moffitt(1994), Hardy and Ziliak(2014), Nunley and Seals(2010), Jensen and Shore(2011, 2015), Shin and Solon(2011) 등이 있다.

소득변동성의 원인과 과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에서도 Gottschalk and Moffitt(1994)는 소득변동성 연구의 선구자적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 Gottschalk and Moffitt(1994)은 개인의 소득을 연령, 교육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 영속적 요소(permanent component)와 일시적 요소(transitory component)로 나누고 개인 소득의 변동성을 영속적 요소의 변동성과 일시적 요소의 변동성의 합으로 보았다. Gottschalk and Moffitt(1994)은 가구의 소득 또는 임금변동성이 영속적 요소의 변동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 요소의 변동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임금변동성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소득변동성에 관한 연구는 분석 대상이 비농가(또는 전체 가구)인지 농가인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소득변동성에 관해 진행된 연구 중 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김용성 외(2015)가 있다. 김용성 외(2010)는 임금을 대상으로 소득변동성 추세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없었다. 국내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농가소득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농가소득 결정요인이나 불평등도에 많이 치우쳐 있으며, 농가소득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그 이유는 소득변동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패널 자료의 부재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가소득에 관한 패널 자료가 없지만, 농가경제조사가 5년 단위의 패널 자료라는 점을 이용하여 황의식·문한필(2003), 황의식(2004), 황의식·문한필(2005) 등은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황의식·문한필(2003)은 IMF 외환위기가 농가소득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황의식(2004)는 농가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떤 양태로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변동성 지표를 개발, 농가소득 변동 양태를 유형화하였다. 황의식·문한필(2005)은 경영주 연령, 농업경영 규모, 부채 비율,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부채규모 등의 특성과

농가소득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외국에서 농가의 소득변동성을 분석한 연구는 Key et al.(2017)이 있다. Key et al.(2017)은 농가의 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농가의 소득 위험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소득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패널 자료를 많이 이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횡단면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변동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나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과 같은 패널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연도별 소득변동을 분석한 연구는 PSID를, 월별 소득변동 분석에는 SIPP을 주로 이용하였다.

반면 횡단면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표본이 바뀌어 개인의 소득 변동을 추적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두 번 이상 표본에 포함되는 가구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이 소득변동성 분석에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CPS)는 매년 표본이 바뀌는 횡단면 자료이지만 한 샘플 중 절반은 4년을 주기로 두 번 표본에 포함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두 기간 간 소득변동성 추이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또한, 미국 농가의 소득변동성을 분석한 Key et al.(2017)은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ARMS)를 이용하였는데 두 번 이상 표본에 포함된 농가를 추출하여 패널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은 연구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모수적 접근은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어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두 시점 간의 소득변화를 포착하여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소득정보가 들어간 패널 자료는 없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는 횡단면 자료이지만, 표본이 매년 5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5년 단위로는 각 농가의 소득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⁴

3. 소득변동성 지표 검토

3.1. 소득변동성 지표: 변이계수

농가소득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변이계수 (=표준편차/평균)이다.

$$CV_i = \frac{\sqrt{E_t[(x_{it} - E(x_{it}))^2]}}{E_t(x_{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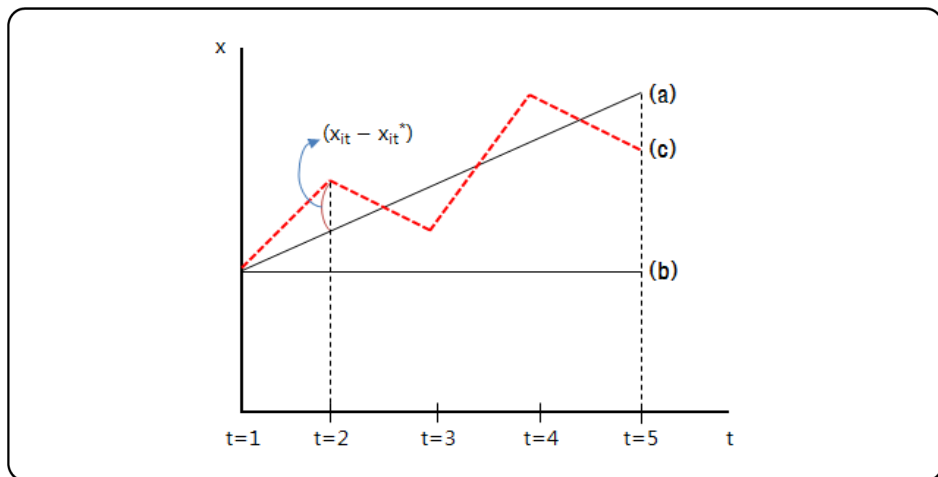
변이계수는 계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가소득의 추세적 변화와 변동 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가소득이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는 농가(a)와 농가소득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농가(b)를 비교해볼 수 있다<그림 5-1>.

<그림 5-1>에서 a 농가는 소득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였으나 b 농가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 두 농가의 변이계수를 계산하면 a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a 농가의 변이계수가 b 농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의 불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두 농가는 동일하다. c 농가와 같이 소득이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변이계수는 그 값이 일정 범위 내로 한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극단적 관측치는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가구의 평균소득이 음수인 경우에는 변이계수 값도 음수가 되어 분석을 위해서는 변이계수의 절댓값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이계수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¹⁴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2003, 2008, 2013년에 바뀌었다.

〈그림 5-1〉 농가소득 변동 예



3.2. 소득변동성 지표: 황의식(2004) 연구¹⁵

황의식(2004)은 농가의 소득변동을 추세적 변동과 일시적 변동으로 구분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즉, 초기 소득을 기준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농가, 초기 소득을 유지하는 농가, 초기 소득보다 감소하는 농가로 구분하여 유형별 농가의 일시적 소득변동 폭을 계산하였다.

농가의 추세적 변동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연도의 소득이 초기 소득(x_{i1})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i 는 개별 농가를 의미하며,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가경제조사는 5년 단위의 패

¹⁵ 해당 방법은 농가의 소득이 분석 기간 지그재그 형태로 변동하였는지 또는 선형으로 변동하였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을 다르게 측정하고 있음.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농가의 소득이 매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널이므로 t 는 1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진다.

$$\mu x_{it} = \frac{x_{it} - x_{i1}}{x_{i1}}$$

μx_{it} 를 기간에 대해 평균하면 각 농가의 소득이 초기 소득보다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또는 정체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ϵ_i)가 된다.

$$\epsilon_i = E_t(\mu x_{it})$$

농가소득이 분석 기간 증가하였다면 ϵ_i 값은 양수가 되고 감소하였다면 ϵ_i 값은 음수가 된다. 정체하는 경우에는 ϵ_i 값이 0이 된다.

그다음은 ϵ_i 값을 이용하여 해당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선형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매해의 소득을 계산한다. 만약 농가소득이 매년 $\alpha(\neq 0)$ 배만큼 선형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면 각 가구의 연도별 농가 소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⁶

$$\begin{aligned} x_{i1} &= x_{i1} \\ x_{i2} &= (1 + \alpha)x_{i1} \\ x_{i3} &= (1 + 2\alpha)x_{i1} \\ x_{i4} &= (1 + 3\alpha)x_{i1} \\ x_{i5} &= (1 + 4\alpha)x_{i1} \end{aligned}$$

위의 수식을 μx_{it} 에 대입하여 평균을 구하면 각 농가의 ϵ_i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¹⁷ 즉, 한 농가의 실제 소득이 분석 기간 선형으로 변화하였다면 아래의 식이 성립된다.

¹⁶ α 는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수이며 0을 제외한 어떠한 숫자도 될 수 있다.

¹⁷ 분석 기간이 변하면 ϵ_i 도 달라진다.

$$\epsilon_i = \frac{\alpha + 2\alpha + 3\alpha + 4\alpha}{5} = 2\alpha$$

만약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증가하였다면 각 연도의 농가소득은 ϵ_i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x_{i1}^* &= x_{i1} \\ x_{i2}^* &= (1 + \frac{1}{2}\epsilon_i)x_{i1} \\ x_{i3}^* &= (1 + \epsilon_i)x_{i1} \\ x_{i4}^* &= (1 + \frac{3}{2}\epsilon_i)x_{i1} \\ x_{i5}^* &= (1 + 2\epsilon_i)x_{i1} \end{aligned}$$

x^* 는 각 농가의 소득이 매년 선형으로 이동할 경우의 소득수준을 가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득불안정성의 측정은 실제 농가소득이 가상적인 농가소득(x_{it}^*)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측하는 것이다. 즉, <그림 5-1>에서 붉은색 점선과 검은색 실선 사이의 편차가 소득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δx_{it} 는 t 연도의 소득과 가상소득(x_{it}^*)의 차이를 가상소득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delta x_{it} = \frac{x_{it} - x_{it}^*}{x_{it}^*}$$

이에 각 농가의 농가소득이 가상의 농가소득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δ_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lta_i = \sqrt{E_t[(\delta x_{it})^2]}$$

$\delta_i \geq 0$ 이며 δ_i 가 0이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선형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의 변동 폭이 클수록 δ_i 값이 커진다.

황의식(2004)의 접근방식은 장기적 추세와 일시적 변동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변이계수보다는 진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지표 계산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농가의 소득변동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소득의 장기적 추세보다는 일시적 변동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 즉 δ_i 를 중심으로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3. 소득변동성 지표: SDAPC

호 변동률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Arc Percent Change: SDAPC)는 두 기간 사이의 소득변동률(arc percent change)의 표준편차를 소득변동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SDAPC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SDAPC_t = \sqrt{Var \left\{ 100 \cdot \frac{x_{it} - x_{it-1}}{\overline{x_i}} \right\}}$$

여기에서 x_{it} 는 개인 i 의 특정 연도 t 의 소득을 의미하며 $\overline{x_i}$ 는 두 기간 소득의 단순평균을 의미한다. SDAPC는 앞서 제시한 변이계수나 황의식(2004)의 지표와는 달리 횡단면적 표준편차를 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인(또는 개별가구)의 소득변동성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분포도 함께 내포한다. 또한, SDAPC의 장점은 소득변동 폭이 -200%에서 200%로 한정되어 안정적인 패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SDAPC를 이용하여 소득변동성을 분석한 연구에는 Ziliak et al.(2011), Dynan et al.(2007), Hardy and Ziliak(2014), Key et al.(2017) 등이 있다.

4. 분석 결과

4.1. 2013년 전후 소득변동성 비교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교체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2008~2012, 2013~2016) 최근 9년간의 소득변동성 추이를 살펴보았다.

변이계수와 황의식(2004)의 소득변동성 지표를 통해 살펴본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최근 들어 축소되고 있다.¹⁸ 2008~2012년과 2013~2016년의 두 기간 사이 농가소득 변이계수를 계측한 결과 농가소득은 0.287에서 0.244로 감소하였다. 농가소득의 변동 양상을 추세(ϵ)와 추세로부터의 편차(δ)로 나누어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2008~2012년보다 2013~2016년의 농가소득은 추세와 편차 모두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농가소득은 2013~2016년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이전 기간보다 감소하였고 편차 또한 작아져 전체적으로 소득변동성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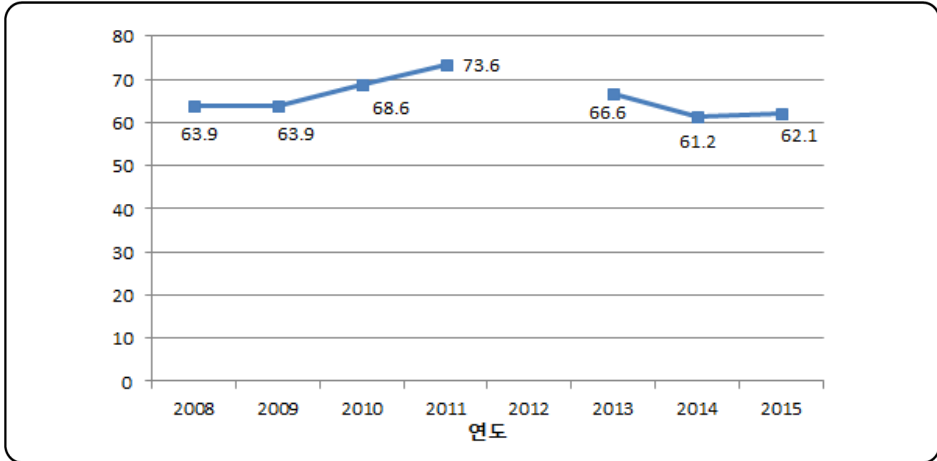
〈표 5-1〉 2008~2012년, 2013~2016년의 소득변동성 비교

소득변동성 지표		2008~2012년	2013~2016년
변이계수		0.287	0.244
황의식(2004)	ϵ	0.579	0.310
	δ	0.774	0.39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¹⁸ 분석의 안정성을 위하여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2배의 범위 밖에 있는 이상치(outlier)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5-2〉 SDPAC로 나타낸 농가 소득변동성 추이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두 기간 사이에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감소한 것은 SDA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의 SDAPC는 63.9였으며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SDAPC는 73.6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의 소득변화율의 표준편차는 이전 기간보다 낮게 나타나 2014년에는 SDAPC가 61.2까지 하락하였다.

두 기간 사이의 소득변동성 차이는 당시의 농업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변동성이 경기 역행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하락하면서 농산물 경기 또한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농가경제 상황이 호전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경기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고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2008~2012년의 농가판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농가교역조건의 변이계수가 2013~2016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¹⁹ Shin and Solon(2008)은 임금변동성이 경기 역행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불경기에는 임금변동성이 높아지다가 호경기에는 임금변동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2〉 2008~2012년, 2013~2016년의 농산물 관련 물가 변동 비교

연도	농가판매가격지수 (2010=100)	농가구입가격지수 (2010=100)	농가교역조건 (2010=100)
2008	91.9	94.4	97.4
2009	93.4	98.5	94.8
2010	100	100	100
2011	107.6	103.5	104
2012	117.5	106.1	110.7
2013	113.2	107.1	105.7
2014	111.3	108.4	102.7
2015	113.8	109	104.4
2016	113.4	109.3	103.8
2008~2012년 변이계수	0.104	0.045	0.061
2013~2016년 변이계수	0.010	0.009	0.0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4.2. 소득원천별 비교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원천별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농업소득은 농축산물 생산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해 발생 여부나 재해 강도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농외소득은 농업 외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근로소득, 임대료, 배당금, 이자, 유가증권매매차익 등의 자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나 가족구성원의 취업상태,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서 소득변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과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변화,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을 이전하여주는 주체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경상 소득은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경조수입, 퇴직금, 사고보상금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원천별로 변이계수를 계산한 결과,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면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전소득의 변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²⁰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농산물의 가격과 수확량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매해의 자연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

〈표 5-3〉 농가 소득원천별·기간별 변이계수

구분		2008~2012년	2013~2016년
농가소득		0.287	0.244
	농업소득	1.036	0.819
	농외소득	0.291	0.266
	이전소득	0.209	0.172
	비경상소득	0.449	0.38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4.3. 소득계층별·경지규모별 소득변동성 비교

소득의 불안정성은 소득계층과 영농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라서 경영주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은 소득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변동성과 소득 수준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

²⁰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은 0인 경우가 있어 ϵ 과 δ 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변이계수만 비교하였다.

주고 있다(Bania and Leete 2009; Hertz 2007; Dahl et al. 2011; Shin and Solon 2011; Moffitt and Gottschalk 2011; Hardy and Ziliak 2014).

농가의 경우 규모가 작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고령의 경영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경영주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맞을 경우 농가의 소득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변동성도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가를 농가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소득변동성을 계산하였다<표 5-4>.

〈표 5-4〉 소득계층별 소득변동성 추이

소득	2008~2012년				2013~2016년			
	소득	변이 계수	ϵ	δ	소득	변이 계수	ϵ	δ
1분위	7,749	0.377	-0.177	1.899	6,144	0.378	1.172	0.983
2분위	12,960	0.186	0.020	0.839	13,340	0.152	0.187	0.262
3분위	16,453	0.182	0.007	0.653	17,240	0.144	0.026	0.329
4분위	20,141	0.182	-0.251	0.984	21,585	0.152	0.201	0.456
5분위	24,051	0.187	0.083	0.517	26,336	0.159	0.251	0.359
6분위	28,535	0.162	0.217	0.626	31,496	0.147	0.135	0.369
7분위	33,908	0.171	0.632	0.595	38,398	0.156	0.219	0.363
8분위	41,383	0.166	0.486	0.552	47,465	0.138	0.375	0.246
9분위	52,878	0.160	2.774	0.580	62,554	0.165	0.244	0.327
10분위	87,899	0.184	1.995	0.504	115,524	0.178	0.318	0.315

주: 영농규모는 변이계수의 이상치를 제외한 각 그룹의 평균치이며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먼저 소득분위별로 평균 변이계수와 ϵ , δ 값을 계측한 결과 1분위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타 소득분위의 소득변동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변이계수는 2008~2012년과 2013~2016년에 각각 0.377, 0.378로 전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변이계수는 0.160~0.187(2008~2012년), 0.138~0.178(2013~2016년) 정도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 δ 경우에도 1분위 가구의 평균 δ 값은 1.899(2008~2012년), 0.983(2013~2016년)으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소득변동성의 차이가 각 소득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표 5-6>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6>에 제시된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농업의존도가 높은 반면 이전소득 의존도나 비경상소득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영주의 연령이 낮고 경지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연령은 67.5세(2008~2012년)와 69.4세(2013~2016년), 평균영농규모는 1.21ha(2008~2012년)와 1.37ha(2013~2016년)로서 1분위 가구는 고소득 가구보다 고령 영세농의 비중이 크고 비경상소득의 비중 또한 전체 계층에서 가장 크다.

1분위 가구의 높은 소득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영주의 연령과 경지규모라고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연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지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의 비중이 커서 소득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농가를 경지규모에 따라 계층을 나누어 소득변동성을 계산하였다.²¹

경지규모별로 농가소득의 변동성 지표를 계산한 결과, 농가의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2008~2012년 기간 1분위 농가의 농가소득 변이계수는 0.138인 반면, 10분위 농가의 농가소득 변이계수는 0.262로 증가하였다. 2013~2016년 기간에는 1분위 가구의 농가소득 변이계수가 0.126이고 10분위 가구의 변이계수는 0.237이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²¹ 경지규모는 표준영농규모로 환산한 값이다.

〈표 5-5〉 영농규모별 소득변동성 추이

영농 규모	2008~2012년				2013~2016년			
	영농 규모	변이 계수	ϵ	δ	영농 규모	변이 계수	ϵ	δ
1분위	0.41	0.138	0.136	0.478	0.36	0.126	0.226	0.294
2분위	0.66	0.178	0.134	0.607	0.58	0.129	0.149	0.315
3분위	0.87	0.175	0.129	0.756	0.78	0.139	0.296	0.412
4분위	1.10	0.164	0.121	0.561	1.01	0.167	0.011	0.321
5분위	1.38	0.177	-0.181	1.401	1.26	0.164	0.118	0.391
6분위	1.72	0.211	-0.037	0.837	1.60	0.185	0.320	0.370
7분위	2.16	0.201	2.414	0.910	2.02	0.191	1.120	0.465
8분위	2.77	0.227	0.153	0.700	2.62	0.205	0.446	0.425
9분위	3.84	0.221	1.173	0.685	3.68	0.211	-0.062	0.366
10분위	7.52	0.262	1.760	0.810	8.23	0.237	0.483	0.634

주: 영농규모는 변이계수의 이상치를 제외한 각 그룹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결과적으로,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고령으로 인해 경영주가 생산 활동에서 은퇴하여 생산 활동을 통한 수입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높아진 것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 계층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현재 정부 지원이 이들의 소득안정성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6〉 소득계층의 원천별 비중, 경지규모, 경영주 연령

2008-2012						
소득계층	소득 비중				경지 규모	경영주 연령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분위	5.9	26.4	45.8	21.8	1.21	67.5
2분위	27.9	23.5	32.6	16.0	1.46	68.8
3분위	30.5	26.2	28.9	14.4	1.67	66.6
4분위	34.6	27.8	25.3	12.4	1.95	65.3
5분위	31.2	34.7	22.6	11.5	2.01	63.8
6분위	31.0	38.6	19.9	10.6	2.03	61.6
7분위	34.0	36.4	17.0	12.6	2.45	60.3
8분위	34.7	41.6	14.1	9.5	2.40	58.7
9분위	35.0	43.9	12.4	8.8	3.14	58.3
10분위	42.5	41.5	8.3	7.7	4.08	56.2
전체	35.0	37.9	16.6	10.4	2.24	62.7

2013-2016						
소득계층	소득 비중				경지 규모	경영주 연령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분위	-52.2	42.6	79.6	30.0	1.37	69.4
2분위	22.9	19.1	42.6	15.4	1.40	72.5
3분위	27.5	22.0	36.6	13.9	1.50	71.9
4분위	29.3	27.1	33.0	10.7	1.69	68.0
5분위	31.1	29.7	27.6	11.5	1.84	66.2
6분위	28.2	36.6	26.1	9.1	1.97	65.1
7분위	26.7	42.0	23.0	8.4	2.09	63.5
8분위	30.1	45.3	17.6	7.1	2.67	62.1
9분위	33.4	45.1	14.6	6.9	2.96	59.3
10분위	56.5	29.9	9.2	4.4	4.63	57.5
전체	36.6	35.4	20.1	8.0	2.21	65.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한편 경기 변화는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008~2012년과 2013~2016년의 소득변동성 지표를 비교해보면, 두 기간 간의 소득변동성은 최근 들어 전체적

으로 감소하였지만, 소득변동성의 변화 양상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8~2012년은 2013~2016년보다 상대적으로 불경기라고 할 수 있다. 두 기간의 ϵ 값과 δ 값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보면, 2008~2012년에는 계층 간 지표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거나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는 한편 소득의 불안정성도 매우 높았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득의 불안정성도 낮았다. 2013~2016년에는 계층 간의 소득변동성 지표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소득이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불안정성의 크기도 이전 기간보다 적었다.

이는 불경기가 농가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Shin and Solon (2011)은 소득변동성이 경기역행적임을 보여준 바 있고 Gottschalk and Moffitt (1994)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이 둘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소득변동성이 높아지고 소득변동성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농가소득 불평등 확대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연령별 비교

경영주의 연령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주의 연령대에 따라 농가소득의 안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젊은 경영주는 작목 선택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도 높은 품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고령의 경영주는 수익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품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30대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 40~50

대는 노동시장에서의 황금기, 60대 이후에는 은퇴기가 된다.²² 이러한 연령대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영주의 연령별 소득변동성을 비교(2008~2016년 평균)하여 연령이 소득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령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변수이므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성하여 코호트의 소득변동성을 살펴보았다. 각 코호트는 2008년을 기준으로 41세 미만인 그룹(1967년 이후 출생자), 41~64세 그룹(1944~1967년생), 65세 이상(1944년 이전 출생자)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표 5-7〉 연령별 소득변동성 지표

소득변동성 지표		연령(2008년 기준)		
		41세 미만	41 ~ 64세	65세 이상
변이계수		0.157	0.098	0.034
황의식(2004)	ϵ	0.228	0.135	-0.055
	δ	0.130	0.049	0.02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코호트별 소득변동성 지표의 분석은 각 코호트의 연도별 평균소득으로 코호트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루어져 <표 5-7>에 제시된 값들은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의 각 코호트의 소득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이계수와 δ 값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서 농가소득의 변동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다. 41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9년간 추세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41~64세의 9년간 소득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1세 미만 그룹보다 증가 폭이 적었다. 반면 65세 이상의 농가소득은 9년간 추세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령변화에 따라 농가소득이 역(逆) U자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²² 물론 농업의 경우는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 노동시장에서의 연령대별 위상이 이와 다를 수 있다.

4.5. 연령별·경지규모별 소득변동성 비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높고, 경지규모가 클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령과 경영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면 소득변동성 변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경영주의 연령을 2008년 기준 41세 미만, 41~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고 경지규모를 0.5ha 미만, 0.5~2.0ha, 2.0ha 이상으로 나누어 9개 집단의 소득변동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연령별 소득변동성의 변화 패턴이 경지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0.5ha 미만의 영세농가 사이에서는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높고, 2.0ha 이상의 대농가 사이에서는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아진다.

또한, 영농규모별로 소득변동성을 살펴보면, 경영주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경지규모가 클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7>에 나타난 연령별 소득변동성의 변화는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높았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에서 경영주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농업 외에 다른 생산활동의 비중이 높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변동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영농규모가 작고 고령인 경영주는 농외활동에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없어 소득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방식의 영농을 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는 농가소득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규모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규모에 따라서 소득변동의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집단별로 소득변동의 원인이 다르므로 정부의 정책 수립도 이에 기초하여 더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표 5-8〉 경영주 연령별 영농규모별 소득변동성 추이

기간	소득변동성 지표	연령 구분	영농규모		
			0.5ha 미만	0.5~2.0ha	2.0ha 이상
2008~2012	변이계수	41세 미만	0.135	0.298	0.274
		41~64세	0.133	0.198	0.254
		65세 이상	0.138	0.162	0.184
	δ	41세 미만	0.185	0.899	3.242
		41~64세	0.450	0.990	0.680
		65세 이상	0.515	0.675	0.826
2013~2016	변이계수	41세 미만	0.062	0.166	0.295
		41~64세	0.144	0.185	0.220
		65세 이상	0.114	0.129	0.183
	δ	41세 미만	0.099	0.387	0.582
		41~64세	0.353	0.454	0.518
		65세 이상	0.240	0.276	0.32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4.6. 소득변동성 결정 요인 회귀분석

지금까지 농가의 특성에 따른 소득변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한 결과는 각 요소가 소득변동성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졌는지는 보여주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의 특성들이 소득변동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아래의 회귀 식을 구성하였다.

$$Volatility_i = \alpha + \beta X_i + \gamma Size_i + \rho Y_{1316} + \epsilon_i$$

추정식에서 $Volatility_i$ 는 각 농가의 소득안정성 지표를 의미하며 농가 소득의 변이계수와 δ 값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로그를 취하여 변숫값이 일정 범위 내로 한정되게 하였다. 외생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가구주 특성(X_i), 표준영농규모로 환산한 각 농가의 경지규모($Size_i$), 2013~2016년 기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Y_{1316})가 이용되었으며, ϵ_i 는 오차항이다. 경영주의 성별은 남자 1, 여자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표시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미만, 중졸 미만, 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초졸 미만이 기준 집단이 되어 회귀식에서는 누락된다. 농가의 경지규모는 0.5ha 미만, 0.5~2.0ha, 2.0ha 이상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를 취하였으며 0.5ha 미만의 농가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했다. 2013~2016년 기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2013~2016년 기간이면 1, 2008~2012년 기간이면 0을 나타낸다. 회귀식은 OLS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영주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학력은 교육수준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차이나 농외 취업 가능성과 연관되어 소득변동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농가의 소득변동성에 경영주의 학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주의 연령과 성별은 소득변동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이 남자일수록 소득변동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경지규모가 클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높아져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 소득변동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변이계수	delta
연령	-0.0105*** (0.0015)	-0.0109*** (0.0020)
성별(남자=1, 여자=0)	0.2163*** (0.0605)	0.3165*** (0.0822)
중졸 미만	0.0301 (0.0422)	0.0715 (0.0573)
고졸 미만	0.0217 (0.0468)	0.0418 (0.0636)
대졸 미만	-0.0289 (0.0480)	0.0139 (0.0652)
대졸 이상	-0.0871 (0.0706)	-0.0453 (0.0954)
0.5~2.0ha	0.1518*** (0.0441)	0.2386*** (0.0597)
2.0ha 이상	0.3859*** (0.0464)	0.4595*** (0.0630)
2013~2016 더미	-0.1243*** (0.0253)	-0.4545*** (0.0343)
상수항	-1.7282*** (0.1230)	-1.0980*** (0.1667)
Adjusted R^2	0.0641	0.0853

주 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임.

2)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로 불안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이계수와 황의식(2004)의 지표를 이용하여 2007년 이후의 농가소득의 변동성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8~2012년과 2013~2016년의 가구 소득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2013~2016년의 소득변동성이 이전 기간보다 낮았다. 이는 농가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불경기에 진입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고령 영세농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 높은 소득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영세농은 농업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농외 활동도 쉽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고령 영세농이 증가한다면 이는 농촌 지역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 하락과 소득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 영세농이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 영세농의 농업 의존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농업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높은 소득변동성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중요성은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직불금이 농지를 바탕으로 책정되고 있어 대농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농가가 더 높은 소득변동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규모 쌀 전업농의 소득

안정화 측면에서는 현재의 직불금 산정방식이 효과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고령 영세농과 대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장년층은 두 집단 모두 높은 소득변동을 경험하지만, 원인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나누고 각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바탕으로 농가를 분류하고 소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농가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5.2.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농가의 소득변동성의 추이와 관련 요소에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변동성은 농가가 미래의 지출계획 및 경제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득변동성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소득변동성 확대가 농가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변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소득변동 확대에 대한 대처방안은 요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변동성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변동성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이 농가의 소득변동성 감소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직불제와 재해보험 등 소득안정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불금이 실제로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된 바가 없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이 농업 잡수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은 공적보조로 집계되고 있다. 농업소득피해보상금과 농업보조금을 합한 농업 관련 직불이 농가소득

의 변동성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한다면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소득변동성은 소득불평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변동성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하였음이 발견되었고 또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소득변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변동성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농가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주제는 농가와 비농가의 소득변동성 비교이다. 농가는 소득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농가보다 소득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정말로 높은 수준인지, 소득안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비농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변동성의 정의와 범위에 관해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소득변동성은 지표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소득변동성이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농가의 소득 안정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목표라면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러한 지표는 소득변동성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소득의 변동성 지표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1. 분석 필요성과 목적

농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에 관한 연구는 농가 간 상대적 박탈감 확대와 이에 따른 노동력 이탈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다루어져 왔다(황의식 외 2003). 근래 들어서는 2008년 발생한 전 세계 금융위기²³ 이후의 저성장과 부의 양극화 문제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부 정책이 시장 참여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경제 참여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농업정책의 경우에도 맞춤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6월 22일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정책 도입은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무차별적 정책보다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

²³ 경제학계에서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그것의 지속성(duration), 깊이(depth), 광범위성(pervasiveness)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여러 경제 위기보다 크고,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과의 비교를 위해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미경제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는 대침체의 기간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발표하였다.

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일으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책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를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 방법들을 기초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그의 요인을 분석하고, 피케티(Piketty, 2014)의 불평등도에 대한 접근을 농가경제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 경제에 있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관심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광복 후 6·25 전쟁 등으로 개발도상국 지위의 한국 경제가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분배가 개선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외환위기라는 큰 경제적 위기 동안의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박준기 외(2004)는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을 이용하여 농가소득 원천별 불평등도 추이를 분석하였고, 일반적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오내원 외(2013)는 FW 양극화 지수, ER 지수, EGR 지수, DER 지수 등 여러 지수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양극화 지수를 분석하였다. 한편, 김규섭 외(2014), 고갑석(2016)은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과 농업소득의 격차가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저성장 등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T. Piketty)는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를 180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분석하여 소득의 불평등도가 20세기 초반의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 완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Piketty 2014). 그는 세계대전 후 경제의 안정화와 함께 소득 및 자산에 있어서 상위계층의 금융자산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소득 증가율의 감소와 전체 소득 대비 노동 소득의 상대적인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3. 분석자료와 분석방법²⁴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농가경제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개년이며, 이 기간에 한 차례(2013년) 표본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2013년을 전후하여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에서와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각각의 방법은 동일한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소득 불평등도 추이 분석을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와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나타내는 울프슨(Wolfson)

²⁴ 한국통계학회의 2002년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지수 그리고 피케티(Piketty)가 사용한 비율(ratio) 접근법을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고안한 지수(Index)로 1912년 발표된 이후로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도 지수로 많이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전 계층의 소득분포 상태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므로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 상태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올프슨지수는 중산층의 소득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산층의 몰락 정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와 올프슨 지수 두 가지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사회 전체적 시각과 양극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기존 방식들이 추상화된 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반면, 피케티의 방식은 상위 소득계층(centile)의 소득과 자산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과 자산보다 각각 소득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ratio)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우병준 외 2017). 구체적인 방법과 설명은 다음의 각 절에 제시되어 있다.

3.1.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으로써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지니계수} = \frac{1}{\mu} \frac{\sum_{i=1}^n \sum_{j=1}^n |y_i - y_j|}{n^2}$$

여기에서 y_i 는 구성원(i)의 소득, n 은 전체 구성원(i)의 수, μ 는 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지니계수의 값은 0부터 1사이이며 값이 0인 경우에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로 완전평등한 경우를 의미하고 값이 1인 경우에는 구성원 한 명이 모든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완전불평등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의 값이 0.4가 넘으면 불평등도가 심한 상태로 평가한다(UNRISD 2013).

3.2. 울프슨(Wolfson)지수

울프슨지수는 사회 전체에 있어서 중산층의 소득 분배에 가중치를 부여한 변화된 지니계수이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 문제를 검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text{울프슨지수} = 2(2(0.5 - L(0.5)) - G)\frac{\mu}{m},$$

여기서 $L(0.5)$ 은 하위 5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μ 는 평균, m 은 중앙값, G 는 Gini 계수를 의미한다. 만약 $0.5 - L(0.5) = 0$ 이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 분포를 의미한다.

3.3. 피케티적 접근(Piketty's Approach)

피케티(Piketty 2014)는 지니계수와 같이 일반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불평등도 계산방법 대신에 소득계층별로 자산과 소득의 전체 자산과 소득에 대하여 상대적 비중이 얼마인지를 비율(ratio)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소득계층을 상위 10%, 상위 10%에서 50%, 하위 50% 세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이 전체 소득의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보았다.

피케티가 소득이나 자산의 집단을 상위 10%, 상위 10%에서 50% 그리고 하위 50%로 나눈 이유는 이 비율이 엘리트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특징을 갖고 그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피케티의 구분방식을 우리나라 농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농가의 집단적 특성을 찾는 것에 있지 않기에 여기에서는 피케티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적절한 농가의 구분 비율은 향후 연구과제로 분석이 필요하다.

4. 분석 결과

4.1. 농가소득 불평등 추이

지니계수를 이용한 농가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08년 이후로 소폭 증가하다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0.39에서 2012년 0.43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의 지니계수는 0.41을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지니계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지니계수의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다<표 6-1>.²⁵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교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우병준 외 2017).

농가의 불평등 정도는 도시가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수준이다. 세후 전체 도시가구 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는 2008년 0.31에서 2016년 0.30으로 같은 기간의 농가소득보다 0.1 정도 낮은 수준이다.

울프슨지수를 적용한 분석 결과도 지니계수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농가소득 불평등 정도는 2008년 0.35에서 2012년 0.40까지 증가한 이후 2016년 0.39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소득원천 중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울프슨지수가 다른 항목들에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울프슨지수는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다<표 6-2>.

²⁵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등으로 인하여 음수의 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OECD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농가소득을 계산하였다(홍민기 2016).

〈표 6-1〉 2008~2016년 농가소득 지니계수 추정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0.39	0.40	0.42	0.42	0.43	0.41	0.42	0.41	0.41
농업소득	0.65	0.67	0.71	0.70	0.71	0.70	0.73	0.75	0.76
농외소득	0.67	0.66	0.66	0.68	0.68	0.64	0.67	0.67	0.68
이전소득	0.51	0.50	0.50	0.48	0.48	0.51	0.48	0.45	0.45
비경상소득	0.67	0.75	0.74	0.74	0.73	0.71	0.68	0.65	0.68
도시가구소득	0.31	0.31	0.31	0.31	0.31	0.30	0.30	0.30	0.30

주 1)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하였음. 그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수 있음.

2)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자료임. 따라서 표본교체가 이루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도시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세후 전체 도시가구소득임.

자료 1)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e-나라지표(각 연도). 국가주요지표(<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7. 10. 30.

〈표 6-2〉 2008~2016년 농가소득 율프슨지수 추정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0.35	0.37	0.38	0.41	0.40	0.40	0.40	0.39	0.39
농업소득	0.80	0.91	1.02	1.03	1.11	1.03	1.14	1.16	1.33
농외소득	1.46	1.29	1.26	1.46	1.64	1.21	1.48	1.48	1.60
이전소득	0.48	0.42	0.45	0.42	0.41	0.45	0.39	0.36	0.35
비경상소득	0.78	1.05	1.01	0.99	0.95	0.90	0.76	0.70	0.73

주 1)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하였음. 그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수 있음.

2)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자료임. 따라서 표본교체가 이루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표 6-3>은 피케티의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농가자산과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준다. 이 연구의 피케티 접근은 농가경제조사의 표본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과거 선행연구(우병준 외 2017)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산과 소득에 있어 상위 10%의 집단에 자산과 소득

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피케티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주상영 2015) 결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위 10% 및 상위 10~50%의 자산 점유율은 각각 약 45%인 반면, 하위 50%의 전체 대비 자산 점유율은 약 10%였다.

피케티 방식으로 계산한 농가 계층별 불평등 수준은 국가 전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위 농가 계층의 절대적 빈곤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농가의 자산과 소득이 전체 농가의 평균 소득과 자산에 비교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표 6-3〉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피케티적 접근 결과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상위 10% 총자산/전체 자산	0.36	0.34	0.34	0.33	0.33	0.37	0.36	0.35	0.35
자산 상위 10%~50% 총자산/전체 자산	0.45	0.46	0.46	0.46	0.46	0.45	0.45	0.46	0.46
자산 하위 50% 총자산/전체 자산	0.19	0.20	0.20	0.21	0.21	0.19	0.19	0.19	0.19
소득 상위 10% 총소득/전체 소득	0.29	0.30	0.31	0.30	0.31	0.28	0.30	0.31	0.30
소득 상위 10%~50% 총소득/전체 소득	0.47	0.48	0.47	0.49	0.48	0.50	0.48	0.47	0.48
소득 하위 50%의 총소득/전체 소득	0.23	0.23	0.21	0.21	0.21	0.22	0.22	0.22	0.22

주 1)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하였음. 그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수 있음.

2)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자료임. 따라서 표본교체가 이루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2016년을 기준으로, 자산에 있어 상위 10%의 특징은 전체 농가 중 전업 농가,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높다. 소득에 있어 상위 10%의 특징은 2종 겸업농가, 축산농가, 50~69세 미만 경영주의 비중이 높다<표 6-4>.

〈표 6-4〉 자산 및 소득 상위 10% 농가의 주요 특성

항목	자산				소득			
	표본 수	상위 10% 내 표본 수	표본 수 비중	상위 10% 내 표본 수 비중	표본 수	상위 10% 내 표본 수	표본 수 비중	상위 10% 내 표본 수 비중
전업농가	443,912	46,411	0.51	0.53	443,912	28,217	0.51	0.32
1종 겸업	117,764	10,197	0.13	0.12	117,764	16,073	0.13	0.18
2종 겸업	313,942	31,097	0.36	0.35	313,942	43,054	0.36	0.49
논벼농가	183,303	13,611	0.21	0.16	183,303	4,759	0.21	0.05
과수농가	86,787	9,612	0.10	0.11	86,787	6,152	0.10	0.07
채소농가	191,798	13,718	0.22	0.16	191,798	11,908	0.22	0.14
특작농가	17,029	1,753	0.02	0.02	17,029	475	0.02	0.01
화훼농가	4,458	525	0.01	0.01	4,458	591	0.01	0.01
전작농가	15,485	948	0.02	0.01	15,485	646	0.02	0.01
축산농가	49,878	14,558	0.06	0.17	49,878	17,864	0.6	0.20
기타	12,937	1,884	0.01	0.02	12,938	1,896	0.01	0.02
2종 겸업	313,942	31,097	0.36	0.35	313,942	43,054	0.36	0.49
30세 미만	0	0	0	0	0	0	0	0.
30~39	1,920	397	0.00	0.00	1,920	804	0.00	0.01
40~49	36,419	1,279	0.04	0.01	36,419	5,219	0.04	0.06
50~59	120,877	20,058	0.14	0.23	120,877	38,412	0.14	0.44
60~69	302,799	33,996	0.35	0.39	302,799	34,581	0.35	0.40
70세 이상	413,603	31,976	0.47	0.36	413,603	8,330	0.47	0.10
표준영농규모 0.5ha 미만	142,766	2,727	0.16	0.03	142,766	4,651	0.16	0.05
0.5ha 이상~ 2.0ha 미만	496,609	41,669	0.57	0.48	496,609	37,709	0.57	0.43
2.0ha 이상	236,242	43,309	0.27	0.49	236,242	44,985	0.27	0.52
전체 표본 수	875,618	87,705	-	-	875,618	87,345	-	-

주 1) 표본 수 비중= 표본 수/전체 표본 수

2) 상위 10% 내 표본 수 비중=상위 10% 내 표본 수/전체 표본 수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표 6-4>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과 소득 상위 10% 농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업농가와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자산의 경우 토지와 농기계 등의 농업용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거듭된 60세 이상 전업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경우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기에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자산의 경우 상위 10% 비중에서 논벼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가 비슷하나, 소득에서는 다른 영농형태에 비교해 축산농가의 비중이 더 크다. 이는 농업용 자산에서 토지의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의 경지면적 단위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4.2. 농가소득 불평등 요인 분석

앞 절에서 지니계수와 올프슨지수를 통해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농가소득의 불평등 요인을 농가소득 항목별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불평등에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로 불평등에의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농가소득 불평등 정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4.2.1. 소득원천별 농가소득 불평등 요인 분석

이 연구에서는 기여도 분석을 위해서 Chantreuil and Trannoy(1999)가 제시한 샤플리값(Sharpley value)을 이용한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요인 분석은 다른 분석방법에 비교해 모든 불평등 지수에 사용할 수 있고, 원천별 분해뿐 아니라 집단별 분해도 가능하며, 빈곤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성재 외 2017).²⁶

²⁶ 샤플리값 분해에는 소득원천의 가구별 소득에 대해서 모든 가구에 대해 0을

샤플리값을 이용한 요인 분석에 따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지니계수 기여도가 전체의 8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소득의 불평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상소득의 지니계수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다<표 6-5>.

농업소득의 지니계수 기여도는 2008년 0.35에서 2012년 0.37로 증가한 후, 2013년 0.35에서 2016년 0.37로 다시 증가하였다. 농외소득의 기여도는 2008년 0.41에서 2012년 0.46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0.48에서 2016년 0.45로 감소하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기여도는 2016년 0.11로 2008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6-5〉 농가소득 원천별 지니계수 기여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업소득	0.35	0.35	0.39	0.37	0.37	0.35	0.38	0.41	0.37
농외소득	0.41	0.43	0.42	0.45	0.46	0.48	0.45	0.43	0.45
이전소득	0.10	0.10	0.08	0.09	0.09	0.09	0.10	0.10	0.11
비경상소득	0.13	0.12	0.11	0.09	0.08	0.08	0.07	0.06	0.07

주 1)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따라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가능성이 존재함.

2) 분해 계산에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mean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를 사용함.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부여하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와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서 평균값을 가정하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두 가지가 있다(이성재 외 2017). 이 연구에서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사용하였다.

4.2.2. 연령별 농가소득 불평등 요인 분석

앞장에서 농촌의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농가 경영주 연령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지니계수의 연령별 기여도 계산은 Bellù et al.(2006)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지니수를 먼저 그룹별로 계산하고 인구구성비와 소득구성비를 고려하여 그룹 내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그룹 간 지니계수는 그룹 내 표본의 소득을 집단 평균 소득으로 대체하여 집단 간 소득의 불평등도를 계산하였다. 잔차항은 그룹 내 지니계수와 그룹 간 지니계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계산하였다. 경영주 연령별 구분은 이 연구 제4장의 농가 유형 구분을 따랐으며,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매우 작음을 고려하여 40세 이하 경영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6>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농가소득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 인구 구성비는 특정 집단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 구성비는 그 집단의 소득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표본 전체의 지니계수이고, 그룹 지니계수는 그 집단만의 지니계수를 따로 계산하였을 때의 값을 의미한다. 그룹 내 기여도 값은 그룹 지니계수가 표본 전체의 지니계수에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그룹 간 지니계수는 그룹 간의 소득불평등으로 인하여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잔차항은 집단 간의 소득이 완전히 순위화되지 않고 겹쳐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임병인의 2005). 예를 들면 한 집단의 최고 소득자의 소득이 다른 집단의 최저 소득자의 소득보다 낮으면 두 집단 내에 소득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잔차항은 0이 된다. 하지만 한 집단의 최고 소득자 소득이 다른 집단의 최저 소득자의 소득보다 높으면 두 집단의 소득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잔차항은 0 이상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잔차항은 집단 간 소득이 겹치는 부분의 정도를 보여주고 이로 인한 지니계수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표 6-6〉 농가소득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연도	경영주 연령	인구 구성비	소득 구성비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41세~64세	0.47	0.59	0.39	0.38	0.26	0.30	0.22
	65세 이상	0.53	0.41		0.36	0.20		
2009	41세~64세	0.44	0.59	0.40	0.37	0.24	0.37	0.18
	65세 이상	0.56	0.41		0.36	0.21		
2010	41세~64세	0.42	0.58	0.42	0.39	0.23	0.37	0.18
	65세 이상	0.58	0.42		0.38	0.22		
2011	41세~64세	0.39	0.54	0.42	0.39	0.19	0.35	0.20
	65세 이상	0.61	0.46		0.39	0.26		
2012	41세~64세	0.36	0.49	0.43	0.38	0.16	0.32	0.21
	65세 이상	0.64	0.51		0.41	0.31		
2013	41세~64세	0.43	0.59	0.41	0.37	0.23	0.37	0.18
	65세 이상	0.56	0.41		0.38	0.21		
2014	41세~64세	0.40	0.56	0.42	0.39	0.21	0.38	0.18
	65세 이상	0.60	0.44		0.37	0.24		
2015	41세~64세	0.37	0.53	0.41	0.38	0.18	0.38	0.17
	65세 이상	0.63	0.47		0.37	0.27		
2016	41세~64세	0.33	0.49	0.41	0.38	0.15	0.39	0.16
	65세 이상	0.67	0.51		0.36	0.30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표 6-6>의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계측 결과를 보면, 41~64세 연령과 65세 이상 연령그룹 각각의 그룹 지니계수는 대부분 0.40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연령 그룹 내에서 소득 불평등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41~64세의 지니계수는 0.38, 65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0.36이었다. 또한, 이들 연령 그룹 각자의 지니계수가 2016년 농가 전체 소득 불평등도의 기여도는 각각 15%와 30%이다. 반면 이들 두 연령 그룹 간의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39%이며 잔차항은 16%로 두 연령 집단 간 소득의 중복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득 불평등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와 연령대별로 소득소득규모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 6-6>의 결과

는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정진화·조현정 (2012)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하다.

이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와 소득 구성비이다. 2016년의 경우 두 연령 그룹 간의 소득 구성비는 49:51로 비슷하고 지니계수도 큰 차이가 없으나, 65세 이상 연령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샘플 변경을 기준으로 2008년~2012년과 2013년~2016년 기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두 기간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65세 이상 그룹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비례하여 그룹 내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 농가 비중의 증가가 소득불평등도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표준영농규모별 농가소득 불평등 요인 분석

농가소득 불평등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경영규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4장에서 사용한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인 <표 6-7>에서 표준영농규모의 잔차항 기여도는 약 34%로 앞 절에서 살펴본 연령에 따른 잔차항보다 더 높고, 그룹 간 기여도는 약 27%로 연령에 따른 그룹 간 기여도보다 낮다. 이는 표준영농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경영주 연령별 소득 차이보다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준영농규모를 <표 6-7>의 3개 그룹이 아닌 2개 또는 4개 그룹 이상으로 나눌 경우 그 결과는 변할 수 있다.

대부분 연도에서 표준영농규모 2.0ha 이상 집단이 다른 규모 농가보다 더 큰 소득 불평등도를 보인다. 이는 제5장에서 표준영농규모가 큰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정책 접근에 있어 두 사안의 연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6-7〉 농가소득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연도	표준영농규모	인구 구성비	소득 구성비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0.5ha 미만	0.11	0.08	0.39	0.39	0.01	0.27	0.33
	0.5ha 이상-2.0ha 미만	0.56	0.49		0.37	0.25		
	2.0ha 이상	0.34	0.43		0.40	0.15		
2009	0.5ha 미만	0.11	0.08	0.40	0.43	0.01	0.26	0.33
	0.5ha 이상-2.0ha 미만	0.56	0.48		0.37	0.25		
	2.0ha 이상	0.33	0.44		0.40	0.14		
2010	0.5ha 미만	0.12	0.08	0.42	0.38	0.01	0.28	0.31
	0.5ha 이상-2.0ha 미만	0.56	0.48		0.39	0.25		
	2.0ha 이상	0.33	0.44		0.43	0.15		
2011	0.5ha 미만	0.11	0.08	0.42	0.37	0.01	0.26	0.33
	0.5ha 이상-2.0ha 미만	0.54	0.47		0.41	0.25		
	2.0ha 이상	0.35	0.45		0.42	0.16		
2012	0.5ha 미만	0.13	0.10	0.43	0.39	0.01	0.26	0.34
	0.5ha 이상-2.0ha 미만	0.55	0.49		0.40	0.25		
	2.0ha 이상	0.32	0.42		0.43	0.13		
2013	0.5ha 미만	0.14	0.11	0.41	0.41	0.02	0.24	0.35
	0.5ha 이상-2.0ha 미만	0.56	0.51		0.40	0.27		
	2.0ha 이상	0.30	0.39		0.39	0.11		
2014	0.5ha 미만	0.14	0.11	0.42	0.39	0.01	0.25	0.35
	0.5ha 이상-2.0ha 미만	0.55	0.49		0.40	0.26		
	2.0ha 이상	0.31	0.40		0.43	0.12		
2015	0.5ha 미만	0.15	0.10	0.41	0.35	0.01	0.30	0.31
	0.5ha 이상-2.0ha 미만	0.56	0.50		0.38	0.26		
	2.0ha 이상	0.29	0.40		0.43	0.12		
2016	0.5ha 미만	0.16	0.12	0.41	0.34	0.02	0.25	0.35
	0.5ha 이상-2.0ha 미만	0.57	0.52		0.39	0.28		
	2.0ha 이상	0.27	0.36		0.43	0.10		

자료: 통계청 MDIS(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농가 소득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울프슨(Wolfson) 지수, 피케티적 접근(Piketty's Approach) 등 세 가지 불평등도 지수를 이용하였고, 불평등 요인 분석을 위해 소득원천별, 경영주 연령별, 표준영농규모별로 지니계수에의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농가의 평균 소득이 도시가구소득보다 낮은 상태에서 불평등도까지 높다는 것은 저소득 농가의 소득 증대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케티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농가의 소득 및 자산 계층별 불평등도는 전체 경제보다 작고 불평등도의 큰 변화가 없어 농가 경제에 있어서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경제에서 농가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 증가에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해 단순히 농업소득만 고려한 소득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영주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 결과, 고령농가의 소득 불평등도 기여 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그 수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업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농가의 체계적인 소득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표준영농규모가 큰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소규모 농가보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장에서의 분석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소규모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경우 소득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불평등도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2. 향후 연구과제와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설정에서 단독가구를 100가구만 채택하고 있고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농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체로 연구 대상을 확대해서 농업경영체의 소득불평등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요약 및 결론

□ 농업경영체 연구 동향과 분석틀 검토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자료와 통계들을 활용하여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수립 및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관련 주요 주제별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좀 더 정교한 농업경영체 분석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분석틀을 점검하였다. 과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농업경영체의 소득 문제를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 이후 자본투자 확대에 따른 농가의 규모 성장과 농업경영체 숫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부채나 자산규모에 기초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실태 및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양한 성격의 농업경영체와 그들의 경영행태를 고려할 때,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유형별 구분과 이에 기초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EU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의 성격(규모)과 수입을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 수립 및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계 수집 및 분석 단계에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준이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 개발 및 활용한 분석틀이 존재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분석틀이 표준영농규모인데,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하여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도 표준영농규모 환산을 유형화 분석틀로 적용한다.

□ 농업경영체 실태 및 현황

이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농업법인제도는 UR 협상 농업 대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모두 의미한다. 농업경영체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농업·농촌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것만 해당되어 정확하게 전체 현황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경제 실태를 소득, 부채, 자산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속해서 증가하던 농가소득은 2016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농업소득이 1,126만 원에서 1,007만 원으로 10.6%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1년부터 30%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농외소득의 비중과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농가소득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에서 농업소득의 역할이 크지 않다면,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품목 중심의 농업소득 정책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소득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소득원천별 심층 분석과 병행되어야 한다.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농가 총부채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9세 이하 젊은 경영주들이 자산취득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연령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 농가 유형별 주요 지표 변화

표준영농규모에 기초한 농가 유형화를 위해 이 연구는 2008~2016년 기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준영농규모 산출에 필요한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 대식물, 대동물 등)의 경우 임대를 제외한 소유 및 임차 자산의 합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산출된 농가의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총 144개 구간으로 농가들을 세분한 후, 최종적으로는 9개 농가 유형을 설정하였다. 9개 농가 유형은 3개 연령층(40세 이하, 41세 이상~64세 이하, 65세 이상)과 3개 표준영농규모(0.5ha 미만, 0.5ha 이상~2ha 미만, 2ha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9개 유형 중 ‘65세 이상+0.5ha 이상~2ha 미만’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65세 이상+0.5ha 미만’ 유형은 8.35%에 달하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고령 소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 실태의 경우 같은 표준영농규모의 경우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낮으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한다. 자산의 경우 고령 그룹의 경우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자산규모도 함께 증가하나, 중장년 대농의 경우 농업용 자산의 경우 자산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부채의 경우 대부분 영농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 소농의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연구는 대동물을 고정자산, 소동물을 유동자산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집계방식을 그대로 표준영농규모 산출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농업소득(농업잡수입)으로 분류되고 있는 쌀 변동 직접지불금의 지원 체계가 수입보장보험 등과 같은 다른 형태로 변경될 경우, 농가소득 구성 원천의 상대적 비중이 바뀔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농가 소득변동성 분석

변이계수와 황의식(2004)의 지표를 이용하여 2007년 이후의 농가소득의 변동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령 영세농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 높은 소득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영세농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없기에,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계속 확대되면 농촌 지역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 하락과 소득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고령 영세농 소득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농업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영농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소득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중요성은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클 수 있다.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에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나누고 각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바탕으로 농가를 분류하고 소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농가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나 농지원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 농가 소득불평등도 분석

소득변동성은 소득불평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득변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의 소득불평등과 소득변동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농가 소득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울프슨(Wolfson) 지

수, 피케티적 접근(Piketty's approach) 세 가지 불평등도 지수를 이용하였고, 불평등 요인 분석을 위해 소득원천별, 경영주 연령별, 표준영농규모별로 지니계수에의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농가의 평균 소득이 도시가구소득보다 낮은 상태에서 불평등도까지 높다는 것은 저소득 농가의 소득 증대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케티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농가의 소득 및 자산 계층별 불평등도는 전체 경제보다 작고 불평등도의 큰 변화가 없어 농가 경제에 있어서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경제에서 농가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도 수준이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완화를 위해 단순히 농업소득만 고려한 소득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영주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 결과, 고령농가의 소득 불평등도 기여 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 높고 그 수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업의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소득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표준영농규모가 큰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소규모 농가보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장에서의 분석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소규모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경우(즉, 농업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농가 소득 불평등도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추후 연구 제언

이 절에서는 사전연구 성격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다.

2.1.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가 가지는 본질적 차이는 농가의 등록에 의한 자료 생성과 법에 근거한 행정적 조사에 따른 자료 생성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질적 신뢰성 문제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는 자체 조사항목을 다른 행정자료들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질적 신뢰성이 강화된다면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가 동시에 갖춰진 패널데이터로 그 이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특히 한석호 외(2016)도 지적하고 있듯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특성상 ‘농지 임대차 현황’ 및 ‘품목별 재배면적’ 같은 등록정보는 통계청의 표준조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2,600개의 농가표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은 40대 미만 농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못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농가경제조사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농가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 농가나 40대 미만 청장년 농가, 고용 규모가 큰 상업적 성격이 강한 농가의 경영형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특정 자료의 경우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자료 획득과 이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농업현황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료제공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2.2. 특정 농가계층 대상 심층 소득 분석 필요

이 연구에서 검토했듯이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소득 불안정성 문제는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령영세농의 증가라는 우리나라 농가 구조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구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령영세농가의 농업소득 확대 정책은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 산업적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해당 계층의 소득 불안정성은 상당 부분 비농업소득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소득, 자산 및 부채 구조를 심층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농가와 영세농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경영주 연령 70세 정도까지는 농업소득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기준으로 금액 측면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판매액 또는 사육 중인 가축 가치이며, 이러한 금액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금액 기준이 농업인의 소득을 출발점부터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농가의 절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75세 이상의 절대빈곤 농가를 영세고령농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 농가 유형 구분 재정비 필요

통계청은 농가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1·2종 겸업), 주업·부업·자급농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재배작물 기준으로 영농형태를 구분하는데, 농업총수입에서 가장 금액이 큰 품목 농가로 설정한다. 이 경우 특정 농가가 논벼와 축산을 함께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특정 품목의 판매액이 단 1원만 더 많아도 해당 품목 농가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농가의 영농형태를 왜곡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동일 농가가 해마다 다른 품목

을 재배하는 농가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의 경우와 같이 전체 농업판매액에서 2/3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있을 때 해당 품목 전문농가로 분류하고, 그런 품목이 없을 때에는 복합농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고려하여 소득원천별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예를 들어 농업소득 중심 농가, 이전소득 중심농가, 농외소득 중심 농가 등). 이런 방식의 분류는 현재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국 농가소득 중심으로 새롭게 농가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지면적에 기초한 농가규모 구분보다는 농가소득(또는 농가총수입)에 기초한 농가규모 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농가 유형 구분 과정에서 농업소득에의 작물별 기여 비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의 전문화 정도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유 농업자산이나 토지자산의 구체적 활용 상황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가 영농형태별로 구분한 농가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축산 전업농가와 과수 전업농가는 그 경영구조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포함한 상당수 연구에서 표준영농규모를 적용하여 동질적 농가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농가 영농형태별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내용과 규모가 완전히 다르고 소득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의 피케티 접근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가 유형별 자산과 소득 집중도에서 축산 농가는 다른 영농형태에 비교해 매우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1	강성호 최옥금	2011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농가와 임가에 초점을 맞춰 소득 이전 제도의 효과를 비교·분석	■ 2009년 일반 가구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은 15.3%, 상대빈곤율은 20.9%인 것으로 나타남. 농가의 절대 및 상대빈곤율은 각각 22.0%, 19.6%로 일반 가구보다 빈곤율이 높았음. 임가의 빈곤율은 30.0%로 일반 가구 평균보다 약 14.7%p 높음. ■ 가구주 연령이 60대 미만인 일반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8.9%였으며, 농가는 15.4%, 임가는 31.3%로 나타나 임가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60대 이상의 빈곤율은 일반 가구 35.6%, 임가 28.8%, 농가 12.8%의 순으로 높았음. ■ 빈곤 감소의 공적 이전효과는 임가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 가구가 가장 낮았음. 공적 이전효과를 임가, 농가, 일반 가구 순으로 높았고, 사적 이전효과를 일반 가구와 임가, 농가의 순으로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가구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일수록 일반 가구는 공적 이전효과가 사적 이전보다 낮았으나 농가와 임가는 공적 이전효과가 사적 이전효과보다 높았음. ■ 가구 유형별 공적 이전 전후의 소득불평등의 경우, 공적 이전효과가 농가, 일반 가구, 임가의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적 이전효과가 일반 가구, 농가, 임가 순으로 높았음.
2	강혜정	2005	농가특성이 농업생산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농가 단위의 패널 자료 분석	한국 농가의 농업 생산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특히, 경제면적과 경영주의 인적자본과 같은 농가 및 경영주의 특성이 생산 복합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경지면적이 클수록 경영은 전문화, 즉 영농규모화는 전업농에서 발생 ■ 경영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연수가 낮을수록 생산의 복합화 심화. 반대로 경영주가 젊을수록,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생산은 전문화. 가족 규모가 클수록 생산 다각화가 심화. 제주도와 쌀 주산지인 다른 지역보다 생산 전문화가 뚜렷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화 현상 뚜렷해짐. ■ 농가 및 경영주의 특징은 농업 경영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가의 특징을 고려한 농업구조조정 방향과 정책의 필요성 시사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3	강혜정	2007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	농가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전체 농가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농가 특성변수가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유형 구분의 적절성을 검증	■ 농가 유형을 나타내는 21개 변수를 이용하여 공통 인자 7개를 선정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6개의 농가 유형으로 군집화(쌀전업농, 원예전업농, 축산전업농, 복합경영농, 영세경영농, 부업농) ■ 6개 농가 유형의 주요 분류 기준은 경지면적, 농업수입, 농가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형태 등이며, 기존의 경지구분과 농업수입에 의한 유형화에는 한계가 존재 ■ 농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실용성 있는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해 농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농가 등태제 도입 및 농민등록 개편 등이 필요. 농업등록도 농가 유형별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통계 항목과 기준 등의 대폭 개편이 필요
4	강혜정	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영농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농 승계 실태를 파악하고, 영농 승계능력 육성에 반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영농승계자의 유형을 성별과 경영 주와의 동거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영농승계자 유형에 따른 보유농가의 특성 분석	■ 농지 소유면적 비중이 높은 농가일수록, 경종농가보다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업에서, 자영업농가에서 영농승계자를 보유할 확률이 높음. ■ 실질적 영농승계자에게 영농기반을 상속 증여하는 상속문화 정착 중요. 영농승계자 확보 및 육성(20~30대,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육성 주제,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 지원 대책, 예산 투자 확보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앙기적 로드맵 필요. 영농승계자 육성 범위를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 농가경영협력제도 등을 통한 영농승계자의 농업인 지위 및 소득 보장 필요
5	강혜정	2013	복합영농의 범위 경제성 및 생산효율성 분석	쌀과 쌀 이외 작목을 함께 생산하는 복합영농 농가의 생산기술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복합영농의 범위의 경제성과 영농 다각화 정도에 따른 생산효율성 차이를 분석	■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쌀 이외의 작목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쌀 선택 확률이 높음. 경지면적이 높을수록 단일 작목을 생산할 확률이 높고, 강원 제외 모든 지역에 경지도에 비교해 쌀 단일작목을 생산할 확률이 높음. ■ 쌀 이외 작목의 1% 생산 증가가 쌀 생산을 0.05% 증가시켜 쌀 이외 작목과 쌀 생산 간의 보완성이 존재(다각화의 경제성 존재)하는 반면, 복합영농 농가에서 영농 다각화 정도가 높을수록 생산효율성은 낮아짐 ■ 경영주 연령이 많을수록 복합영농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생산효율성은 낮아짐. 가족 노동시간 비중과 자가 소유면적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효율성이 높음. 농가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복합영농의 생산효율성은 낮음. ■ 복합영농은 고령 영세 농업인이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형태이며, 효율적인 적정 작목 수 선택이 중요
6	강혜정	2015	경제적 위기 농가의 특징 분석	농가 경제 위기상황의 지속성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특성을 분석: 패널자료의 기계 작자 및 빈곤 경험 횟수를 이용하여 민생적인	■ 기계수지 작자와 빈곤 경험이 반복성을 보이고(민생적 성격이 아님), 비교적 빈곤 진입·탈출이 더 활발해 기계 작자 탈출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 ■ 전업농가에 비해 1, 2종 경영농가(특히, 2종의 기계 작자 경험기간이 짧은, 논벼농가에 비해 과수, 채소 농가의 기계 작자 기간이 짧으며, 경지구분이 클수록 기계 작자 경험 횟수는 감소, 농가기계 수지는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특성을 분석	인적자본보다 농가 형태 및 영농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경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 지속기간이 짧으나 일당 연령(72.5세)이 지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 지속 기간이 길어짐(고령층 복지정책 필요). 전업농보다 1, 2종 겸업농(특히, 2종의 빈곤 경험 기간이 짧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빈곤 경험 확률이 낮고, 빈곤에서 더 빨리 탈출. 지역 특성이 빈곤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김혜정 권오상	2008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 분석	농가소득 불평등도 및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확률 밀도함수를 추정하여 연도별 농가 소득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농가 소득 양극화 지수를 계속하여 양극화 실태의 추이를 분석	■ 1998~2006년 간 농가소득 양극화가 농가 간 소득불평등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 1998~2001년까지 농외소득 양극화 지수가 농업소득 양극화 지수보다 높았으나, 2001년부터는 농업소득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 ■ 2005~2008년 농업소득 양극화는 다시 감소하고 있으나, 농외소득 양극화는 증가하여 같은 기간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외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됨.
8	김혜정 김형진	2009	소득분위별 도농간 소득 격차의 원인 분석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인적자원 특징,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과 교육 수준, 가구원 수 등의 차이에 따른 소득 계층별 도농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분석	■ 0분위별(0.1, 0.5, 0.9) 회귀분석에서 0값이 변해도 인적자원에 대한 변수들의 추정치가 대부분 유의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 모두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감소. 소득 분위 하위 10%와 상위 10% 농가는 가구주 연령의 한계효과가 크나, 도시근로자가구는 상위 10% 가구에서 연령 한계효과가 낮게 나타남. ■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으며, 소득 상위 10% 계층의 교육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두 집단 모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은 증가하며, 상위 10% 계층에서 한계효과가 큼. ■ 도농 간 인적자원 차이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완만하게 감소(2003년 95%→60%, 2007년 94%→72%)하고, 최저 소득계층에서는 인적자원 크기의 차이가 도농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임. 반면, 고소득계층일수록 도시근로자보다 농가의 인적자원 한계효과가 더 고소득계층에서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9	고갑석 김윤식	2016	지니계수 분해법을 활용한 농가소득의 불평등 분석	2008~2012년 기간의 농가소득(농업, 농외, 이전) 불평등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농가 간 지역 간 불평등도가 전체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경상소득을 비롯하여 농업소득, 농외소득은 2008년부터 2012년 지니계수가 높았으며, 농가 간 이전소득 격차는 감소. 농가 경상소득 지니계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0.4 이상이며,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지니계수는 0.6 이상 ■ 소득 완전별 지니계수와 총소득 지니계수 간의 관계에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에 의한 상대적 기여도가 90% 이상이며, 총산, 전산, 경북은 농업소득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고, 경기, 충북은 농외소득에서의 격차가 컸음.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경상소득에서의 불평등도 확대에 기여했으나, 이전소득은 완화에 기여 ■ 지역 내 지니계수는 상승 추세이나, 전체 지니계수 기여도는 약 12%로 크지 않았으나, 지역 간 격차가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전국 지니계수의 88%를 기여
10	권오성 강혜정	2008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 소득의 절대적 수렴과 상대적 수렴	농가단위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 소득의 절대적 수렴 현상과 상대적 수렴 현상을 계량분석하되, 이 과정에서 농가가 가진 어떤 특성에 의해 소득의 장기균형점이 달라지는지를 밝히고, 소득 유형별로 소득의 수렴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소득의 수렴 속도가 시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	■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 및 상대수렴 현상을 보이며, 절대적 수렴보다는 상대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농가별 특성과 지역특성에 의해 각 농가는 서로 다른 수준의 균제상태 소득으로 수렴함. ■ 소득의 증가 속도는 다르며, 유사한 농가 간의 소득 수렴속도가 전체 농가 간의 수렴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 농업소득보다는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의 수렴속도가 빠르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수렴속도가 빨라지지만 농외소득은 보다 최근의 시기에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각 농가의 소득이 수렴해가는 수준과 소득 증가 속도는 지역별로 유한한 차이가 있으며, 경영주의 나이, 교육 수준, 경영규모, 농지 위치지역의 지형적 특성, 전업농 여부 등도 소득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그 통계적 유의성은 농업소득이나 아니면 농외소득이나에 따라 차이를 보임.
11	권오성 강혜정	2013	농가소득에 있어 '이웃효과' 추정	농가소득 결정에 있어 '이웃효과'를 측정하여 개인 간 상호작용의 균형현상을 설명하고 농가소득 유형에 따른 '이웃효과' 비교를 통해 유형별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 모두에 있어 '이웃효과'는 존재함.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나 농지면적 등과 같은 지역 자체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농가들의 개별 특성에 의해 영향 ■ '이웃효과'는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외소득의 순서대로 크게 추정되었음. ■ '이웃효과'의 존재는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가 일종의 승수효과로 작용해 개별농가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는 실제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12	권오성 강혜정	2013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 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가의 개별 기구 특성을 물론,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에 각각 기여하는 지역의 특성이 다름. ■ 농업소득은 해당 경지면적이나 전업농의 비율이 높은 지역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높고, 농외소득은 도시화 진행 속도가 기여 ■ 중소도시화 지표에 농업소득이 양(+)의 반응을 해, 도시화가 진행될 때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선택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가능성 존재. 컴퓨터 보급률 변수(정보화)가 농업소득에 유익해, 농업소득은 농업 생산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높고, 동시에 도시화와 정보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존재 ■ 지역의 품목 특화 혹은 주산지 형성 행태가 지역에 위치한 농가들 소득에 유의하며, 쌀보다는 채소류와 특용작물 생산농가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전체의 농업소득이 높아지며, 지역 내에서도 쌀보다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음. 그러나 일반 밭작물 주산지는 타 지역에 비교해 농업 소득이 낮음. 채소농업단지에서는 지역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외소득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나, 반대로 일반 밭작물 주산지는 모든 소득이 타 주산지 지역에 비해 낮음.
13	권오성 반경훈	2015	한국 농업 KIAM자료의 구축과 생산성 변화 요인	2013년까지의 농업부문 투입 및 산출 지수를 구축하고 중요생산인	■ 한국 농업은 투입과 산출 구조 면에서 지난 43년 동안 현재의 개발도상국형에서 현재의 선진국형으로 급속히 모습을 바꾸었음. 그동안의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은 물론이고 총생산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해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윤지원		분석	성의 변화를 계속, 농업소득과 더 붙어 농업 생산성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실제 경제체제가 뒷받침하는지를 계량분석을 통해 확인	온 것에 크게 힘입었으며, 한국 농업은 현재도 규모 수의 증대의 구조를 가진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투입과 산출이 모두 감소하는 선진국형 투입-산출 구조를 갖게 되고, 오히려 현재의 선진국 평균보다도 더 빠른 생산규모 감소로 인해 생산성 향상 자체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기술 혁신과 생산 규모 유지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함. 추가로 투입요소 가격 변화에 적절한 생산구조가 반응하는지도 생산성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음. 생산성 변화는 장기적인 경향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기상이변 등에 따른 단기적인 등락도 상당한 정도임. ■ 2000~2010년 기간 동안 농가인구 및 경영주의 고령화(2000년 58.3세→2010년 62.3세), 농가 경영의 전문화와 동시에 경영 및 영농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규모, 판매금액 등 양극화가 발생 ■ 30~50대를 중심으로 신규 진입 혹은 영농승계가 이루어졌고, 60대는 은퇴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변화는 거의 없는 정체 상태임. 반면, 70대 이상은 은퇴 또는 영농승계 등으로 소멸 ■ 경영주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며, 전업농 비중이 2000년 63.2%에서 2010년 53.3%로 감소했지만, 겸업농 비중은 46.7%로 증가. 이 중 1종 겸업농기는 감소했지만, 2종 겸업농은 증가함. 영농형태별로는 축산, 채소, 과수, 특용작물 순으로 전업 비중이 높고, 전작, 화훼, 논벼 순으로 2종 겸업농의 비중이 높음. ■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신규 농가의 경우 전업농 비중이 높고, 2종 겸업농은 증가하면서 농업 이외의 소득원 확보가 신규 농가의 진입 및 인체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가당 경지면적은 2000년 1.16ha에서 2010년 1.23ha로 규모화가 이루어졌으며, 논벼 위주의 영농이 감소했지만, 특용작물, 화훼 등으로 작부체계가 다양화 ■ 판매 없음' 농가 비중이 증가(6.5%→38.0%)하였고, 5년간 원 이상의 판매 금액을 기록한 농가 비중이 2000년 2.2%에서 2010년 6.7%로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 ■ 생산성의 경우 하락보다는 연평균 더 민감하게 영향을 주며, 화훼·축산농가가 더 탄력적으로 성장. 2000, 2005년 동안 경자규모화에 대한 제증적 수단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에는 효과가 사라져 생산성 향상의 한계성을 보임. ■ 지역별 면적과 판매금액 집중도에서 면적 기준으로는 과수와 축산의 지역별 집중도는 떨어지는 반면, 논벼는 증가. 판매액 기준으로는 화훼, 축산, 특용작물의 집중도는 떨어지는 반면, 논벼는 증가 ■ 10년간 도 단위 지역농업 특색은 퇴조하였으나, 시군·읍면 단위는 보유
14	김경덕 김정호 김종선	2012	농업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2000년 이후의 농업총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농업의 생산 및 경영 구조의 변화 분석을 통해 한국 농업의 속성을 규명	■ 전체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의 비중이 하락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 ■ 농가소득은 고소득 집단에 집중 ■ 농가소득 불평등은 2000년 0.452에서 2011년 0.562로 증가(계 고(高)불균등 분배로 변화 ■ 불평등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경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가구원 수와 농업 노동시간, 자산 특성 변수
15	김규섭 이성근	2014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영농요인에 관한 연구	농가소득의 추이와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중에서는 자산(자금), 영농형태 변수 중에서는 논벼, 특용작물, 축산농가의 비율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6	김기환 서병선	2008	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가 구조 소비지출 패턴에 관한 연구: 도시 가구의 비교	농가 소비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체계의 변화를 탐색	■ 농가가 도시 가구보다 식료품 소비가 크지만, 도시 가구는 교육·오락비 및 기타에 대한 지출이 많음. ■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농가가 도시가구보다 지출이 많이됨. ■ 소득 증가에 따라 농가와 도시 가구 모두 필수품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나, 교육·교양·오락비와 기타 잡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함.
17	김동신 조덕호 여창환	2016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를 중심으로 농업법인 조직에 영농인의 참여가 농업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농 경지규모와 농업소득의 관계에서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보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농업법인 조직에 참여하는 영농인의 농업소득이 참여하지 않은 영농인의 농업소득보다 높음. ■ 영농조합법인 참여가 농업회사법인 참여보다 소득 증가 측면에서 더 높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 ■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이 향상되었고, 이때 경지규모와 농업소득의 관계를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음(-)의 조절 효과를 보임. 즉, 경지규모가 클수록 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농업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임. ■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 영농인들에게 농업법인 참여를 장려하되, 경지규모에 따라 적절한 농업법인 참여 전략과 방향 제시 필요
18	김미복 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2000년대 농업구조 및 농가 경제 변화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제시	■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하여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농가소득의 반등 ■ 규모화 정책으로 전업농 영농규모는 확대되었으나, 7ha 이상의 대농 그룹의 소득은 정체되어 관련 정책으로 쌀 농업 및 위험관리 정책 강화 필요 ■ 전업농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2중 겹입 비중 증가로 농가소득 증가 견인 ■ 40~50대 절대빈곤층이 감소하는 추세로 농촌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빈곤층 농가 누적현상 심화로 사회복지정책 강화 필요(일시적 영농 실패를 포함할 경우에는 절대빈곤 농가 증가) ■ 2015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6.5%, 9.3% 증가하고, 농외소득이 0.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이점소득이 15.9% 증가 ■ 금액이 높은 축산농가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논벼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나, 논벼 농가 소득의 절대금액이 낮아 영농형태별 소득 격차는 큼. ■ 소득 정책이 장기화된 농가소득은 2013년 이후 저축해서 증가하고, 2015년 농가소득 상승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 ■ 성장년 소농: 2010년 32.5%, 2015년 21.5%로 농가 비중이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위주로 증가
19	김미복 오내원 황익시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가의 농가소득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유형별로 도출	■ '성장년 중대농': 농가 비중 확대(축산, 과수, 채소농가 증가),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존도 52.4%) 증가율도 높음. 소득이 증가했지만, 양극화되고, 부채 비율이 높음. ■ '고령 소농': 농업소득은 감소했으나 이전소득 증가로 농가소득 보전(2015년 농업외보조금이 농가소득의 27.9%)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 '고령 종대농': 주로 논벼농가. 2010년 7.8%에서 2015년 17.4% 비중으로 농가 수 증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했으나 소득 증가율은 다른 그룹보다 낮았음. ■ 1991~2002년 동안 농가소득 불균등 정도는 악화하여 옴. 지난 10여 년간 농가소득의 불균등도 악화는 집단 내, 특히 경지규모가 작으면서 경영주 연령이 높은 농가 계층에서 소득 불균등도가 심화된 것에서 기인하나, 상당 정도는 농가연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젊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 소득 격차가 확대 되었기 때문임. ■ 지난 10여 년간 집단 간 소득 불균등도(3배)가 집단 내 소득 불균등도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 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 증가 ■ 고령화기에도 23.8%에 따른 농가소득의 불균등도 심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10여년 간 농촌 소득 분배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IMF 이후 소득 불균등도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상위, 중위보다는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크게 감소 ■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았으며, 10여 년간 농외소득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전소득 비중은 크게 증가 ■ 농업소득의 불균등도가 다른 소득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 농가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은 교재중여비, 음식물비, 보건의료비 등이며, 지난 10년간 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항목은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재중여비 등임. ■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농가소득의 불균등도에 비해 낮고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필수재 성격의 소비지출은 농가 간 불균등도가 낮지만, 교육, 교재중여에 대한 지출은 농가 간 격차가 크고 전체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도 높게 나타남. ■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농가 유형별(규모, 영농형태)로 분해할 경우 집단 내의 불균등도가 전체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대부분을 설명 ■ 세대별 소비지출의 변화는 세대별 소득 변화와 유사하지만, 세대별 소득 격차보다 세대별 소비지출격차가 더 큼. ■ 세대주 연령별 소비 성향은 가족 부양 부담이 가장 큰 40대 후반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1990~2000년 동안 소득 불균등도는 커졌지만,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 ■ 같은 기간 한계소비성향은 0.22~0.260이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은 연령별로 다름(노령농가 한계소비성향 0.31, 비노령농가 0.19). ■ 순자산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함. ■ 농가소득은 농가소득 증가로 식료품이나 피복신발비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
20	김성웅	2004	농가소득 불균등도 변화 추이의 경영주연령별, 경지규모별 요인 분해 분석	농가소득의 불균등 문제를 다루고, 농가소득 불균등도의 변화를 조래한 요인을 분석	
21	김성웅	2004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전별 분해	농가 계층 간 소득 분배 문제 특히, 소득 불균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22	김성웅 이계임	2002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농가소득이 아닌 농가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농가 후생의 불균등도를 분석하고, 가구 특성별로 나누어 집단 간 또는 집단 내 불균등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 구조를 파악	
23	김성웅 이계임	2003	한국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농가 소비와 관련하여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한계소비성향 등의 주요 이슈들을 농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으로 나누어 농가 소비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 농가의 소비지출은 경영주의 연령, 영농형태와 영농지대에 따라 지출 규모와 항목별 지출 비중 측면에서 다름. ■ 가계비 지출 중 가격 비탄력적인 항목은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이대용비, 보건의료비, 기타 잡비인 반면, 광열수도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는 가격 탄력적으로 나타남. ■ 지출 탄력적인 소비지출 항목은 교양오락비와 보건의료비지만,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주거비, 이대용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기타 잡비는 지출 비탄력적 ■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한 애초 목적은 대규모 농업생산경영체 창설이었으나, 영농 종사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적어 실효성 떨어짐. ■ 많은 농가가 부차로 법인경영에 참여하고, 농업법인들에 생산은 농기들의 개별경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법인이 농업생산보다 농업서비스 활동에 집중 ■ 기존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필요. 기업능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기존의 가족농 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유한농법인) 창설.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서는 유통 및 가공 전문법인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제공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책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음. 등록 정보를 활용한 경영체의 유형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업인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고객서비스를 위한 등록체 활용도 부진한 실정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경영체 지원을 위한 통합 DB로 활용, 경영체별 지원사업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농성을 위한 경영체 유형화도 등록정보를 활용, 농업경영체 등록이 경영체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활용. 등록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거나 등록정보에 근거한 정책 자료로 활용. 등록정보를 정책고객서비스(농업인 대상) 수단으로 활용 필요 ■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중 더욱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독일 고유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해당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임. ■ 독일의 등록제는 4대 사회보험 기금과 세무사 사업자 신고를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인증 요건이 명확하고 '정식적인 사업체의 면모를 나타내는 역할을 함. ■ 한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책사업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독일의 경우 각종 직물사업(특히 EU 단일 직물제)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한국 역시 각종 직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음. ■ 독일에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인증을 규정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별, ② 최소 영농규모, ③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핵심 내용으로 두고 있음. ■ 독일과 비교해 한국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간주되고 농업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하면서 확인하기
24	김수석	2007	농업법인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농업법인제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발전 및 개선 방안 제시	
25	김수석	201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추진 및 등록 실태를 조사하여 현 등록제를 진단하고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등록된 DB의 활용을 단순히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농정 추진 체계 개선의 관점에서 등록제의 역할 검토	
26	김수석	2013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구성과 운용 시스템을 파악하고 한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27	김수석	2013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지원 체계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세제 지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쉽지 않은 규정으로 되어 있음. 최소 영농규모에 대한 규율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농업 관련 사회보 함 기입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는 의무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농민단체의 반대와 행정 제도의상의 문제로 농업경영체 인증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 등록이 힘들. ■ 독일은 일반 산업과 구별하여 농업을 특수산업으로 인정하고 세제 특례를 부여. 독일처럼 주안농 중심의 세계 지원 방향이 정립되면 농업경영체 인증조건 중 하나인 최소 영농규모를 전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강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농업 발전을 위해 독일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과 같은 개념을 도입. 독일의 세계 지원 대상은 농업 생산활동이 주된 것이며, 농산물 가공·유통과 관련된 서비스는 농업 생산 활동에 비해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
28	김수석 김종선 변아름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 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 선방안 연구	농업경영체 등록제 발전을 위한 기 본방향 재설정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08년도 도입되었지만, 등록정보가 정확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형식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정보 획득의 용이성, 정부의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 연계 실시, ③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기반으로 등록정보 활용, ④ 농업경영체 개념 및 인증 기준 정립, ⑤ 등록정보의 통계적 및 정책자문적 활용방안 마련, ⑥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단으로 활용 ■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형태가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남. ■ 군집분석을 통해 쌀 전업농, 원예 종사농, 축산 전업농, 고령 복합농, 고령 영세농, 부업농의 6가지 형태 로 유형화 ■ 농가 유형 구분의 방법으로 확산영농규모 지표(투입요소 크기)에 의한 구분,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산출성 과의 크기에 의한 구분),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6가지 농가 유형의 세 가지 방안 제시 ■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화는 투입요소와 의한 유형 구분보다 산출성과에 의한 유형 구분이 더욱 현실에 부합 다만, 표준소득 기준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과도기적으로 확산영농규모에 의한 유형화 실시 필요. 농가들의 특성에 근거한 군집분석 유형화는 맞춤형 농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개량화하고 구체화 필요
29	김수석 김태근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 구분 연구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가 유 형에 대한 분류방법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농가 유형 구 분을 제시	■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공간적 편중도를 전체에서 배치되는 비율로 확산하면, 농업경영체의 약 25%가 혜택에서 배치되는 정도와 같은 편중도를 보임. ■ 쌀농업 직불금 공간적 배분은 현행 기준 적용 시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약 36%가 혜택에서 배치되는 편중도를 보임. 이는 불이 상대적으로 공간 편중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쌀농업 직접지불금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공간적 배분이 어느 정도 중첩되어 공간적으로 편중된
30	김재경	2013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간 형평성 평가 -직접지불금의 공간적 배 분을 중심으로-	두 확률분포 간의 거리를 상대적 엔트로피(relative entropy) 형태 로 평가하는 Kullback-Leibler 발 산도(Divergence)를 활용하여 보 조금의 공간적 배분의 형평성 분석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틀을 개발·제안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공간적 배분의 편중도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쌀농업 직 접지원금으로 인한 편중도 완화 효과를 평가	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음(농경지면적 기준 0.87%p, 농업경영체 기준 0.26%p 완화) 보조금 지급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갖는 공간적 편중성을 명시적으로 개선하기 힘들. ■ 쌀농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병행 실시할 경우에 경지면적 기준 2.9%p, 경영체 기준 4.8%p의 편중성 개선 효과가 있음.
31	김재경 김한호	2011	농업 R&D투자의 농가소득 불균등 개선효과	농업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창출된 공공자식이 농가의 소득분배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득 불균등 정도를 완화 내지 악화시키는 지 계속	■ 농가소득 불균등도는 2004년까지 악화되다가 2006년 잠시 개선되었으나, 2007년 다시 악화 ■ 농업소득 불균등도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 60% 수준이며, 사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불균등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업 자산소득의 농가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한계효과는 -8.39%이며, 이는 여타 자산과 비교했을 때에도 소득 불균등 해소 효과가 가장 컸음. ■ 소득 불균등을 완화시켜주는 주된 요인은 경지면적 및 유 무형의 자산인 것으로 나타남.
32	김정섭 오내원 김경인	2016	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 활동 실태와 과제	농가의 다면적 활동의 실태와 특징 분석을 통해 다면적 활동이 농가와 농촌에 주는 의미를 밝히고 이와 같은 다면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농가의 가계지출 증기분을 검증한 소득원은 농업소득이 아니라 자기영농 외 경제 활동에서 얻는 소득으로 나타남(농가경제조사 2004/2015). ■ 농촌 및 사회 전체의 환경 변화가 농가의 다면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다면적 활동을 위한 농가의 의사결정은 '노동-소비'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이뤄지며 다면적 활동 중 외부차 영향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농촌의 다면적 활동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태로 농촌의 서비스 기반과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의 다면적 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략을 강조
33	김정호 김태근 박대식 김수석 김혜정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도입 예정인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맞춤형 농정이란 정부가 농가 유형별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 추진방식이라 정의함. ■ 농가 유형은 ① 경영 성장 단계에 따라 전업농, 준전업농, 중소농으로 구분, ② 보조 유형에 따라 고령농, 창업농으로 구분, ③ 농가소득 구성에 따라 부업농, 여가농으로 구분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정책 원리으로는 목표의 명확성, 수단의 차별성, 대상의 배타성, 작용의 형평성, 실행의 자율성 등을 제시 ■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① 농가 등례제 도입, ② 수요를 고려한 정책사업 조정, ③ 융자사업의 종합자금화 및 성격에 따라 구분, ④ 행정 전담조직 마련 등이 필요
34	김정호 박영기 강상현 심은숙 최은아	2015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관련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제도 적용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	■ 1990년도에 농업법인제도가 발족한 이후에 법인 설립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형식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하고 운영 실적은 없는 사례가 상당수로 나타나 제도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농업법인의 강점은 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의 협업경영 기능, ② 규모 경제 실현 기능, ③ 농업 경영 및 사업의 계속성 유지 기능 등임. ■ 농업법인제도의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으로 ① 불합리한 운영 사례 점검, ② 농업경영체법에 의거하여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35	김정호 이병훈	2005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농업총조사 통계의 시·군 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을 위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고 지역농업의 역량을 규정하는 요인을 밝힘.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법인을 재정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농업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 ④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사후관리 강화, ⑤ 농업법인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정책적 교육·홍보 ■ 31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1주성분은 지역농업의 규모를 함축, 2주성분은 경영효율성을 함축, 3주성분은 대농경영의 성격에 함축, 이는 사전적 규모지표, 성과지표, 능률지표를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 ■ 또한, 이 중에서 중요한 지표를 선정하여 각각의 지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역농업역량종합지수(Total Capability Aggregation Index)를 산출하였으나, 이 종합지수에서도 기준치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것이 규모지표였으며, 특히 농업생산력 규모가 지역농업의 역량을 좌우하고 있음.
36	김정호 정영환 최은아	2015	농업법인조사 개선방안	농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가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체계,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개선방안 도출	■ 전수조사보다는 조사대상 기업단을 유형별, 지역별, 법인 형태(영농조합법인/사)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표본조사방식 도입 ■ 조사 항목의 경우 공통 항목으로 주 사업형태(종목)와 정책사업 수혜실적 및 기타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확대, 유지, 축소) 등 3개 항목 추가 ■ 농업법인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경영학적인 통계표를 개발
37	김정호 최은아	2015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농업 경영인정 지원제도 확립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농가 경영정보 DB 구축 및 확보의 개선방안,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대상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농업 경영 컨설팅의 대상과 경영체 관리방안 등을 제시	■ 정부가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고 2008년부터 농가등록 DB 구축에 착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맞춤형 농정의 기반이 되는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을 비롯하여 유형별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 ■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신지식 농업인의 특성상 농업경영체 정보 DB 구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개별농가로서는 상대성과 비교하여 비교 가능한 경영지표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으며, 특히 영농형태별로 축산이나 특용작물의 정보 비교에 대한 의견이 높았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 간의 일관성 제고 등이 필요,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공급업체와 컨설턴트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 필요 ■ 전업농가의 경우 농가소득 결정에 축산소득과 농업 노동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이 높았고, 1종 겸업농가는 축산소득이, 2종 겸업농가는 축산소득과 1인당 GNI가 영향을 미침. ■ 농업소득 결정요인으로 전업농가는 축산소득, 1인당 농업 노동생산성, 패러지 지수가 영향을 미치며, 1종 겸업농가는 1인당 농업 노동생산성, 2종 겸업농가는 농작물 소득, 1인당 GNI, 1인당 농업노동생산성이 영향을 미침. ■ 농업소득 결정에 모든 유형의 농가에서 1인당 GNI가 영향을 미치며, 1종과 2종 겸업농가의 경우 전업농가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음.
38	김제안 최종훈	2009	농가유형별 소득결정요인 분석	농가 유형별(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형별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39	김태이 임정빈 인동환	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가소득 불평등의 심화 요인과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공적보조금이 농가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지역간 차이를 비교 분석	■ 공적보조금을 제외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가 공적보조금을 포함한 지니계수보다 높아 공적보조금은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 ■ 충북, 경남의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지역이 낮음. 강원은 불평등도가 완화됐지만, 전남과 경북은 크게 증가 ■ 공적보조금은 충남과 경북의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크며, 충남과 전남의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크게 확대 ■ 지역 간 농가소득 불평등이 전체 농가소득 불평등의 88%를 설명하며, 전남과 다른 지역 간의 지역간 불평등 지수가 상대적으로 큼. ■ 농가소득 격차가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50%를 설명하며, 이전소득은 10% 미만이나,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도 비중은 증가 ■ 충남, 강원,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도 비중이 높으며, 공적보조금 중 기타 농업보조금(농약, 비료, 농업직불금 등)에 의한 불평등도의 비중이 높음. ■ CART 분석 결과 농업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영면적 및 쌀 소득 비중으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1차 유형화 실시 후 농업소득 유형에 따라 2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공인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에 따른 소득 유형별 비중 파악 ■ 농업소득 비중을 감안하여 소득계층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4계층으로 구분(1계층=32.691천 원, 4계층=8,176천 원, 분석 결과 1계층 14%, 2계층 12.6%, 3계층 17%, 4계층 56%)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농업경영체가 소규모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소득으로 분류된 농업경영체를 쌀 소득 및 한우 소득으로 추가 유형화 ■ 농업경영체 DB 활용 방안 제시 차원에서 향후 농업 직불제, 규도를 추정, 추정 결과 발직불제는 총 171천 호 대상 793억 원으로 추정 ■ 지역적 편중도를 이용한 직불제 유형별 형평성 평가 실시. 쌀 직불제의 지역적 형평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향후 보완사항으로 농업 성과자료 구축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확립 등을 제안
40	김한호 김재경 김부연 윤상은 한봉희	20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유형별 농업경영체 특성 분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는 한편 유형별 농업경영체들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고, 맞춤형 농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적 의미가 있는 집단으로 유형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불일치 농가 특성은 ① 전업화 지수가 낮은 농가, ② 판매액이 낮은 농가, ③ 영농경력에 짧은 농가, ④ 전문화 지수가 높은 농가, ⑤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가 등으로 나타남. ■ 농가입출조사의 농가 수와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의 농가 수가 다르게 조사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복 경영체 등록일 가능성이 있음. 중복 경영체 등록 농가(이하 중복 농가)란 신청번호는 각각 다르지만, 경영주 주소가 같은 경우를 의미. 농가입출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 한 농가로 취급하여 조사했
41	김한호 이태호 남대희 우아미 민진경	201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 유형별 특성 분석 및 DB 구축 개선 방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이용하여 유효한 정책 실시를 위한 기초적 농가 유형화 모델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된 농업출조사 자료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농가 DB 구축사업이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이용하여 유효한 정책 실시를 위한 기초적 농가 유형화 모델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된 농업출조사 자료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농가 DB 구축사업이 개선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42	박규동	2013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농업법인에게 지원되었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농업법인 육성 정책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변화 요인을 추정함으로써 농업법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효과성 평가	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다라도 개별적,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면 다른 농가로 구분. 1,523,713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의 서로 다른 주소 숫자는 1,402,157개로 나타났다. ■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사업은 대상법인의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에 대해 확연한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도 많았음. ■ 융자금 지원은 농업법인의 장기적인 성장지표(고정자산/총자산)에 미미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켰음. 따라서 법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융자금이 보조금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 현재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들이 농업법인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닌 농업법인의 수익 없는 생존에 이바지 ■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이 생산자의 판로 개척이나 상품개발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법인에 대해서 규모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지속적인 정책 평가 체계 구축 필요
43	박민선	2008	한국농업의 구조변화 -2006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농가의 직접적 영세농과 판매규모가 큰 기업적 소농으로 분류되는 양상을 경작 규모와 판매 규모를 중심으로 검토	■ 일반 발전물과 미작, 채소 경작 농가에 영세농이 많고 축산, 과수, 화훼와 같은 작물에는 대규모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분해의 양상은 생산의 집중화를 수반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경종농업과 축산에서 모두 규모가 큰 농가로 생산의 집중화 ■ 경영주의 고령화, 여성화, 후계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서 농업의 세대 간 재생산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기계의 개성을 통한 농업생계는 후계자 확보에 한계 ■ 경영이 늘어내면서 제2종 경영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들은 순수 혹은 반지급적 농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부업농적 성격의 농가로 평가. 농업과 관련된 판매 및 기금, 서비스에 종사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그 비율은 높지 않음 ■ 상대적으로 젊고 경영규모가 큰 전업적 농가를 중심으로 전환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44	박성재 황익식	2003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농가 부채 실태를 진단하고 근원적인 부채 대책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지역별, 영농형태별, 연령별 부채 변화 양상이 달라 농업인들은 개선 징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임. 채주와 강원은 부채규모도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며 전복은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증가. 30대 경영주 부채규모가 가장 크나 감소했으며, 70대 부채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증가. 화훼농가가 상대적으로 규모와 증가 속도 측면에서 가장 나빠고, 축산농가는 규모 감소가 빠르게 진행 ■ 단기상환능력: 부채 없는 농가는 감소하다 2001년 26.0%까지 증가. 유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98년 정점에 달한 후 2002년 56.3%로 개선. 단기자립능력: 부채 농가 비율도 2001년 31.0%로 감소했으며, 장상환능: 비율은 2002년 78.8%로 높아짐. ■ 장기상환능력: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농가는 2002년 10.8%. 부채규모가 1억 원 이상인 농가 중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농가가 74.8%, 0.5~1억원 그룹에서는 46.4%로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부채 농가에 장기상환 능력이 취약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45	박종훈 황재희 이성우	2014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결합유형별 소득 증대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6차 산업화 추진방향 정립	■ 6차 산업화 결합유형별 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수입 결정요인 2개에는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농업사업수입과 농업외수입을 분석한 결과, 1×2차, 1×3차 유형이 1×2×3차보다 수입이 많음. ■ 종합형 결합보다 부분형 6차 산업화 연계유형을 활용하는 등 보다 유연한 형태의 6차 산업화 추진 전략이 필요
46	박준기 민한필 김용택	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가소득 소득 분포를 계층별로 살펴보고, 농가소득의 종합적 소득 불평등 지표를 분석, 소득원천별, 경영주 연령별 및 영농규모별로 전체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나 대수편차평균 모두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그 추세가 심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 심화 ■ 농가소득 전체 불평등도에서 농업소득 불평등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그 크기도 1998년 38.1%에서 2002년 51.0%로 증가 ■ 전체 불평등도 중 집단 내 불평등도 비중이 92.3%로 절대적이며, 집단 간 불평등도 확대되는 추세 ■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높으나, 농업소득 불평등도는 낮으며, 30대 이하의 젊은 경영층의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평등도 약화 ■ 표준영농규모 기준, 연령별 요인분해보다 집단 간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정도가 크며, 농업소득은 집단 간 불평등도 기여 비중이 1998년 39.6%에서 2002년 42.4%로 높아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영농규모 간 불평등 차이가 높아지고 있음.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화되나 3-5ha의 중대 규모 농가의 불평등도도 심화되는 상황임.
47	서종석 김인석 서정원 이연숙 김다혜	2017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농업법인 실태 파악을 통해 신규 사업의 범위를 발굴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조사담당자의 업무 미숙, 조사병식의 기준 부재,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농업법인정보 사전 제공, 지자체가 직접 조사 수행, 소재지 불명 범위 관리, 조사항목 추가 및 조사 기간 연장, 전산입력 활성화 등을 제시 ■ 농업법인조사 실태분석: 지역별 분포, 연도별 운영실태별, 사업별, 농지 소유 현황, 종사자 수 등 ■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①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및 분석과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②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일관된 연속성 유지, ③ 조사표 개선 등을 제시 ■ 고령 경영주(65세 이상)의 증가는 고용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확률이 높음. ■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은 경영주 고령화가 37개월 이상의 고용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화초·관상작물·축산은 6개월 이상의 고용에서 큰 영향을 받음. ■ 72.6%의 농가는 과잉고용과 관련 없는 자기능 형태이며, 3개월 이상의 인력 고용 경험 농가는 2.2%에 머무르고 있음. 총 농가 수가 줄어들수록 고용수요가 감소하며, 영농 형태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48	신환호 조규대 서종석 김인석	2013	농업부근 경영주 고령화와 고용인력 수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분석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와 관련한 농업 고용인력 수요의 특징을 파악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고용 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고령농 여부는 추정계수가 모든 경우에 음(-)의 부호로 나타나 모든 고용 기간에서 고령농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 확률이 낮았음. 고령농가가 비교경보다 대부분 영농형태에서 고용 확률이 낮지만, 단기고용은 특용작물 버섯에서, '중장기고용'의 경우 축산에서 영향이 큼.
49	신환호 조규대 우수근	2015	한국 농업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영농형태별 고용 인력 수요분석	농업경영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 영농 형태별 고용인력 특징과 고용 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령농 여부는 추정계수가 모든 경우에 음(-)의 부호로 나타나 모든 고용 기간에서 고령농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 확률이 낮았음. 고령농가가 비교경보다 대부분 영농형태에서 고용 확률이 낮지만, 단기고용은 특용작물 버섯에서, '중장기고용'의 경우 축산에서 영향이 큼.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50	인동환	2004	도시근로자규모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농가와 도시근로자 규모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고, 각 소득원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불평등지수의 요인별 분리 계측	■ 판매액이 많은 큰 규모의 농가가 인력 고용 확률이 높으나, '단기고용'은 논벼와 과수에서, '중 장기'는 화초·관상작물에서 그 영향이 큼. ■ 농기계 보유가 대부분 영농 형태에서 고용확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기계 운용 인력과 관련된 경우 농기계와 고용노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농업 경영주의 교육 기간이 많을수록 고용 확률이 높지만, 그 영향력은 '단기고용'은 화초·관상작물 및 과수에서, '중기고용'은 특용작물·버섯에서, '장기고용'은 축산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남. ■ 강령주 영농경력은 고용 기간별로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영농경력이 많아질수록 단기고용 확률이 높지만, 장기고용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51	오내원 김수석 정호근 고국 이명현	2006	농기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농기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도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시행 방안을 검토	■ 1990~1995년 도시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었으나, 1995년 이후 다시 악화되었음. 농가는 1990~1995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다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그룹 간 소득불평등 격차는 미미하며 대부분의 소득불평등이 그룹 내의 소득분포에 의해 결정. 다만, 그룹 간 소득불평등 차이가 최근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IMF 경제위기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분배에 다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1990~1995년 도시근로자 소득불평등도 개선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완화에 서 기인하였음. 1995~2000년에는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했지만, 사업 및 부업 소득, 재산소득의 불평등도는 감소 ■ 농가의 경우 1990~1995년 비농업 소득임을 중심으로 불평등도가 증가하였으며,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 해감에 따라 비농업소득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기본 방향 제시: 직접지불제에 근거, 농가의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 전업농 육성과 소득 안정 정책의 기반 ■ 농기등록제 시행 방안 및 농기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제시
52	오내원 김근준	2001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 방향	농외소득의 최근 동향과 문제, 현행 농외소득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	■ 1985~1994년 기간 농외소득은 연평균 7.0%의 높은 성장성장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농외소득은 13.1%씩 증가하여 소득 증가를 주도하였음. 하지만 1995년부터 농외소득은 정체 상태를 보였으며, 도농 소득 격차가 확대됨. U자형상 이후 농산물 가격에 정체됐지만, 투입재 가격 상승과 고정자본비용이 증가하여 실질농업소득은 감소하였음. ■ 1997년까지의 농외소득 증가는 건설 등 도시 일용부문의 호황에 따른 기타 노임의 증가가 주도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53	오내원 박준기 정원호 권오상 강혜정	2013	농가소득의 증진기 실태 분석	농가 유형별(노동력 조건, 표준영 농규모를 기준으로 분류) 경영지표 분석을 통한 생산 조건 및 양극화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지원 효과 및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경영농 비중은 1986년 43.5%까지 증가하였으나, 1997년 이후 농외소득 감소와 함께 23.9% 감소 전업농 농가소득은 1종 경영농의 66%에 불과하며, 농민소득조사 1종 경영농의 69% 수준에 불과, 경영 농 대비 전업농 상대소득은 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 2000년 전업농 평균 농민소득은 1995년에 비해 18.4%(실질 24.8%) 감소하였으며, 전업농 중 노령가 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공단지개발사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선정되어 지역 농민들의 기금이나 특산물 개발의 부가치에 종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임금소득 수취에 그침.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은 일반 음식· 숙박 업체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과다한 투자로 운영 부실을 초래하였음. 농어촌특산단지개발사업은 지역 특산물과 일반 공산품의 혼재로 사업 성격이 불분명하고 낮은 기술력으로 상품 고급화에 실패하여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 다품종 소량생산에 맞는 유통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 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음.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은 높은 원료 가격, 홍보 및 판매 예로, 계절 적 기금 특성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 ■ 농가 유형의 경우 경영주 연령(70세)과 표준영농규모(1ha, 1~3ha, 3ha 이상) 및 영농 후계자 보유 여부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 ■ 1990년대 이후 농가소득 추세를 구분하면 농가소득이 증가했던 17(1990~1996) 이후 2011년도까지 는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가 교역 조건 악화로 농가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3기 (2006~2011)에 농민소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실질농가소득이 감소함. ■ 농가 유형별 변화 양상은 경영주 연령 70세 미만, 영농 후계자 보유, 표준영농규모 3ha 이상인 농가가 대조군보다 농업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감가상각비 이상 고정자산투자를 한 비율은 25.6%로 낮음. 또한, 노동생산성 및 소득 증가율도 높았으나 연도별 격차가 심해 상대적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높음. ■ 1998~2011년 양극화 지수 분석 결과는 1998년도보다 2011년도의 양극화 지수가 약 20~40% 높았으 며, 2003년 이후 농민소득의 양극화 속도가 농외소득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 특성이 소득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농민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 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다름. ■ 농가소득 추세 분석 결과, 1990~1994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농업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정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으로써 농업 구조조정 촉진 및 농외소득 증대, 직불제 확대 등을 제언 ■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2~3차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한 복합 산업화 제시. 또한, 차별적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농가 유형을 구분(주업농, 부업농, 고령농) ■ 그린투어리즘 관련 해외사례(유럽, 일본, 대만 등) 조사 결과, 참여 농가 육성 및 체계적 관리, 경제적 한계, 사업 관리를 위한 민간기구 육성 등 정책 방안 제시
54	오내원 장기환 최경환 김은수 김태근	2001	농가계층별 소득증대 방 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 향과 전략	농업 여건변화 속에서 농외소득의 의의와 필요성을 정립하고 농외소 득 증대를 위한 발전 방향 및 정책 방안 제시	
55	윤성근	20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	등록정보 DB상의 개별 농업경영체	■ 농업 내 부문별 공간짜기식관 유무의 감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일정 정도의 집적 현상이 존재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김재경 김한호		이티베이스를 이용해 확 인한 농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양상	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활용하 여, 한국 농업 활동의 공간적인 분 포 양상을 살펴보고, 세부 품목별 로 확인하고 그 특징을 파악	128개 품목/품종 가운데 84개 품목이 공간적 자기상관을 띠고 있음 ■ Moran's I가 커 상대적으로 집적 강도가 높은 품목은 감귤, 민감, 배합, 노지옥수수, 담배, 노지고추, 참다래, 복숭, 콩 등임. ■ 공간적 자기상관의 정도가 동일 품목에 대해 시설재배가 노지재배보다 자기상관 정도가 큼. ■ 쌀은 서남해안의 평야 지역, 전작물 및 재식은 강원 및 인접 지역과 제주, 과수는 경북과 제주, 조미채소는 충남과 전남, 특용작물은 강원·충북·전북을 연결하는 산맥을 따라, 축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 ■ 옥수수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고추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에, 콩은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를 연결하는 집적지를 가짐. ■ 1993~2011년간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 지수 모두 최근에 이르러 그 값이 증가하여 농가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심화, 해당 기간 지니계수는 0.312에서 0.424로 증가하고, 대수편차평균 역시 0.175에서 0.330으로 증가 ■ 42~75세의 농가소득 불평등 기여도는 1993년 88.6%에서 2011년 84.1%로 감소 농가 영농주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약 0.14% 증가 ■ 연령층과 모형 분석 결과, 영농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가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이 증가 ■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영세 과경농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 있음.
56	윤영석 이병훈 박준기	2013	농가의 과경화가 소득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 효과와 실증분석을 중심 으로	농가 연령별 균형패널을 구축하고, 농가 영농주 연령의 과경화가 농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실증 분석	■ 농가소득은 당기소득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산 및 부채 등 순자산 변동에 유익적으로 반영하므로 농가소득 확대를 통한 효용 증진을 위해 단기 소득정책뿐만 아니라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금융·재정 정책이 중요 ■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수준을 보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소비 증가보다 생산 및 자산 확대 등으로 이용되며,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소비 감소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부채 상환 부담, 낮은 신용 평가 등으로 자유로운 차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농가가 22~24% ■ 농가영여 적자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가 타 가구보다 커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및 금리 차별화 정책 등은 소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과경가구에 대해서 재정·금융정책보다 소득지원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항목은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지출 목적별 구분으로는 선택재이며, 이들 항목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1991~1999년 기간에 소득계층 간 실질적 소득 격차가 컸으며, 경제위기가 이후 모든 계층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음. 소득 격차는 경제위기 직후에 급격히 확대되다가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소득 10분위 농가는 1994년까지 완만한 소득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후 하락하였고, 1997년 경제위기가
57	이계임 김성웅	2003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 인 분석	농가경제조사 횡단면 자료를 이용 하여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 요인을 검출함으로써 농가의 소비지출 행 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축성을 제시	■ 농가소득은 당기소득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산 및 부채 등 순자산 변동에 유익적으로 반영하므로 농가소득 확대를 통한 효용 증진을 위해 단기 소득정책뿐만 아니라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금융·재정 정책이 중요 ■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수준을 보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소비 증가보다 생산 및 자산 확대 등으로 이용되며,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소비 감소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부채 상환 부담, 낮은 신용 평가 등으로 자유로운 차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농가가 22~24% ■ 농가영여 적자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가 타 가구보다 커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및 금리 차별화 정책 등은 소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과경가구에 대해서 재정·금융정책보다 소득지원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항목은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지출 목적별 구분으로는 선택재이며, 이들 항목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1991~1999년 기간에 소득계층 간 실질적 소득 격차가 컸으며, 경제위기가 이후 모든 계층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음. 소득 격차는 경제위기 직후에 급격히 확대되다가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소득 10분위 농가는 1994년까지 완만한 소득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후 하락하였고, 1997년 경제위기가
58	이병기	2000	한국경제위기 이후 농가 소득불균등 변화와 정책 과제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 농가소득과 계층 간 불균형이 어떻게 변화했으 며, 어떤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	■ 1991~1999년 기간에 소득계층 간 실질적 소득 격차가 컸으며, 경제위기가 이후 모든 계층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음. 소득 격차는 경제위기 직후에 급격히 확대되다가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소득 10분위 농가는 1994년까지 완만한 소득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후 하락하였고, 1997년 경제위기가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기술 시계열적으로 분석	이후 급격히 저하 ■ 가주 연평균이 낮고 학력이 낮은 농가와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가 낮았음.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고령, 규모가 작고, 낮은 학력 농가에서 높은 소득 감소가 나타남. ■ 한국 농가소득 불균등은 연령, 규모, 학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반면, 성별, 지역, 직업은 미미한 요인임. 연령과 규모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규모는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균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
59	이병기	2005	농가소득문제의 성격과 농외소득개발 방향	농업소득만으로 안정된 농가소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농외소득 개발 방향 논의를 시도하고, 구체적인 농촌 공영 개발 방향을 모색	■ 1990년대 들어 농림어업 연평균 성장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 외환위기 이전에도 대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수준이 더 커짐. ■ 1980년대까지는 도농 간 소득이 비슷했으나, 1990년 이후 소득 격차가 커짐 ■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중심임. 일본의 농외소득은 59.2%(2001년 기준)지만, 한국은 32.7% ■ 일본의 농가소득의 상대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크게 쌀 가격 지지와 겸업화를 통한 농업소득 제고의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겸업화 정책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여 1990년대 초에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소득 격차는 해소 ■ 농가소득 안정화, 향상을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이 필요 ■ 농촌 공영 개발 문제는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 현실에 여의치 않지만, 지역 단위로 다양한 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산업복합체 논의나 지역클러스터 논의 등이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 ■ 부존자원과 연계한 구체적인 입지경쟁력을 찾아내는 접근과 입지유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구사하는 정책이 필요함.
60	이은우	2006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격 차요인 분석	영농 형태별로 농가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분석	■ 성별은 영농형태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논벼농가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쌀을수록 채소와 기타 형태의 농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연평이 증가할수록 과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 과수농가를 제외한 모든 영농형태가 과육 수중에 양(+)의 부호를 나타냄. 반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논벼보다 과수를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짐.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채소, 과수, 기타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채소, 과수, 기타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 ■ 논벼, 채소, 기타농가가 경영주가 여성인 경우 소득이 더 높으며, 연평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높아지나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 다시 감소. 농가소득의 경우 학력이 소득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적자 본보다는 실물자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소득합산 추정 결과, 기타 농가의 선택활동변수 시가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내어 논벼, 채소, 과수농 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음을 의미. 채소농가와 논벼농가의 소득 격차는 거의 없으며, 과수농가는 논벼 농가와 채소농가보다 소득 격차가 큼.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64	임소영	2017	농가 소득의 연평별·세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가각주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정의하고 각 코호트의 소득 변화를 추적하여 농가의 연평별 소득 변화를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여 관찰 분석	0.4% 증가하는 반면, 영농경력이 1년 미만은 0.1% 감소 ■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경영주의 연령이 50대 후반일 때 정점에 이르고, 농외소득은 농외소득보다 비교적 이른 연령대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60대 이후 감소 ■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의 세대효과가 나타났지만, 농외소득에서는 뚜렷한 세대효과가 보이지 않음 ■ 공적 이전소득은 부(-)의 세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적 이전소득은 정(+)의 세대효과가 나타남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이 요구됨 ■ 관여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해는 일정치 않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집행 시기가 관여별로 차별적이어야 함을 의미 ■ 전국적으로 1995, 1998, 2001, 2006년에 양극화 현상 존재. 1998년에는 영남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 양극화 현상 존재. 2006년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양극화 존재 ■ 양극화 현상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이며, 다음으로 충청이었다. 경기도와 영남권역은 양극화 현상 발생 횟수가 가장 적었음. 호남은 2000년대 이전에 양극화 현상이 집중되었고, 재주는 2002년 이후에, 영남은 2004년 이후에 양극화 현상 지속. 2004년 이후에는 경기, 호남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매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 농가소득의 양극화와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서로 동조하며 특히 경기, 충청은 상관성이 매우 큼. 강원, 호남, 재주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상관성이 낮고, 호남은 농외소득 양극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강원과 재주는 농업소득 양극화 요인이 큼 ■ 논벼는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들이 하락하고, 양념채소는 기상조건에 의해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확대 ■ 논벼는 경영비 변동의 영향이 다른 품목보다 현격히 크고, 가격 변동 영향 정도는 마늘, 고추, 논벼, 양파 순으로 나타남. ■ 논벼농가의 경우, 경영규모가 클수록 가격 변동이 농업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만, 경영비 변동의 영향은 감소 ■ 가격 변동 영향이 큰 조미채소는 수급안정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논벼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
65	전장수 김정호	2008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의 관여별 분석	농가소득 양극화의 변화가 관여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	■ 논벼는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들이 하락하고, 양념채소는 기상조건에 의해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확대 ■ 논벼는 경영비 변동의 영향이 다른 품목보다 현격히 크고, 가격 변동 영향 정도는 마늘, 고추, 논벼, 양파 순으로 나타남. ■ 논벼농가의 경우, 경영규모가 클수록 가격 변동이 농업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만, 경영비 변동의 영향은 감소 ■ 가격 변동 영향이 큰 조미채소는 수급안정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논벼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
66	전지연 유찬희 박준기	2016	논벼 양념채소 농가의 농업소득 변동 요인분석	개별 품목 생산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논벼와 고추,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품목별 소득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미시적으로 분석	■ 논벼는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들이 하락하고, 양념채소는 기상조건에 의해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확대 ■ 논벼는 경영비 변동의 영향이 다른 품목보다 현격히 크고, 가격 변동 영향 정도는 마늘, 고추, 논벼, 양파 순으로 나타남. ■ 논벼농가의 경우, 경영규모가 클수록 가격 변동이 농업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만, 경영비 변동의 영향은 감소 ■ 가격 변동 영향이 큰 조미채소는 수급안정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논벼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
67	정신화 강혜정	2015	한국 농가의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농가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을 실증 분석하고, 소비계층별로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 특성을 분석	■ 모든 소비계층에서 농가소득원 중 농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지출 증대에 따른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외소득 증대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저소비계층일수록 농외소득보다 농외소득에 대해 더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여 농외소득 증대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비집체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해 더 필요 ■ 하위 10% 소비계층에서 농외소득보다 이전소득에 더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소비빈곤계층(영세 고용층)을 위한 이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안정화 정책도 필요

번호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 농업소득의 낮은 한계소비성향은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다른 소득원보다 크다는 점으로 설명되어 전업농가는 때에 따라 장기적인 소비침체에 처할 수 있음. ■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IMF 이후인 1998년에는 1985년의 8.4배, 1996년의 1.5배에 달하는 규모까지 크게 증가 ■ 농업자본수익률은 농업자본 평균금리보다 낮으며, 대농일수록 농업자본수익률이 낮음. 부채/농가 경제인여 비율은 1988년 160.4%에서 1998년 485.2%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8년 5ha 이상의 대농이 31.9%로 낮지만, 0.5ha 미만의 농가는 763.6%로 높음. 시대별로는 신간지역보다 도시군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채/유통자산 비율은 매년 낮아져 단기지급능력이 향상되었으나, IMF 이후에는 73.7%까지 급격히 상승. 대농이 중소농보다 단기지급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시대별로 평야, 중간, 산간지역이 75%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도시군교는 59.7%로 도시군교의 농가들이 현금자금을 더 생산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부채/자기자산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대농의 경우 농업투자가 많아 가장 높게 나타남. 부채/자기자산 비율은 산간으로 갈수록 높으며, 화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익성 지표는 대농일수록 좋지만, 지불능력은 떨어짐. 도시군교 지역은 지불능력이 우수함데, 도시군교의 자작지 땅기역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지면적, 농업소득, 이자율, 산출물 및 투입물 가격이 농가 부채 상황에 유의한 영향을 줌. ■ 소규모 농가와 중규모 농가의 부채 상황 행태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나, 중규모와 대규모 농가의 행태는 구조적으로 유사함. 소규모와 대규모 농가 사이에도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음. ■ 소규모 농가는 경지면적 확대와 농업소득 증대 정책이, 중대 규모 농가는 경영면적 확대 정책이 부채 상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자 비중은 10년간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고령 농가일수록 미국농가 비중이 높고 경지면적은 영세 ■ 경영주 연령별 소득 차가 확대. 고령농일수록 농업소득과 농업총수입이 낮는데 경지면적당 수익성 차이가 커 ■ 농업소득 양극화는 40대와 70대 이상의 가구에서 가장 심하며, 40대는 주로 농업소득 양극화에서, 70대 이상은 농업소득 양극화에 기인 ■ 2003-2009년 기간 농가소득 양극화는 심화. 2003-2006년 기간에는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006년 이후 심화 ■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이나 이진소득보다 양극화 정도가 심하며 속도 또한 빠름. 농업소득은 2007년을 정점으로 양극화 추세가 완화 ■ 2003-2006년까지는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가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68	정안성 오재균	2000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에 관한 연구	농가 부채 현황과 농가 부채 상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연도별, 경지구도별, 시대별, 영농 형태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하여 농가 부채 상환을 제고방안 제시	
69	정안성 이종렬 오재균	2000	한국농가의 부채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농가 부채 상환 행태를 경지구도별 로 분석하여 규모별로 어떠한 요인 들이 상환 행태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	■ 한국농가의 부채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70	정진화 노재선 조현정	2013	한국농가의 고령화와 농 가소득에의 영향	한국 농가의 고령화 현상을 진단하 고 고령화와 농가소득 간의 연관관 계 분석	
71	정진화 조현정	2012	농가소득의 양극화: 경영 주 연령 및 소득원별 비교	양극화 지수의 계속과 요인 분석을 통해 농가소득 양극화의 최근 추이 를 살펴보고 경영주 연령 및 소득 원별 기여도 분석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농업소득 양극화가 주요 요인 ■ 40대와 70대 이상의 경영주 가구가 50~60대보다 양극화 정도가 심하고, 특히 2006년 이후 심화.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평균 농가소득이 높으면서 그들 내 양극화가 심하지만, 70대 이상의 경우는 평균소득이 가장 낮으면서 그들 내 양극화 심화 ■ 전체 농가소득 양극화는 같은 연령 그룹 내에서의 양극화보다 서로 다른 연령그룹 간의 양극화에 기인 ■ 모든 교육지표에서 내생성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추정편의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학교 교육의 소득 증대 효과가 심각하게 과소추정될 수 있음. ■ 가구의원의 최고 교육수준과 평균 교육수준은 농가소득 총액과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 모두에서 유의한 소득 증대 효과를 보임.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안소득에서 교육의 소득 증대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남. ■ 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적절한 도구변수의 부재로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가구의원의 최고 교육수준이나 평균 교육수준보다 소득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 ■ 농업소득과 농업소득 모두 경영주가 50대 초반이 될 때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 ■ 전체적으로 효율성 값이 0.9 이상인 경우가 많아 분석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 값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영세한 측면이 있음. ■ 규모주의 체중 법인은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비효율적인 농업회사법인들의 경우 현재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출자금,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매출액은 과다 투입되고 있어 과다 투입되는 지원에 대한 조정 필요 ■ 1999~2005년 동안 농가 절대빈곤율은 6.8~10.5%이며, 2001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나, 2003년 까지는 급증, 2004년 다시 급락하는 등 특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음.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임. ■ 모든 연도에 있어 농가빈곤율이 도시근로자 빈곤율보다 높음. ■ 빈곤자와 빈곤농가 소득 간의 빈곤갭은 1999년 6,236억 원에서 2005년 7,245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 예산을 고려할 때 큰 규모는 아님. ■ 2005년 빈곤농가 평균소득은 227만 원으로 평균소득의 7% 수준에 불과하며, 절대빈곤자인 940만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2005년 빈곤농가 소득은 1999년 대비 39% 감소 ■ 빈곤농가의 부채는 2002~2003년을 제외하고 분석 기간 지속해서 증가. 2005년 빈곤농가 부채는 4,409만 원으로 소득의 20배에 이를 ■ 영농형태별로 빈곤농가는 미국농가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채소, 과수, 축산농가 순임. 그러나 빈곤율은 미국과 과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채소와 축산이 높았음. 2003년 이전에는 축산농가의 빈곤 갭이 가장 컸으나, 이후에는 채소가 큰 것으로 높았으며, 모든 연도에서 미국농가가 가장 적은 빈곤 갭을 보임.
72	정진화 조현정	2013	농가 가구의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 교육의 소득 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춰 농가 구성원의 교육 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73	조가옥 송준호 정동현	2015	자료표본분석을 이용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 분석: 농축산물유통업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 중 농축산물 유통을 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 제시	
74	최세현 김배성 이상학	2007	농가 빈곤규모와 빈곤농가의 성격	한국 농가의 빈곤 규모와 동태적 성격을 규명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 빈곤의 지속성 분석 결과, 1999-2002년 그룹의 빈곤농가는 과거의 빈곤경험이 앞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는 빈곤함정에 빠져있으나, 2003-2005년 그룹은 유익성 없음. ■ 1999-2002년의 로렌츠곡선은 거의 일치하였으나, 2002-2005년에는 곡선이 지속해서 상방 이동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이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하위 30%의 자산계층 실질소득 변화는 미미한 반면, 상위 40%의 계층 소득이 빠르게 개선되어 양극화 문제가 보다 심화될 전망 ■ 농가 경영주의 학력이 무학인 농가에 비교해 중졸과 고졸은 농업소득이 높았으나, 최대졸 이상과 초졸은 무학보다 오히려 적음. 농가 경영주가 남성이면 경우 여성 경영주 농가에 비교해 농업소득이 높으며, 전업 농의 농업소득은 겸업농보다 많았음. 도시근교지대와 평야지대 일지 농가의 농업소득은 중간 및 산간지대 보다 많았음. ■ 경영조직 유형별 농업소득의 경우 논벼농가에 비해 해배, 채소, 과수농가의 순서대로 많고, 전작 및 특작은 적었음. 경지규모가 증가할수록 농업소득도 높았음. 축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농업소득이 높으며, 농가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하는 것으로 추정 ■ 농가 경영주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농업소득이 증가함. 특히,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초대졸 이상의 경영주는 농업 생산보다는 농업 이외 부문에서 많은 소득을 얻는 특징이 있음. 농가 경영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 경영주 농가보다 농업소득이 높음. 겸업농의 농업소득이 전업농보다 많음. 농가의 농업소득은 도시근교지대가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보다 많음. ■ 경지규모가 증가할수록 농업소득은 적으며, 축산규모의 증가가 농업소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경영주 나이는 농업소득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도입·운영(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반등록, 2010년부터 상시 관리체제)되고 있으나,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2013년까지 등록제는 주요 농림사업에서 등록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무름. ■ 경영체 DB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필지 수와 과부상 면적정보의 신뢰도는 매우 높고, 경지면적은 총합 개념에서 통계청의 면적조사와 일사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체 DB의 모집단 활용 등 신뢰도 제고방안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DB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오류 감 등) 체계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식 도입, 스마트폰 앱, 축산물 이력제, 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 활용, 농업인 식별코드 부여, 데이터 마트 구축, 지능농정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이 필요 ■ 축산과 화훼는 농산물 판매성과에 주축목이 미치는 영향이 지속해서 컸으며, 채소, 과수, 특용작물은 작목의 소득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전업농가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산물 판매액이 높아지나,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시군이 갈수록 감소. 친환경 농업은 농산물 판매액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작목단,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조직에의 참여
75	최재혁 고석남	2005	한국의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가소득 결정 요인들을 대상으로 이 요인들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	
76	한석호 김수석 채광석 유잔희 남경수 정호연	2016	맞춤형 농장을 위한 농업 경영체 DB 분석 및 활용 연구	맞춤형 농장이 주목됨에 따라 농업 경영체를 농가 특성과 경영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에 프로그래밍하는 데 있어 경영체 DB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경영체 DB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중장기적 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	
77	황영근 신동훈 배균기	2016	농가의 농업경영 전략과 농산물 판매성과 간의 관계분석: 농업총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10년간 농가의 농업 경영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는 농산물 판매액 증대에 크게 기여 컴퓨터 활용도는 농산물 판매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판매처 유형에 따라 판매액의 효과가 다르나, 판매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점 커지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다변화된 출처처 전력이 유리함. 농업 관련 사업의 참여가 농산물 판매액 증대에 기여. 농업경영의 다각화는 농업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영농규모와 주작목은 영향력이 낮아지나, 판매처, 농업 생산자 조직 참여, 농업관련 사업 참여는 농산물 판매액 확대에 미치는 효과가 커져 농업 경영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78	황의식	2004	소득변동 수준에 의한 농가 분포 분석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따른 농가별 소득변동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변동을 유형화하고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 양태별로 농가소득 분포를 도시한 후 분석	■ 외환위기 이후 39.6%에 해당하는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47.8% 감소하는 등 외부 충격이 도래할 경우 소득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관찰됨. ■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소득이 더 불안정한 양태를 보임. ■ 농가소득의 변동성은 농업소득의 변동 양태에 따라 다름.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을 때와 증가하였을 때의 소득 변동 분포에는 차이가 존재함.
79	황의식 김혜정	2006	FTA 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FTA 체결에 의한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품목별 피해와 연계하여 농가 유형별 소득 변동을 영농 형태·규모 및 경영주 연령·교육 수준 등의 농가 특성별로 분석	■ 관세대상으로 상정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심각한 농가 및 농업소득 감소에 직면함. ■ 농업의존도가 높을수록 소득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경영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젊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 비중이 60대 이상의 고령농가보다 더 높게 나타남.
80	황의식 국승웅 김미복 최예준	2016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	지속적 농업 성장을 위해 이제까지 농업 성장의 요인이 무엇이었을 분석하고 향후 성장요인과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농업용 고정자본은 1998년 이후 크게 증가 ■ 소규모농지의 규모화는 작게 이루어졌으나, 임지에 의한 영농규모화는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 고정자본 점유 비중에서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는 2003년 23.6%에서 2015년 41.0%로 증가. 5ha 이상 농가는 같은 기간 11.1%에서 10.0%로 감소 ■ 농업용 고정자본을 경지규모로 환산한 규모가 5ha 이상인 농가의 고정자산 점유 비중은 2003년 14.2%에서 2015년 24.2%로 증가. 1ha 미만인 농가는 같은 기간 33.8%에서 22.4%로 감소. 시설투자를 많이 한 농업용 고정자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점유 비중이 크게 상승
81	황의식 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심화와 요인 분석	IMF 외환 위기로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살펴보고, 유형별 농가 중에서 어떠한 특성의 농가가 많은 소득 감소를 나타냈는지를 분석	■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는 농업소득이 감소,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는 농업소득이 증가. 또한,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음. 농가소득 변동 폭을 안정시키는 것이 소득 증대의 수단 ■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 변동이 큰 농가들이 많았고, 농가소득의 증감률에 의한 농가 분포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임. 농업소득에서는 농가 간 양극화가 진행 ■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이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와의 관계가 더 높고, 소득의 변동 수준이 안정적일수록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82	황의식 문한필	2005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IMF 외환위기 이후 농업 여건 변화에서 파생된 농가소득 변동의 실태를 경영주 연령, 경영규모, 부채 비율,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부채 규모 등의 농가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	가계수지가 적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농가소득 변동에 농업소득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가소득 변동에서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좋지 않았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소득 변동 폭이 큰 농가가 많았음. ■ 부채규모가 적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가 가장 낮았고, 부채규모는 크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는 농가소득이 높았음. ■ 현금흐름이 적자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B-L)가 6.1%, 현금흐름이 적자지만,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B-L)는 19.5%, 가계수지 흑자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B-H)는 61.6%, 현금흐름은 흑자지만,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B-H)는 12.9% ■ 가장 간단한 농가(B-H) 중 22.3%가 연 5% 이상 소득 감소, 28.4%의 농가가 연 10% 이상 소득 증가, B-H농가 중 연 5% 이상 농가소득 감소한 비율이 16.2%로 유형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비율이 33.8%로 유형 중 가장 높았음(부채의 leverage effect). 그러나 B-L농가 중 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경우가 31.5%나 차지하여 부채를 활용하지 못하면 농가 경제가 악화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줌.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으면 농가소득 증대에서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감소할 수도 있음. B-L형태에서 소득 변동 폭이 클수록 농가소득이 낮고 농가 부채가 큰 현상이 뚜렷하며, B-H형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나타난. ■ 농가 부채는 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의 상태 그리고 부채 비율의 정도에 따라 농가소득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흐름이 나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부채규모가 많으면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부채규모도 적고 부채 비율도 낮은 농가(C-L)가 72.5%,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C-H) 농가가 13.6%.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잉여비율이 높고, 부채규모가 클수록 시설투자 확대에 경지규모와 표준농규모의 차이가 큼. 경지규모가 클수록 부채규모도 큼. 부채규모가 크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C-H)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농업소득 의존도도 높음. 부채규모는 적으나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C-L)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38.7%에 불과. 농가 부채규모가 크다는 것이 농가 경제의 위험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 부채가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농가소득 변동 폭이 클수록 농가소득이 더 낮고, 부채는 더 많은 모습을 보임. ■ 농가 부채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극화 추세를 보임. IMF 이후 상환능력이 고액부채 농가를 중심으로 악화 ■ 자산 대비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은 8% 수준으로 큰 문제는 아니나, 1996년 이후 소득 대비 부채
83	황의식 박성재	2000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세로운 접근방향 모색	농가 유형별로 부채 문제의 특성 및 기존 농가 부채 대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농가 부채 대책	

비고	저자	연도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	비율은 크게 상승 ■ 단기지급능력 지표(=농가경제영여+감가상각비-부채원금상환)를 살펴보면, 단기지급능력은 70년대에는 (+)였으나, 80년대 초부터 (-)로 전환되었고, 부채 경감 대책이 취해진 87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96년부터 크게 하락 ■ 농가소득이 적자인 농가 비율이 1997년 1.1%에서 1998년 8.9%로 증가.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한 농가는 25.0%에서 39.4%로 증가. 단기부채상환에 문제가 없던 농가가 64.8%에서 50.1%로 하락 ■ 소매부채농가는 소득보조정책, 고액부채농가는 금융지원이 효과적이며, 농가경영재간제도 도입, 자산 유동성 제고, 연대보증 개선을 위한 담보능력 제고 등을 농가 부채 대책의 방향으로 제시
84	황재희 이성우	2016	농업의 6차 산업화 융복합 유형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정책의 소득 제고 효과 점검	■ 6차 산업 종합형 결합(1×2×3차)보다 단일결합(1×2차, 1×3차)이 소득 제고에 더 긍정적인 개연성 높음. ■ 법인/단체소득, 귀농/귀촌집단일수록 종합형 결합을 선택할 가능성 높고, 과수·화훼작목 재배군에서 종합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교육 수준이 높고 경인면 거주자일수록 단일결합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경영관리 특성(컨설팅 및 정부사업 활용, 해외 판로 확보 등)이 농가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유통 중심형 6차 산업화의 부(-)의 소득 증대 효과는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시사함. 또한 경영(시장), 강원, 제주권(관동) 일대에서 경성, 전라권보다 소득 증대의 가능성이 높음.

주: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은 각 참고문헌의 내용을 요약·발제한 것임.

부 록 2

농가경제조사 항목과 구조(통계청 정의)

전·겸업	전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 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주·부업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 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일 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영농형태	논벼농가	농업총수입 중 미곡수입이 최대인 농가
	과수농가	농업총수입 중 과수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채소농가	농업총수입 중 채소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특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특용작물수입이 최대인 농가
	화훼농가	농업총수입 중 화훼수입이 최대인 농가
	전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총수입 중 축산수입이 최대인 농가
	기타농가	이외 기타 농산물(묘, 벚짖 및 농업부산물, 양잠 등)수입이 최대인 농가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kosis.kr>). 검색일: 2017. 12. 15.

농가 소득 (A+B)	경상소득(A=C+D)		-	
	농가순소득(C=E+F)		-	
	농업소득(E)	농업총수입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써 농가의 해당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	
		농업총수입	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	-
			농업피해보상금	-
			가격보상금 (보험)	농가에서 농업 수입 중 농작물, 대소동물 및 축산물 판매수입을 제외한 농업 관련 수입
			피해보상금	송아지생산안정보험, 농업재해보험 등 농가에서 농업재해 관련 가입한 보험에서 받은 보상금
			변동직불금	논농업 변동직불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사용한 농약병 판매대금, 유기농업을 위해 구입했던 오리, 꿀벌 등 농업용 자재 판매	
		기타	농업 비용 과다지급에 따른 환불금 등	
		농업경영비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써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	
	농외소득(F)	겸업소득	농가가 농업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겸업 수입 등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사업외소득	농가가 사업 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소득과 그외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	
		이전소득(D)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농업보조금	논농업 고정직불금 및 농기계보조,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공적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급여, 기초노령연금
			사적보조금	출타 가족 보조, 친인척 등 보조
	비경상소득(B)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kosis.kr>). 검색일: 2017. 12. 15.

농가 자산	고정자산		농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용역 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토지,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회계 기간 : 1년) 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화(轉化)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산
		토지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토지(경지, 임야, 대지 등)
		건물 및 구축물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농가주택, 헛간, 창고, 퇴비사, 유리온실, 각종 구축물 등의 농업용, 겸업용, 가계용 및 기타 건물 등
		기계 기구	농가가 소유하거나 임차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및 기타용 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심은 과수, 병나무, 관상수 등 일체의 대채형 목본성 대식물과 비농업용 대식물 등
		대동물	한우(송아지, 육성우, 성우), 젓소(송아지, 성우), 돼지(자돈, 성돈), 기타(염소, 말, 노새, 당나귀, 산양, 면양, 타조, 사슴, 꿀벌, 개)는 성축 가격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대동물로 조사하고, 그 외에는 성축 가격이 마리(군) 당 10만 원 이상인 동물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가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영업권, 어업권 등
	유동자산		
	재고자산		당해 회계연도에 생산하여 기간에 대부분 처분이 되는 농산물과 1회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거의 모두 전화(轉化)되는 생산자재(生産資材) 등
		소동물	신란계(성계, 중초 생추), 육계, 및 대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동물(토끼,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오골계 등)
		미처분 농축산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종자용이나 사료용으로 보관 중인 양도 포함)의 연초 및 연말 재고량
		미사용 구입자재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자재(비료, 농약, 종묘, 사료 등) 중 사용하지 않은 것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의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예금,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
		현금	보유 현금
		예금	예금, 계 및 저축성 보험금, 대부금, 주식, 공사채, 투자신탁, 기타 유가증권 등
		미수금 및 선금	미수금: 물품을 팔았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 선금금: 물품을 받지 않고 미리 지급한 금액
농가 부채	종류	차입금	정부, 각종 단체, 지방공공단체, 농협, 은행, 거래처, 개인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	미불금: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향후 지불해야 할 금액 선수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금액
	성질	고정부채	부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유동부채	부채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불금, 선수금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kosis.kr>). 검색일: 2017. 12. 15.

참고문헌

- 강성호·최옥금. 2011.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 가구와 농업 가구 중심으로.” 『농촌경제』. 34(1): 95-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 2005. “농가특징이 농업생산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농가단위의 패널 자료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2(3): 495-507.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강혜정. 2007.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 『농촌경제』. 29(5): 29-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 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35(4): 829-848.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강혜정. 2013. “복합영농의 범위 경제성 및 생산효율성 분석.” 『농촌경제』. 36(4): 73-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 2015. “경제적 위기 농가의 특징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2(2): 217-231.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강혜정·권오상. 2008.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 분석.” 『농업경제연구』. 49(1): 39-60. 한국농업경제학회.
- 강혜정·김형진. 2009. “소득분위별 도농간 소득격차의 원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50(4): 67-86. 한국농업경제학회.
- 고갑석·김윤식. 2016. “지니계수 분해법을 활용한 농가소득의 불평등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3(4): 733-758.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권오상·강혜정. 2008.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적 수렴과 상대적 수렴.” 『농업경제연구』. 49(2): 99-117. 한국농업경제학회.
- 권오상·강혜정. 2013a. “농가소득에 있어 ‘이웃효과’ 추정.” 『농촌경제』. 36(2): 97-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오상·강혜정. 2013b.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54(2): 75-93. 한국농업경제학회.
- 권오상·반경훈·윤지원. 2015. “한국 농업 KLAM자료의 구축과 생산성 변화 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56(3): 69-103.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경덕·김정호·김종선. 2012.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R6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규섭·이성근. 2014.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0(2): 87-102. 한국지역학회.
- 김기환·서병선. 2008. “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가구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연구 : 도시 가구와의 비교.” 『농업경제연구』. 49(3): 97-132.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동신·조덕호·여창환. 2016.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161-185. 한국자치행정학회.
- 김미복·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오내원·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 2004a. “농가소득 불균등도 변화 추이의 경영주연령별·경지규모별 요인 분해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1(4): 568-584.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김성용. 2004b.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45(4): 97-115.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성용·이계임. 2002.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농촌경제』. 25(4): 1-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이계임. 2003. “한국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37(3): 73-82.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김수석. 2007.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30(4): 105-1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a.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P1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b.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D3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c.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지원 체계.” 『농촌경제』. 36(3): 73-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김종선·변아름.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C2013-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김태곤·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W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성·박선영·신동균. 2015. 『소득변동성 측정과 원인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5-21.
- 김재경. 2013.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간 형평성 평가: 직접지불금의 공간적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123-149. 한국정책학회.
- 김재경·김한호. 2011. “농업 R&D투자의 농가소득 불균등 개선효과.” 『농업경제연구』 52(3): 51-78.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정섭·오내원·김경인. 2016. 『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 활동 실태와 과제』. R7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김태곤·박대식·김수석·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C2006-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박영기·강상헌·심은숙·최은아. 2015a.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R26.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이병훈. 2005.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농업총조사 통계의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경제』 28(3): 1-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정영환·최은아. 2015b. 『농업법인조사 개선방안』. R29.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최은아. 2015c.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R7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제안·채종훈. 2009. “농가유형별 소득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2(4): 1641-1658. 한국산업경제학회.
- 김태이·임정빈·안동환. 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41-61.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한호·김재경·김부연·윤성은·한봉희. 20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유형별 농업경영체 특성분석』. 농림수산식품부.
- 김한호·이태호·남대희·우아미·민진경. 201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 유형별 특성 분석 및 DB 구축 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박규동. 2013.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109-144. 한국거버넌스학회.
- 박민선. 2008. “한국농업의 구조변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37(0): 1-28.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 박선영·유종순. 2013. “소득변동성의 추세 및 경기변동 상 변화패턴.” 『노동경제논집』 36(3): 65-96.

- 박성재·황의식. 2003.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KREI 농정연구 속보 200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중훈·황재희·이성우. 2014.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0(4): 193-208. 한국농촌계획학회.
- 박준기·문한필·김용택. 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27(4): 15-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 2017.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신황호·조규대·서종석·김인석. 2013. “농업부문 경영주 고령화와 고용인력수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자료 분석.” 『농업경제연구』 54(4): 149-175. 한국농업경제학회.
- 신황호·조규대·우수곤. 2015. “한국 농업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영농형태별 고용인력 수요분석.”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7(2): 138-148.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안동환. 2004.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45(1): 21-46. 한국농업경제학회.
- 오내원·김수석·정호근·고옥·이명현.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C200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김은순. 2001a.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24(2): 103-1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박준기·정원호·권오상·강혜정. 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 분석』. M1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정기환·최경환·김은순·김태곤. 2001b. 『농가계층별 소득증대 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C2001-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성은·김재경·김한호. 20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확인한 농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양상.” 『농업경영·정책연구』 40(2): 430-45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윤영석·이병훈·박준기. 2013.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효과와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36(3): 33-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성용. 2003.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44(4): 39-58. 한국농업경제학회.
- 이병기. 2000. “한국경제위기 전후 농가소득불균등 변화와 정책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27(2): 25-4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이병기. 2005. “농가소득문제의 성격과 농외소득개발 방향.” 『농업경영·정책연구』 32(2): 45-65.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이성재·이우진. 2017.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57-109.
- 이은우. 2006.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격차요인 분석.” 『농촌경제』 29(1): 49-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은우. 2007. “농촌빈곤의 결정요인과 빈곤층의 특성.” 『농촌경제』 30(4): 87-1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태호. 2008. “농가의 요소생산성과 생산효율성에 대한 미시적 분석: 농가경제 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업경제연구』 49(3): 1-28. 한국농업경제학회.
- 이향미. 2016. “‘고용 인력’ 결정요인 분석: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유통연구』 33(3): 109-133. 한국식품유통학회.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6회』. 421-436. 한국노동연구원.
- 임소영. 2017. “농가 소득의 연령별·세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2017년도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포스트 무역자유화 시대 한국농업의 방향과 전망』. pp. 399-423. 한국농업경제학회.
- 전장수·김정호. 2008.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의 권역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1): 91-12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전지연·유찬희·박준기. 2016. “논벼·양념채소 농가의 농업소득 변동 요인분석.” 『농촌경제』 39(3): 23-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선화·강혜정. 2015. “한국 농가의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6(1): 119-136. 한국농업경제학회.
- 정안성·오재균. 2000a.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0(0): 129-165. 한국농촌사회학회.
- 정안성·이종렬·오재균. 2000b. “한국농가의 부채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농업생명과학연구』 31(0): 97-114.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정진화·노재선·조현정. 2013a. “한국농가의 고령화와 농가소득에의 영향.” 『농업경제연구』 54(2): 55-74. 한국농업경제학회.
- 정진화·조현정. 2012. “농가소득의 양극화: 경영주 연령 및 소득원별 비교.” 『농업경영·정책연구』 39(3): 420-45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정진화·조현정. 2013b.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1): 1-23.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조가옥·송춘호·장동현. 2015.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 분석: 농축산물유통업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 46(1): 1-6.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주상영. 2015.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경제발전연구』 21: 21-76.
- 최세현·김배성·이상학. 2007. “농가 빈곤규모와 빈곤농가의 성격.” 『농업경영·정책연구』 34(4): 722-75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최양부·박성재·오내원.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R0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재혁·고석남. 2005. “한국의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18(3): 1139-1159. 한국산업경제학회.
- 한석호·김수석·채광석·유찬희·남경수·정호연. 201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DB 분석 및 활용 연구』. C2016-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민기. 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4.
- 황영모·신동훈·배균기. 2016. “농가의 농업경영 전략과 농산물 판매성과 간의 관계분석: 농업총조사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6(2): 87-121. 한국농촌사회학회.
- 황의식. 2004. “소득변동 수준에 의한 농가 분포 분석.” 『농촌경제』 27(4): 1-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강혜정. 2006. “FTA 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농촌경제』 29(2): 1-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김미복·국승용·최예준. 2016.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R7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R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문한필. 2005.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농촌경제』 28(4): 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박성재. 2000.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향 모색.” 『농업경제연구』 41(2): 1-23. 한국농업경제학회.
- 황재희·이성우. 2016. “농업의 6차산업화 융복합 유형과 농가 소득 증대효과.” 『농촌경제』 39(4): 1-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kpan, O. D. and E. J. Udoh. 2016. “Comparative Measure of Income Volatility of Farm Households in Uyo.” Akwa Ibom State, Nigeria: GARCH-CV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Research Communication* 4(5): 96-112.
- Bania, N. and L. Leete. 2009. “Monthly household income volatility in the U.S., 1991/92 vs. 2002/03.” *Economics Bulletin* 29(3): 2100-2112.
- Bellù, L.G. and Liberati, P.. 2006. “Policy impacts on inequality: Decomposition of income inequality by subgroup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ASYPol Module, 52.
- Carey, C. and S. H. Shore. 2013. “From the Peaks to the Valleys: Cross-State Evidence on Income Volatility over the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549-562.
- Celik, S., C. Juhn, K. McCue and J. Thompson. 2012. “Recent Trends in Earnings Volatility: Evidence from Survey and Administrative Data.”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2(2): 1-24.
- Chantreuil, F. and A. Trannoy. 1999. “Inequality Decomposition Values: The Trade-off Between Marginality and Consistency.” THEMA Discussion Paper No. 99-24.
- Dagum, C. 1997. “A New Approach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Empirical Economics* 22(4): 515-531.
- Dahl, M., T. DeLeire and J. Schwabish. 2011. “Estimates of Year-to-Year Volatility in Earnings and in Household Incomes from Administrative, Survey, and Matched Data.” *Journal of Human Resources* 46(4): 750-774.
- Dynan, K., D. Elmendorf and D. Sichel. 2007. *The Evolution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Divisions of Research & Statistics and Monetary Affairs. Federal Reserve Board.

- Washington, D.C.
- Dynan, K., D. Elmendorf and D. Sichel. 2012. "The Evolution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2(2): 1-40.
- Dynarski, S. and J. Gruber. 1997. *Can Families Smooth Variable Earning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pp.229-303.
- Esteban, J. M.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Esteban, J. M. and D. Ray. 1999. "Conflict and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87(2): 379-415.
- Gottschalk, P. and R. Moffitt. 1994. "The Growth of Earnings Instability in the U.S. Labor Marke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pp. 217-272.
- Hannagan, A. and J. Morduch. 2015. Income Gains and Month-to-Month Income Volatility: Household evidence from the US Financial Diaries. NYU Wagner Research Paper. No. 2659883.
- Hardy, B. and J. P. Ziliak. 2014. "Decomposing Trends in Income Volatility: the "Wild Ride" at the Top and Bottom." *Economic Inquiry* 52(1): 459-476.
- Hertz, T. 2007. "Changes in the Volatility of Household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 Regional Analysi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s Series. No. 2007-17. American University.
- Jensen, S. T. and S. H. Shore. 2011. "Semiparametric Bayesian Modeling of Income Volatility Heterogeneit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6(496): 1280-1290.
- Jensen, S. T. and S. H. Shore. 2015.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Volatil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3): 811-836.
- Kerm, P. V. 2003. "An Anatomy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 in European Countries." CHER Working Paper. No. 16.
- Key, N., D. Prager and C. Burns. 2017. "Farm Household Income Volatility: An Analysis Using Panel Data From a National Survey." USDA Economic Research Report. No. 226.

- Lerman, R. I. and S. Yitzhaki. 1984. "Effect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S. Income Inequality." *Public Finance Review* 22(4): 403-417.
- Lerman, R. I. and S. Yitzhaki.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151-156.
- Maag, E., H. E. Peters, A. Hannagan, C. Lou and J. Siwicki. 2017. *Income Volatility: New Research Results with Implications for Income Tax Filing and Liabilities*. Tax Policy Center. Urban Institute & Brookings Institution.
- Moffitt, R. and P. Gottschalk. 2011. "Trends in the covariance structure of earnings in the U.S.: 1969 - 1987."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3): 439-459.
- Nunley, J. M. and A. Seals. 2010.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 on Divorce."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9(3): 983-1010.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n, D. and G. Solon. 2008. *Trends in Men's Earnings Volatility: What Does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Show?* NBER WORKING PAPER 1407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hin, D. and G. Solon. 2011. "Trends in Men's Earnings Volatility: What Does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Show?"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8): 973-982.
- UNRISD. 2013. *Inequalitie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 Concept Note*.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USDA. 2013. "Updating the ERS Farm Typology." *ER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o. 110.
- Ziliak, J. P., B. Hardy and C. Bollinger. 2011. "Earnings volatility in America: Evidence from matched CPS." *Labour Economics* 18(6): 742-754.
- 국가주요지표 <www.index.go.kr>. 검색일: 2017. 10. 30.
- 통계청 <www.kosis.kr>. 검색일: 2017. 10. 11.
- 통계청 MDIS <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09. 06.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검색일: 2017. 10. 30.

